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797-10

202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한이철 | 연구 총괄, 점검·평가팀 운영
정민주 | 평가 결과 분석
김민석 | 점검·평가단 서면평가 지원
민경찬 | 정책사례 모니터링, 정책군별 평가

연구보고 E20-2023-1
202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차 례

제1장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주요 결과

1.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방법 ····· 1
2.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분석 ····· 6

제2장 시행계획 전략별 점검·평가 및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 13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 23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 31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 42
5.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 51

제3장 결론

1.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요약 ····· 59
2. 삶의 질 4대 전략별 평가 종합 및 개선 방향 ····· 60

[부록1] 2023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평가 결과 요약 ····· 69

[부록2] 세부 과제별 점검·평가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75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113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 141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204

표 차례

제1장

〈표 1-1〉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 5
〈표 1-2〉 점검·평가 제외 과제 목록 ····· 6
〈표 1-3〉 4대 전략 부문별 주요 평가 결과 ····· 8

제2장

〈표 2-1〉 보건·복지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13
〈표 2-2〉 보건·복지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15
〈표 2-3〉 보건·복지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 15
〈표 2-4〉 보건·복지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 16
〈표 2-5〉 보건·복지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 16
〈표 2-6〉 보건·복지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 17
〈표 2-7〉 보건·복지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 17
〈표 2-8〉 교육·문화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23
〈표 2-9〉 교육·문화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24
〈표 2-10〉 교육·문화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 24
〈표 2-11〉 교육·문화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 25
〈표 2-12〉 교육·문화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 25
〈표 2-13〉 교육·문화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 26
〈표 2-14〉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31
〈표 2-15〉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32
〈표 2-16〉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 32
〈표 2-17〉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 33
〈표 2-18〉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 33
〈표 2-19〉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 33
〈표 2-20〉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 34

〈표 2-21〉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 42
〈표 2-2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 43
〈표 2-23〉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 43
〈표 2-24〉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 44
〈표 2-25〉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 45
〈표 2-26〉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 45
〈표 2-27〉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 53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식의 시기별 변천(제1~4차) ····· 3
〈그림 1-2〉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흐름도 ····· 4
〈그림 1-3〉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기초로 한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분포 ····· 12

제2장

〈그림 2-1〉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기대효과 ····· 52

1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주요 결과

1.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요 및 방법

1.1. 시행계획 점검·평가 배경 및 목적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삶의 질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의무, 해당 실행 절차 등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정부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계획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 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같은 해 6월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 제42조).

> ❍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제4차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서 제시된 시행계획 점검·평가 절차의 운영 방안을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방법으로 서면평가와 지역평가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책환류 절차에서는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개선 의견 및 재원 배분 방향이 제시되면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수행하는 지역평가는 지역과 현장 차원에서 수행되는 삶의질 정책 실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절차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정책사례 모니터링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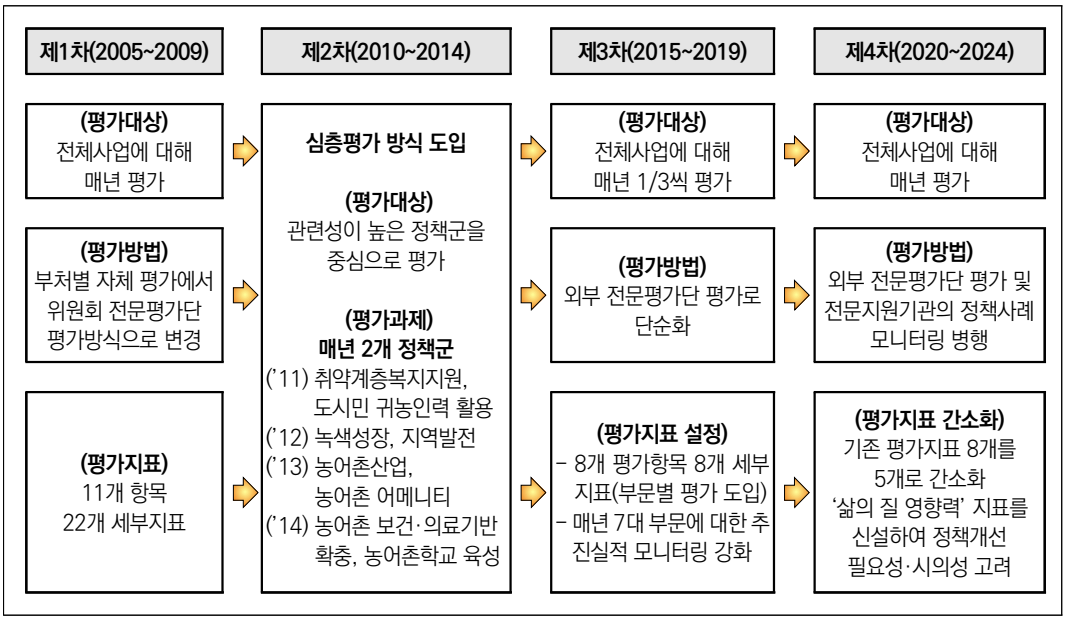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의 4대 전략별 과제 전체 178개 중 164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기종료 과제 8개, 지방이양 과제 5개 및 사업개편이 이루어져 평가가 불가능한 과제 1개 등 14개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 및 자세한 평가절차에 대해서 '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한다.

〈그림 1-1〉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식의 시기별 변천(제1~4차)



1.2.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법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서면평가와 정책사례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 서면평가는 삶의 질 시행계획 대상 과제 전체에 대해 평가지표에서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른 양적 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별도 정책별로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 **(서면평가)** 서면평가에서는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이 과제별 그룹평가를 실시하였다.

- 점검·평가단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던 분야별 교수와 연구자,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추천위원 중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45명을 위촉하였으며, 삶의 질 4대 전략 부문별로 분과(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를 구성하였다.

-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실적에 대해, 한 과제당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였고, 과제별로 평균 점수를 도출하였다.

  * 평가위원별로 전문분야를 고려해 평가과제를 배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별 평가위원은 비공개하였다.

- 서면평가에 의한 과제별 평가 결과는 정책 수행도(100점 만점)와 삶의 질 영향력(1~5등급)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정책 수행도는 부처에서 제출한 전년도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정책 실행 수준을 평가한다.
  * 삶의 질 영향력은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반영 여부,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의 규모·범위 확대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서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각 전략 부문의 정책군별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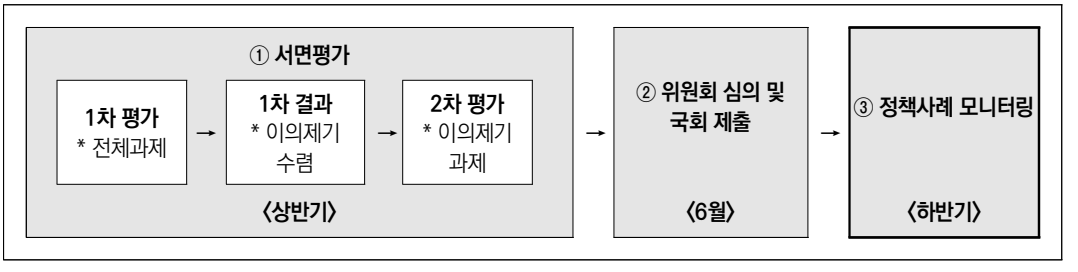
○ **(정책사례 모니터링)**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앞서 실시한 서면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다.

- 서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가 미흡한 과제, 점검·평가단에서 정책 시의성이 높아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서면평가 결과의 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인 매년 하반기에 진행한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서면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심층연구 및 사전협의 대상 과제 선정에 참고한다.

〈그림 1-2〉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흐름도



1.3.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지표는 계획·집행, 정책 성과, 정책 환류, 삶의 질 영향력의 4가지 부문으로 총 6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 '계획·집행' 부문은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예산 집행 및 일정 관리'로 구성되며, 평가하는 과제의 사업 목적과 삶의 질 기본계획 간 정합성, 예산의 집행 비율 및 추진 일정 준수 수준이 각 항목의 평가 기준이 된다.
- '정책 성과' 부문은 '사업 실적'과 '사업 효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대비 달성 수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도출한다.
- '정책 환류' 부문은 '정책 개선 노력'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 환류를 통한 제도 개선, 정책 수요 반영, 사업 성과 제고 등의 노력을 평가한다.
- '삶의 질 영향력' 평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미치는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를 5개 등급으로 제시한다.

〈표 1-1〉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수행도	1. 계획·집행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사업 목적 및 삶의 질 기본계획 간 정합성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실행방식·추진체계 구축 수준	20점 (기본 12점)
		1-2. 예산 집행 및 일정 관리	예산 계획 대비 집행 수준 사업 일정 준수 정도	20점 (기본 12점)
	2. 정책 성과	2-1. 사업 실적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수준 사업 성과지표 설정 정도	30점 (기본 20점)
		2-2. 사업 효과	삶의 질 개선 효과 창출 정도 정책 효과 검증 객관성 정책 우수사례 도출	20점 (기본 10점)
	3. 정책 환류	3. 정책 개선 노력	제도 개선 노력 정책 수요자 의견 반영 및 참여 수준 사업 범위·규모 확대 노력 정책 홍보 노력	10점 (기본 6점)
	점수 총계			100점 (기본 60점)
삶의 질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필수서비스 전달 관련성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개선 사업실행방식 개선을 통한 효과 제고 가능성	5점 척도

2.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분석

2.1.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주요 결과

2.1.1.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주요 특성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178개 시행계획 과제 중에서, 아래 〈표 1-2〉에 제시된 과제를 제외하고 164개 과제에 대해 수행하였다.

- 기종료사업 8개, 지방이양 추진으로 예산 집행과 추진실적 평가가 불가능한 5개, 사업 내용 개편으로 예산 집행 및 추진실적 평가가 불가능한 사업 1개 등 14개 사업이 2023년 점검·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1-2〉 점검·평가 제외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사유
1-2-1-1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기종료 사업으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
2-1-2-1	미래형 학교환경구축(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2-1-2-2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교실 구축 지원	
2-1-2-8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2-4-1-3	문화이모작 (문화공동체 촉진인력 양성)	
3-1-1-6	내항 여객선 승선관리 시스템 고도화	
4-1-1-2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4-3-1-1	농업법인 취업 지원	
2-3-1-1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방이양으로 예산 집행 및 추진실적 평가 불가
2-3-1-2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3-1-2-1	위험도로 구조 개선	
3-4-3-6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4-2-1-5	음식관광 활성화(음식관광상품 개발 보급)	사업 개편으로 추진실적 측정 불가

❍ **(지표별 점수)**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세부 과제별 정책 수행도의 평균 점수는 90.0점(최고 99.3, 최저 74.7),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은 평균 4.0등급(최고 5.0, 최저 1.7)으로 평가되었다.

❍ **(정책 수행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의 정책 수행도 평균 점수는 90.3점으로, 전년도보다 0.3점 상승하였다.

* 정책 수행도 평균(100점 만점): ('20) 90.3점 → ('21) 89.3 → ('22) 90.0 → ('23) 90.3

❍ **(삶의 질 영향력)**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세부 과제의 삶의 질 영향력은 평균 4.0등급으로 전년인 2022년에 비해 0.1등급 하락하였다.

* 삶의 질 영향력 등급(5등급): ('20) 4.3등급 → ('21) 4.0 → ('22) 4.1 → ('23) 4.0

2.1.2. 삶의 질 4대 전략 부문별 주요 평가 결과

❍ 보건·복지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전략에 해당) 과제들의 정책 수행도 점수는 평균 90.8점, 삶의 질 영향력은 평균 4.3등급으로 타 부문 대비 성과가 양호했다.

- 보건·복지 전략 38개 과제 중 우수 과제는 10개였으며, 개선필요과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 교육·문화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전략) 과제들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0.0점, 삶의 질 영향력은 평균 4.0등급이었다.

- 교육·문화 전략 28개 과제 중 우수 과제 4개, 개선필요과제는 1개 도출되었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전략)의 과제는 정책 수행도 평균 89.6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3.9등급으로 타 부문 대비 성과가 저조했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 63개 과제 중 우수과제는 7개, 개선필요과제는 1개로 도출되었다.

❍ 경제·일자리 전략 부문(제4차 기본계획 중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전략) 과제들은 정책 수행도 평균이 91.3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4.1등급으로 전체적으로 성과가 양호했다.

- 경제·일자리 부문 35개 과제 중 우수과제 12개, 개선필요과제 2개가 도출되었다.

〈표 1-3〉 4대 전략 부문별 주요 평가 결과

4대 전략 부문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평균 점수(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등급(등급)
보건·복지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38	90.8	4.3
교육·문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28	90.0	4.0
정주생활기반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63	89.6	3.9
경제·일자리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35	91.3	4.1
삶의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164	90.3	4.0

주 1) 정책 수행도 점수: 100점 만점
2) 삶의 질 영향력 등급: 5등급 척도 기준.

2.2.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과제의 분포 특성 및 유형화

❑ 시행계획 점검·평가 과제별 특성 분포 및 유형화 방법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도출된 과제별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의 점수 분포를 파악하여 과제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 전체의 상대적 분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수행도 점수와 영향력 등급을 z점수(z-score)로 표준화하였다.

- z점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과제는 점수 분포상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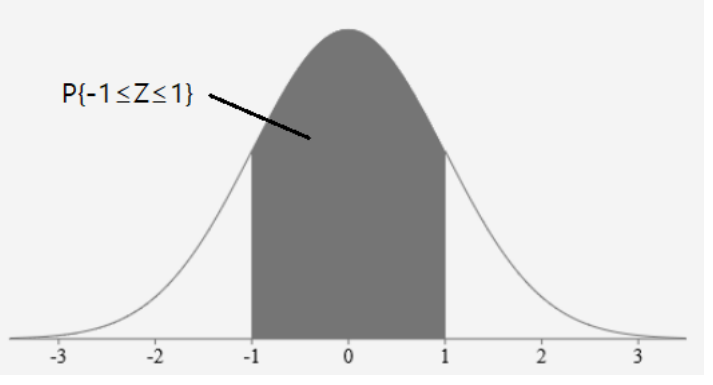
  * 전체 과제의 z점수 분포 중에서 z점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과제들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평균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표준화(z-score)를 통한 과제별 유형화 방법〉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164개 과제의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과제를 우선 분류해 낸 다음, 과제별 특성이 보다 명확한 과제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 과제별 분포 특성은 '삶의 질 영향력' 및 '정책 수행도'의 z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점검·평가의 두 가지 지표인 '삶의 질 영향력' 및 '정책 수행도'의 점수가 평균에 가까운 경우, 다시 말해 z점수의 절대값이 1 미만일 때 과제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과제로 간주한다.
- 평가 지표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z점수(z-score) 기준으로 과제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확률($P\{-1 \le Z \le 1\}$)은 0.683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도와 영향력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두 평가지표가 모두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확률은 0.466이다.

〈표준정규분표의 확률밀도곡선과 표준편차 절대값 1이하의 확률〉



- 2023년 시행계획 164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는 94개, '특성이 명확한 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70개였다.
- '특성이 명확한 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수행도 및 영향력을 기준으로 '성과 확산형', '중점 개선형', '장기 개선형 ', '지속 유지형'으로, '특성이 불명확한 과제'는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성과 확산형

❍ 성과 확산형은 z점수 기준으로,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0보다 큰 과제 가운데,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0부터 1 사이에 있는 정기적 관찰형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2023년도 점검·평가 결과, 전체 164개 과제 중에서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28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은 96.6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8등급이다.

- 성과 확산형은 과제별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해당 정책 과제를 이슈화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정책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성과 확산형은 삶의 질 정책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책의 성과 또한 우수하다고 평가된 과제들이다.
- 성과 확산형에 포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과 취지가 설정된 과정, 타 정책 운영 사례와 구별된 사업 수행 방식, 정책 추진의 혁신 과정,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달방식과 추진조직 등 정책 성과가 우수하게 평가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정책 사례에서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속 유지형

❍ 지속 유지형은 z점수 기준으로, 삶의 질 영향력은 0 미만이고 정책 수행도는 0 초과인 과제 가운데 삶의 질 영향력이 -1 초과, 정책 수행도는 1 미만인 정기적 관찰형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지속 유지형 과제는 총 5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97.5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3.9등급으로 분석된다.
- 지속 유지형은 삶의 질 영향력은 낮으나, 수행도 점수가 높은 유형으로 정책 성과 달성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농어촌의 불리한 삶의 질 특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속 유지형의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정책 성과는 우수한 유형이다. 따라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삶의 질 정책의 대상 과제로서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책 취지를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중점 개선형

❍ 중점 개선형은 z점수 기준으로, 삶의 질 영향력은 0 초과, 정책 수행도는 0 미만인 과제 가운데, 삶의 질 영향력이 1 미만, 정책 수행도는 -1 초과인 정기적 관찰형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총 10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84.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4.7등급으로 분석된다.
- 중점 개선형은 삶의 질 영향력은 높으나 수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유형으로서, 정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삶의 질 정책 전반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 중점 개선형에 포함된 과제들은 소관 부처가 미진한 사업 성과를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과제들이 정책 목표와 취지에 대응하여 정책수단이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정책 예산 등의 자원 투여 대비 실적 달성 여부,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정책전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장기 개선형

❍ 장기 개선형은 z점수 기준으로,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가 모두 0보다 작은 과제 가운데,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가 모두 -1부터 0 사이에 있는 정기적 관찰형 과제를 제외한 과제들로 구성된다.

- 장기 개선형 과제는 총 27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84.0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3.0등급으로 분석된다.
- 장기 개선형은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 점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된 유형에 해당하여, 과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관 부처가 정책 운영 취지와 목적, 정책 실행수단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 장기 개선형의 과제들은 유형 특성상 해당 사업의 목적이 삶의 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정책 운영의 목적과 내용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조정하거나, 삶의 질 시행계획 대상 과제에 계속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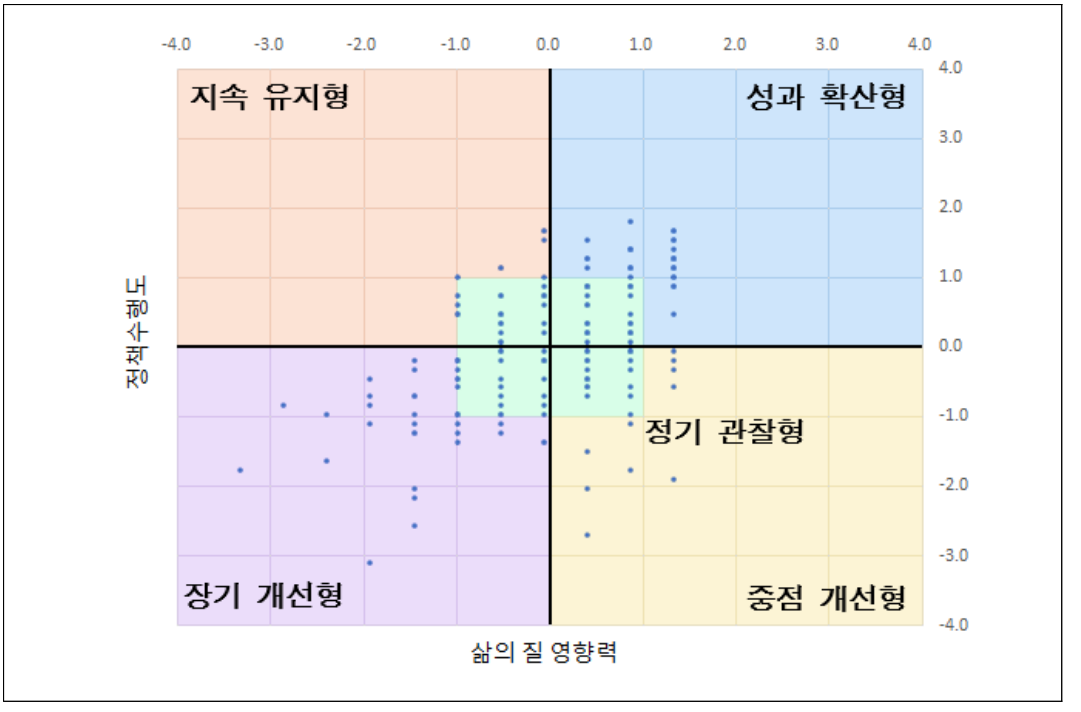
- 향후, 점검·평가를 통해 지적된 수정 사항이 정책 소관 부처가 해당 사업의 목표 수정, 성과 달성 수준 등의 개선에 반영되도록 부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정기적 관찰형

❍ 정기적 관찰형의 과제들은 z점수 기준 삶의 질 영향력과 정책 수행도의 절대값이 모두 1 미만인 과제에 해당한다.

- 정기적 관찰형 과제는 총 94개로,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 90.5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 4.1등급으로 분석된다.
- 정기적 관찰형은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취지 및 성과 개선을 추진해야 할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1-3〉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기초로 한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분포



2 시행계획 전략별 점검·평가 및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1.1. 평가 결과 개요

❍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0.8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3등급이다.

- 총 38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10개였으며, 지속 유지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1개였다. 장기 개선형과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각각 5개, 4개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표 2-1〉 보건·복지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10	96.4	4.8
지속 유지형	1	96.0	3.7
장기 개선형	5	84.4	3.1
중점 개선형	4	83.7	4.8
정기적 관찰형	18	90.8	4.2
보건·복지전략 전체	38	90.8	4.3

❍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과제들은 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 분석을 통한 내실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사업은 전년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농번기 아이돌봄방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았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보험 가입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과거 3개년의 사업 추진 내역을 분석하여 어작업과 근골격계질환의 관련성을 도출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우수사례 〉

❍ 은암 어린이집(전남 신안군)
- 돌봄기간 : 6개월
- 돌봄방 참여아동 : 16명
- 지원액 : 2,966만원(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 아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돌봄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식사 등을 제공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현장인터뷰 :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경우 주말 보호자 없이 집에서 방임되는 경우(핸드폰, 컴퓨터 게임 등)가 많은데, 돌봄방 이용을 통해 식사해결, 건강한 생활(신체놀이, 활동 등)을 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 일부 사업은 추진체계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개선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복지부)’ 사업은 사업 대상지 수 대비 예산 규모가 작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원방식 또는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사업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연구개발의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후속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2-2〉 보건·복지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과제 수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11	89.3	4.5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2	92.0	4.7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6	90.1	4.4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9	91.8	4.0

1.2. 보건·복지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1.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는 10개 과제가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다.

〈표 2-3〉 보건·복지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92.7	5.0	
1-1-2-6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98.7	5.0	삶의 질 우수 과제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96.0	4.7	삶의 질 우수 과제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아이돌봄센터)	96.0	5.0	삶의 질 우수 과제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98.7	5.0	삶의 질 우수 과제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4.7	5.0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6.0	5.0	삶의 질 우수 과제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8.0	4.3	삶의 질 우수 과제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96.0	4.3	삶의 질 우수 과제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97.3	4.7	삶의 질 우수 과제

1.2.2.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 과제는 정책 수행도가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이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 1개가 이에 해당하였다.

〈표 2-4〉 보건·복지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96.0	3.7	삶의 질 우수 과제

1.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에는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 5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5〉 보건·복지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83.3	4.0	
1-3-2-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3.3	3.3	
1-4-2-5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84.7	3.3	
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81.3	1.7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89.3	3.0	

1.2.4.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에는 정책 수행도는 낮고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되었으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는 4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6〉 보건·복지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80.7	5.0	
1-3-2-1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82.7	4.3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90.0	5.0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여성경영주 등록확대)	81.3	4.7	

1.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해당하며,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는 18개 과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2-7〉 보건·복지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8.0	4.3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94.0	4.3	
1-1-2-3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분만취약지 해소)	85.3	4.7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88.0	4.3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85.3	3.3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90.0	4.7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90.0	4.7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94.0	4.7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8.0	4.3	
1-3-2-3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92.0	4.7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1-4-1-4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94.7	4.0	
1-4-2-3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89.3	3.3	
1-4-2-6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91.3	4.3	
1-4-2-8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안전망 구축	94.0	4.0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4.7	4.7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95.3	3.3	삶의 질 우수 과제
1-4-3-4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88.7	4.7	
1-4-3-6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92.0	3.7	

1.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1.3.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성과)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응급의료를 포함한 의료 인프라 구축은 농어촌 지역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해당 정책군의 사업들은 농어촌 주민의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주민의 체계적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은 119 구급대 신규 배치에 이어 노후 구급차 교체 등 연속성을 갖추어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농어촌 지역 또는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로 삶의 질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어촌지역의 고령어업인을 위해 의료진 방문을 통한 건강검진, 질환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업인의 작업성 질환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현실을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검진을 도입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영농활동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

❍ (개선 필요사항)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 감소 등 사업 축소로 인한 우려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의 예산 지원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은 전년도 집행액보다 사업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확대 계획이 있으며, 2024년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하여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은 113개 취약지 지원에 232억 원의 예산을,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사업은 54개소 분만 취약지 지원에 2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각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1개소당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
-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 후속 연계 사업을 통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데,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이 개발되어 계속될 필요가 있다.

1.3.2.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 (성과)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

- 사고·질병 농가 및 고령·취약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영농·가사 활동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인력지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여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지역서비스공동체에서 직업 훈련 및 교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뚜렷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활동을 매개로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대상의 돌봄,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 (개선 필요사항) 부분적인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로 인한 농어촌 지역 사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 기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사업 내용 중 일부 폐지로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농어촌 지역 취약가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의 한 축인 행복도우미 사업이 2024년부터 폐지되어 취약가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농어촌 지역 사회서비스 인프라 한계의 문제를 고려할 때 개별 대상의 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의 방식으로 사업 방향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이 구축되어 사회적 농업의 실천 의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기획, 우수 사업 모델의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하다.

1.3.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성과) 보육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여러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부모의 보육·육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였다.

- 부족한 보육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수행되었다.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어린이집 확충을 이끌어냄으로써 정책 성과가 인정된다.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에 관한 이동 접근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이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었다.
-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보육 여건 만족도를 증진하였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농어촌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학부모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농업인의 유동적인 특수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

❍ (개선 필요사항)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 일부 사업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보육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세부적인 사업 설계,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사업의 추진내용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수립 시 신설, 매입, 임차 계획 등 현장의 특징을 파악한 정교한 예산 투입과 목표치 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에서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센터 개소 수는 실제 보육 수요 충족 정도를 파악하기에 미흡하고 예산 등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나 사업 수행자에 대한 간담회 등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내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1.3.4.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 (성과) 의료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정책군으로서 기존의 사업 내용을 개선하여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 보험사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농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금액,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자체와 관계기관,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도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따른 비용 보전,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노령연금 수급액 증가 등 긍정적인 사업 효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재해예방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기존 제도의 개선 노력이 확인된다.
- 기존 사업을 내실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보장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충실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
  *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사업은 농작업 시 재해 위험성 및 예방 노력의 중요성을 농업인에게 전달하고, 실천적 예방 대책 도출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실행 노력이 기울여졌다.

*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선 건조, 안전 장비, 안전 조업 교육, 점검·단속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어선의 전주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성과가 나타난다.
*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인 일·생활 균형 교육 프로그램, 농촌 노인의 자기돌봄 프로그램, 여성농업인 역량 측정 지표 등 콘텐츠 개발의 구체적 실적이 도출되었고, 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공유가 이루어졌다.

❍ (개선 필요사항)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일부 사업은 더 많은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부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 성과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사업은 작목별 안전사고 발생사례 등을 기초로 취약 농작업 위험 요소 개선 우선 순위 등을 도출하고, 관련 예방사업을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여성경영주 등록 확대)’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산전 검사 시기에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의료기관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2.1. 평가 결과 개요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0.0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0등급이다.

- 총 28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4개로, 부문 내에서 14.3%를 차지했다. 지속 유지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없었으며, 장기 개선형 과제는 7개, 중점 개선형은 1개, 장기적 관찰형 16개이다.

❍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과제는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농어촌 학교통학 여건 개선 등으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사업은 전체 참여학교의 약 40%가 군 단위 이하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
-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사업은 농어촌학교 희망 포럼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표 2-8〉 교육·문화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4	95.8	5.0
지속 유지형	-	-	-
장기 개선형	7	83.4	3.0
중점 개선형	1	89.3	5.0
정기적 관찰형	16	91.4	4.0
교육·문화전략 전체	28	90.0	4.0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은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해당 사업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교육참여 인원수 달성 정도가 부족하고 문화취약지역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표 2-9〉 교육·문화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과제 수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13	90.8	4.3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5	92.8	4.0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5	87.3	3.5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5	87.6	3.5

2.2. 교육·문화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2.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이다. 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4개이다.

〈표 2-10〉 교육·문화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96.0	5.0	삶의 질 우수 과제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95.3	5.0	삶의 질 우수 과제
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96.7	5.0	삶의 질 우수 과제
2-2-1-1	농어촌성인문해교육 활성화방안	95.3	5.0	삶의 질 우수 과제

2.2.2.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에는 정책 수행도는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가 포함된다.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과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2.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아 향후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써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7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11〉 교육·문화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2-1-1-2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83.3	4.0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84.0	3.0	
2-2-1-2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88.0	2.7	
2-3-2-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85.3	3.0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77.3	3.0	개선 필요 과제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84.0	3.3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82.0	2.3	

2.2.4.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이며,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 1개의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12〉 교육·문화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89.3	5.0	

2.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해당하며, 교육·문화 전략 부문에서는 16개 과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2-13〉 교육·문화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2-1-1-3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88.0	3.3	
2-1-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93.3	4.3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9.3	4.3	
2-1-2-4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92.7	3.7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2.0	4.7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94.7	4.3	
2-1-2-9	농촌유학 지원	86.0	3.7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93.3	4.3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94.7	4.3	
2-2-2-3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확대	92.7	3.7	
2-3-1-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92.7	3.3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94.7	4.3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86.7	4.0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87.3	3.7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4.0	4.0	
2-4-2-3	농촌축제 지원	90.7	4.3	

2.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2.3.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성과)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통학버스 운영 확대, 온라인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민의 교육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 격차 보완 수단으로 ‘온라인 진로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진로 체험이 부족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중장년 유입 등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농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청년·중장년 세대의 농촌 유입에 중요한 정책으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지역과 학교 간 연계 활동을 집행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에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사업은 농어촌 지역 교육효과 증대에 역할이 크며, 방과 후 학교와 지역 아동 돌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다.

❍ (개선 필요사항) 일부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에 있어 꾸준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학급 운영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문화적 동화의 성과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각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학교시설 안전 강화' 사업은 시설물 안전 점검만으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농어촌 학교에 적합한 정책관리체계 및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 '농촌유학 지원' 사업은 농촌교육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사업이지만 사업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사업 목표 달성도는 양호하지만,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행 방식 및 추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사업은 재정의 투입-산출 형식의 정책 프로그램 유형이 아닌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농어촌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농어촌학교의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은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 및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농어촌 고등학교 개선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학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삶의 질 영향력이 높지만, 해당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단순한 학자금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은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및 후계 인력 양성이라는 두가지 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사업은 정책효과 지표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장학금 수혜 학생이 농수산업 후계인력으로 양성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삶의 질과 연관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2.3.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성과) 전반적으로 달성도가 우수하며, 수혜자의 특성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대응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를 통해 농어촌 평생교육을 강화하였다.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하였다.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수혜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농어촌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개선 필요사항)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지만, 운영 및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정책 수행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대, 성과 및 평가지표 점검이 필요하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현 성과지표인 프로그램 이수율이 전국 단위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인력들을 육성하는 등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은 교육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지만, 예산 및 전문강사 확대를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와 함께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 2024년도에 폐지되는 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지속 추진 또는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노인문해 교육(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서 농어촌 지역에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평가됐다.

2.3.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성과) 관련 사업들이 적절히 선정되었으며,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 실질적인 수혜층 확대 등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통해 문화적 접근성을 증가시켰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은 지역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및 지역 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사업은 카드 발급자 1인당 사용 가능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외의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개선 필요사항) 사업의 중요성은 명확하나 농어촌 중심의 추진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 성과 개선을 위해 관련 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취약지역 발굴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사업은 목표치 100개 가운데 도시 운영 도서관이 54개가 포함되는 등 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에 농어촌 지역 사업 수혜 비율을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농어촌 관련 성과가 개선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은 대부분 농촌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업량(수혜지역, 수혜주민 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접근성이 낮기에 실제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은 총 예산이 늘어나고, 건당 지원 금액도 증액되었지만,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이 부족하기에 문화취약지역 중심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2.3.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성과)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잘 부합하며, 농촌 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하였다.

- 농촌다움, 주민공동체 육성, 생활인구 유입 등 효과가 큰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기여하는 가치가 높다.
  *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며, 농촌다움 보전·생활인구 유입 등 효과가 큰 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삶의 질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이지만, 세부 추진 방식과 성과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체계적인 세부 계획과 질적 성과를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방이양 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질적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책 개선의 노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 확대나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 및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적합한 실행체계를 갖추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농촌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은 구축된 DB자원을 이용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3.1. 평가 결과 개요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6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9등급으로 타 전략 부문 대비 정책 수행도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총 63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3개였다. 지속 유지형 과제가 2개이며, 장기 개선형 과제는 9개, 중점 개선형 과제가 5개,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44개였다.

〈표 2-14〉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3	96.7	4.8
지속 유지형	2	97.0	3.8
장기 개선형	9	85.6	2.8
중점 개선형	5	83.5	4.7
정기적 관찰형	44	90.3	4.0
정주생활기반 전략 전체	63	89.6	3.9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과제 중에서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취약 지역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인프라 지원사업들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사업은 ICT 활용 악취 관리, 지역 단위 민·관 협력을 통한 축산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은 사업 부진 지구에 대한 현장점검, 신규 지구 관계자·주민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등 정책 환류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도서 지역 생활필수 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전국 127개 섬 지역의 약 5만 세대가 연료비 인하 수혜를 받아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 정책 추진 실적 평가가 미진한 과제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와 성과목표치의 개선, 우수과제 발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경우 초고령 어업인의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해 직불금 신청 및 집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15〉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과제 수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12	90.2	4.0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11	90.5	4.5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17	89.4	4.0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23	89.0	3.5

3.2. 정주생활기반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3.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3개이다.

〈표 2-16〉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96.7	5.0	삶의질우수과제
3-2-2-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96.7	5.0	삶의질우수과제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2) (연안어장 환경개선)	96.7	4.3	삶의질우수과제

3.2.2.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에는 정책 수행도가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는 2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17〉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96.0	3.7	삶의질우수과제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98.0	4.0	삶의질우수과제

3.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 9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18〉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84.0	3.0	
3-4-1-2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86.0	2.7	
3-4-3-2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86.0	2.0	
3-4-3-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5.3	2.3	
3-4-3-7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84.7	2.7	
3-4-3-10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84.7	3.7	
3-4-4-4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①	84.7	3.0	
3-4-4-5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②	88.7	3.0	
3-4-4-6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86.7	2.7	

3.2.4.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되었으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 5개 사업이 해당하였다.

〈표 2-19〉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중점 개선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3-1-1-7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87.3	5.0	
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80.0	4.3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 복지주택)	84.7	4.7	
3-4-4-1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88.7	5.0	
3-4-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6.7	4.3	개선필요과제

3.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해당하며,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에서는 44개 과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2-20〉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4.7	4.7	
3-1-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90.7	4.7	
3-1-1-3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92.0	4.3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90.0	4.7	
3-1-1-5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	85.3	3.3	
3-1-2-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88.7	3.3	
3-1-2-3	교통안전 활동	88.0	3.3	
3-1-2-4	연안여객선 현대화	88.0	3.7	
3-1-2-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87.3	3.3	
3-1-2-6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94.0	3.7	
3-2-1-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95.3	4.7	삶의 질 우수과제
3-2-1-3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86.7	4.7	
3-2-1-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91.3	4.7	
3-2-1-5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90.0	4.3	
3-2-2-2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86.7	4.3	
3-2-2-3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88.0	4.0	
3-2-2-4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4.7	4.7	
3-2-3-1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90.0	4.3	
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92.7	4.7	
3-3-1-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7.3	4.3	
3-3-1-3	어촌뉴딜300	85.3	3.7	
3-3-1-4	정주환경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86.7	3.7	
3-3-2-1	수리시설 안전관리 ①	90.0	3.7	
3-3-2-2	수리시설 안전관리 ②	90.7	3.7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3-3-2-3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94.7	4.3	
3-3-2-4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	92.0	4.3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89.3	4.0	
3-3-2-6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89.3	4.0	
3-3-2-7	산림보호 지원	89.3	3.3	
3-3-2-8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89.3	4.3	
3-3-3-1	청년 보금자리 조성	92.0	4.0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3.3	4.0	
3-3-4-2	스마트 타운 조성	88.7	4.3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85.3	3.3	
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① (해양폐기물 정화)	91.3	4.3	
3-4-1-5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90.0	3.7	
3-4-1-6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해양자율제대 운영 확대)	90.0	4.0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	95.3	4.0	삶의 질 우수과제
3-4-3-11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94.0	3.3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① (환경부)	89.3	3.7	
3-4-3-5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 ② (농식품부)	94.0	3.7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92.0	3.7	
3-4-3-9	목재팰릿 사용 확대	92.7	3.7	
3-4-4-2	경관보전 직불제	87.3	4.3	

3.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3.3.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 (성과)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과 해상교통 안전에 필요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통여건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버스) 등의 사업이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과제는 농식품부-시도-시군의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공공형 버스)’ 과제는 지자체 차원의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 및 사업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ICT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용자 대상의 현장 설명 및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사업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바다내비)을 신규로 보급하여 해군 함정 및 내항선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해양 안전, 복지서비스가 도출되었다.
  *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사업은 전국 광역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정례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업, 어업인 교육, 관제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도서 지역 교통여건 개선, 고령자 교통안전 사업의 경우 정책 수혜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 객관적인 정책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여건과 관련된 연안여객선 현대화,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과제는 실제 정책 수혜자인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과 개선 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 ‘연안여객선 현대화’ 과제는 사업 효과를 도출하기에 좋은 사례이므로 정책 수혜자에 대한 의견 수렴,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농어촌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필요하며, 농어촌 특성에 맞게 사업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과제는 정책 평가에 의해 성과지표를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지표로서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교통안전 활동’ 과제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문가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3.3.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성과)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정책군으로서 사업 집행 실적과 성과 모두 양호하다.

-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 여건 개선 과제들은 지원 한도 및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다.
  *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청년, 농촌 빈집 개량 주민 등 주택개조 자금 지원이 긴급한 대상자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사업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모집하고, 복지재단에서 대상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과제는 전국 빈집 현황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빈집 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였다.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과제는 사업의 추진, 홍보, 정책 환류 노력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으며, 차년도 사업 대비 대상지역 확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일부 정책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전달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수요조사, 사업자 선정, 시설 개선, 검수 등 사업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 체감도가 높아 향후 사업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운송 필수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섬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 필요사항) 일부 과제의 경우 보급률, 철거율 등 실적 상의 증가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가 필요하다.

- 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대규모 인프라 공급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민관협력 사업으로 우수사례가 도출되고 있으나 농어촌 특성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하수도 설치' 사업은 적절한 실행방식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증체계와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국 대상 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량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이루어지는지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지원한도 및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매년 수립한 철거계획에 따른 수행 정도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분리해서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3.3.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며, 정책효과가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제시되었다.

-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거점을 육성하는 과제들은 사업에 맞는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과 확산 및 검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과제는 매년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홍보를 통해 성과 확산에 힘쓰고 있다.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현장 활동조직 및 인적 자원 육성에 초점을 두는 등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 '어촌뉴딜 300' 과제는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였고,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표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재해, 범죄 등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달성하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도출하였다.
  * '수리시설 안전관리 ①' 과제는 노후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에 기여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였다.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과제는 기후변화, 영농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개정하였고 성과지표의 신뢰성, 검증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 사업은 정량적인 근거를 들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도출하였으나 국가어항뿐 아니라 지방관리어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과제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검증이 용이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나, 세부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사업은 농어촌 맞춤형 순찰·방범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였고 탄력순찰 이행률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 (개선 필요사항) 임대주택 공급,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한 과제들은 정책 효과 검증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업 취지와 맞는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우며, 정책 환류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미흡하며, 사업 홍보를 위한 우수사례 도출이 필요하다.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10년간 시행되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의 만족도 조사 및 사후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미흡하였다.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처 간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여러 시행주체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행안부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예산 확대,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3.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성과)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촌 어메니티 보전을 위한 사업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일부 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민간 협업을 통한 추진과정이 두드러졌다.

- 축산분뇨와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 등 농어촌에서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경관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개선이 이루어졌다.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①(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폐어구 수거 및 어구 보증금제 시범운영을 통해 어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정책 환류도 우수하게 이루어졌다.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연안어장 환경 개선)'사업은 폐어구 수거·처리 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급별, 주기별 순환식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집행지침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①'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악취 저감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도출하였다.

*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기초지자체장을 사업 시행 주체로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 신청, 사업지구 선정, 보조금 지급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①’ 사업은 농업유산지역의 방문객 증가 추세와 전년도 일부 국가 중요 농업유산지역에 보전관리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관계인구,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주민참여 정도가 우수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민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활발한 사업 추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사업은 정기적인 지자체 캠페인과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캠페인 인지도를 넓혔으며, 실제로 9,937개 마을이 참여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으로 농어촌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사업은 어업 종사자 대상 간담회를 통한 현장 개선 의견반영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 ESG 활동과 협업하고 영세 소형선박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 노력이 있었다.
  *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 사업은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밀착형 사업으로 참여자의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속 참여 의향 점검 등 주민의 생활환경 인식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농어촌 지역 환경·경관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였음에도 성과 자료 제시가 미흡한 과제, 주민 의견 반영 및 확산을 통해 성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가 일부 있었다.

- 각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기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사업 일부는 보완이 필요하다.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사업은 정책효과 검증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등 검증 척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는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농가 수’로 설정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 또는 설명이 자료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지표로서의 적절성을 설명해줄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사업은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어, 친환경양식 어업 육성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보완된다면 성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과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확대)’ 사업은 어촌 주민의 의견과 자율방제대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사업이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참여가 반영된다면 기본계획의 목표와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4.1. 평가 결과 개요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1.3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1등급이다.

- 총 35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11개였으며, 지속유지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2개였다. 장기 개선형과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각각 6개, 0개로 분류되었다.

〈표 2-21〉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평가 유형별 정책 수행도 점수 및 삶의 질 영향력 등급

과제 분류 유형	과제 개수	정책 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11	97.0	4.8
지속 유지형	2	98.7	4.0
장기 개선형	6	81.9	3.1
중점 개선형	-	-	
정기적 관찰형	16	90.0	4.0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전체	35	91.3	4.1

❍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과제들은 수산업 창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사업은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에 기여하였다.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사업은 수산분야 창업 발굴-지원-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여성 및 청년 기업 대상 지원 강화, 현장방문형 컨설팅 등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였다.

❍ 일부 사업은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선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2024년 폐지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개선된 후속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
-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①(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완공된 시설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시설 운영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운영·관리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표 2-2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책군별 점검·평가 결과

정책군	과제 수	정책 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7	90.2	3.8
농어촌 관광 활성화	5	89.1	4.2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18	91.8	4.0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5	93.3	4.7

4.2.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4.2.1. 성과 확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정책 수행도 점수와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이 모두 높게 평가된 과제다.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의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11개이다.

〈표 2-23〉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성과 확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6.7	5.0	삶의 질 우수 과제
4-1-2-2	푸드플랜 내실화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96.0	4.7	삶의 질 우수 과제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96.7	4.3	삶의 질 우수 과제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8.0	5.0	삶의 질 우수 과제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4-3-1-7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97.3	4.7	삶의 질 우수 과제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97.3	4.7	삶의 질 우수 과제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99.3	4.7	삶의 질 우수 과제
4-3-3-9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96.0	4.7	삶의 질 우수 과제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97.3	5.0	삶의 질 우수 과제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8.0	5.0	삶의 질 우수 과제
4-4-2-3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	94.7	5.0	

4.2.2. 지속 유지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지속 유지형에는 정책 수행도가 양호하지만 삶의 질 영향력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며,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는 2개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표 2-24〉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지속 유지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4-1-2-1	푸드플랜 내실화 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98.7	4.0	삶의 질 우수 과제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8.7	4.0	삶의 질 우수 과제

4.2.3. 장기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장기 개선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모두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 6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25〉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장기 개선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4-1-1-3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80.0	3.0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	74.7	2.7	개선필요과제
4-1-2-5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②	86.7	3.0	
4-2-1-3	해양관광 활성화	84.0	3.7	
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79.3	3.0	개선필요과제
4-3-3-4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86.7	3.0	

4.2.4. 중점 개선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중점 개선형은 과제의 정책 수행도는 낮으나 삶의 질 영향력이 높은 과제들이며,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다.

4.2.5. 정기적 관찰형 과제의 주요 평가 결과 및 특성

❍ 정기적 관찰형은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해당하며, 경제활동·일자리전략 부문에서는 16개가 정기적 관찰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2-26〉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정기적 관찰형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4-2-1-1	농촌관광 활성화	87.3	4.7	
4-2-1-2	어촌관광 활성화	91.3	4.7	
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93.3	3.3	
4-2-1-6	음식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89.3	4.7	
4-3-1-3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85.3	3.7	
4-3-1-6	청년 어업인 후계영어자금	90.7	3.7	
4-3-2-2	귀어귀촌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육성)	91.3	4.7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89.3	3.3	
4-3-3-2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89.3	4.0	
4-3-3-3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91.3	3.7	
4-3-3-5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	94.0	4.0	

(계속)

과제번호	과제명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비고
4-3-3-6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92.7	3.3	
4-3-3-8	산림 휴양치유공간 조성	86.0	4.0	
4-3-3-10	말산업육성지원	91.3	4.0	
4-4-1-2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91.3	4.3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85.3	4.0	

4.3. 세부 정책군별 평가 결과 및 특성

4.3.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 (성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생산-소비 연계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향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등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

- 지역사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화 육성,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활동 다각화에 기여하였다.
  *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구축하여 농가의 가공 창업이나 부가가치 향상 기회를 제공하여 매출액 증대 등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사업은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경제활동 다각화에 기여하였다.
-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먹거리 체계 강화에 기여하였다.
  * '푸드플랜내실화①(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사업은 유통거리 단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먹거리 나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 '푸드플랜내실화②(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고령 농업인 등 취약농가의 순회 수집을 지원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농어가 생산성 증대 및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지만, 사업 효과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영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목표는 현재보다 진취적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사업은 인증, 컨설팅, 홍보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일부(인증)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컨설팅, 홍보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성과 확인이 가능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 '푸드플랜 내실화②(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 중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지표가 필요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과정에서 수행하는 식생활 교육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 '푸드플랜 내실화②(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운영하여 복합문화센터와 식생활 교육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시너지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4.3.2. 농어촌 관광 활성화

❍ (성과)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사업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마비되었던 농어촌 관광 실적 회복과 농어가의 다양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다.

- 농어촌 관광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은 해수욕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우수 해수욕장 선정, 알박기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운영관리 고도화 및 내실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추진하였다.
  *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사업은 편의·숙박시설 개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적용, 환경친화적 공정관광 개발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 코로나 앤데믹 이후 농촌관광 방문객 수가 일정 수준 회복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촌관광 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음식관광활성화②(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 관광 명물이 될 수 있는 양조장을 발굴하여 생산·체험·관광이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고도화하였다.
  *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은 농촌관광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관광객 수 회복, 농촌관광 매출액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발생시켰다.

❍ (개선 필요사항)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부가가치 향상 및 재방문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요자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 농어촌 관광은 소비자의 다양한 여가·레저활동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험·유희형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농어촌 관광의 부가가치 향상 및 방문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마케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은 농촌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관광 운영 역량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사업 추진 과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주민과 관광객 등 수요 주체의 의견 및 수요를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사업과 '음식관광 활성화①(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요 주체로부터의 의견수렴 경로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4.3.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성과) 농어촌 지역에 청장년 인력 육성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농어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기회 마련과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등에 주요한 계기가 되어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에 기여하였다.

-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인력 유입을 위해 자금지원을 통한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창업·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유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농지 임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유인하고 있다.
* ‘청년 어업인 후계영어자금’ 사업은 어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함으로써 인력 양성 및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청년인턴협약과 업체 지원 및 퍼실리테이션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등 농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제고와 신산업화를 지원하며, 농식품 벤처, 창업 자금,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농어촌 취·창업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 농어촌 미래 혁신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농어업 혁신과 동시에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사업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스마트양식장 조성’사업을 통해 ICT시설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개선 필요사항) 전반적으로 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농어촌 지역 청년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취업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창업의 지역확산 관점이 다소 미흡하여 지역 농업 및 주민 삶의 질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 창업 및 벤처 지원의 효과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 농업 또는 지역 농업과의 연계, 지역자원 활용 등이 필요하다.
- 또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일회성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품목 등 특성에 맞는 다각화된 모델을 통해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중소규모의 창업, 지역외 원료 기반 창업 등 세분화된 유형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엑셀러레이터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사업으로서 향후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사업과 ‘스마트양식장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설비 투자사업이므로 스마트 기술 등 대규모 투자 이후 중장기적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

4.3.4.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성과) 농어촌 여성, 다문화 여성, 외국인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및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다.

- 농어촌 여성 및 다문화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국인력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등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 '다문화여성 역량강화'사업은 다문화여성을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온라인 교육, 다국어 교재 제작 등 정책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실행방식을 갖추었고, 사업 대상을 다문화청소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개선'사업은 단순 인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인권, 이탈 등 복합적 문제점을 고려하고,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 (개선 필요사항) 정책목표(농촌정착 지원)와 정책수단(영농교육)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과정이 필요하다.

- 다문화 여성의 역량 강화 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농어촌 사회의 농어촌 필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농업교육 과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다문화여성 역량강화'사업은 교육내용이 단계별, 대상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과정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역량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일회성 교육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량진단-진로설계-농업입문-심화-실습 등 개인별 진로 및 경력 개발과정으로 설계·운영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5.1. 정책사례 모니터링 개요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매년 상반기에 수행한 서면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정책 수행도가 부진하거나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에 대한 정책 성과가 불분명한 과제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현장에서의 정책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 따라서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서면평가 결과에 근거한 위원회 안건 보고 및 심의, 국회 제출을 완료한 이후인 매년 하반기에 수행한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대상 과제는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정책 수행도가 미흡하여 ‘개선 필요 과제’로 평가된 과제 중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을 선정하였다.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필요 과제 중 정책 시의성, 점검 수행 및 현장에서의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최종 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개요를 점검하고, 앞서 이루어진 서면 평가 결과로부터 중점 이슈를 도출한다.
  * 중점 이슈는 사업의 목적 및 세부 목표의 정합성, 사업 추진 절차, 예산 집행 방식 등을 포함한다.
- 도출한 중점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모니터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면담을 포함한다.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5.2.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5.2.1. 사업 개요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산림청 사업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 등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수익창출) 연료비, 전기요금 절감, 잉여 전력 매전 시 수익 창출
- (환경보전)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모델 구축
- (순환경제) 산림자원 순환경제 실현, 산불예방 등 부차적 효과 창출
- (공동체회복) 청년 유입, 산촌 일자리 창출, 산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림 2-1〉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기대효과

자료: 산림청. 2019.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자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5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며, 2020년 전라북도 완주군과 강원도 횡성군 등 2개소가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2021년 경기도 양평군이 2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2022년 충청북도 괴산군이 3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누적 4개소).

5.2.2.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통한 중점 이슈 도출

❍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의 정책 수행도 점수는 78.7점으로 평가되어 '개선 필요 과제'로 분류되었다.

〈표 2-27〉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구분			점수
정책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1.3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8.7
삶의 질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5)		3.7

❍ 계획·집행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에 에너지 자립시스템을 공급하고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은 기본계획의 비전에 부합하나, 지자체 보조사업 성격으로 수혜지역 주민과의 협의 체계가 미흡하다.

❍ 정책 성과 및 정책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지표가 마을 조성 계획 대비 완료 개소 수로 단순 투입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비용 절감 정도나 정주기반 구축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아직 조성이 완료된 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 R&D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고 자료에 기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정책 효과 검증, 만족도 조사 등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중간보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 상대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사업에 대한 2022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검토할 중점 이슈는 아래와 같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의 중점 이슈
1) 개별 마을 사업 추진현황 및 지체 원인
2) 주민을 포함한 사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사업 반영 여부

❍ 이상의 중점 이슈를 검토하고자 2022년 본 사업이 추진되었던 ○○군 △△마을을 방문하였다[2].

- 주민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본사업의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5.2.3. 모니터링 결과

❍ **(개요)** 2021년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군이 제출한 △△마을이 선정되어, 2022년까지 2년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목재칩 보일러, 가스피케이션 발전 설비, 열배관 및 열 교환기, 연료공급센터 등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단위 중앙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와 온수를 자급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마을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2) 2023년 9월 21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하 모니터링 결과는 당시 면담 및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국비와 지방비 각 50%인 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2년 간 열병합 발전 설비, 연료 공급 설비 등 조성에 군비 24억 원, 도비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100kW급 소형 가스피케이션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7,500시간 이상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한 열은 △△마을 기저열부하로 활용한다. 또한 겨울철 난방 피크시기와 비상시를 대비해 500kW급 목재칩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문제①: 사업 설계와 실제 추진 시 오차 발생)** 사업 시작 전 설계 단계와 실제 시설 조성 추진 시 발생한 오차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 당시 잠정 중단 상태였다.

- 계획 시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가스피케이션' 방식의 시설은 실제 설계 단계에서 마을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 결과적으로 예비 설계 시 편성한 예산보다 실제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훨씬 증가하는 한편, 시설 도입으로 예상되는 수혜 가구 수가 48가구에서 16가구로 대폭 감소하였다.

❍ **(문제②: 의견수렴 절차 불충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마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 의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 사업 초기 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으나, 에너지 비용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출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부족했다.

❍ **(문제③: 사업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지체 발생)** 사업이 시작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군의 사업 담당 공무원이 4차례 교체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비 공법 변경으로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담당자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요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추진력을 잃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 **(문제④: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의견수렴 절차 미흡)** 전문가와 사업 시행 담당자, 시공 담당 기업 간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불충분 등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연이 발생하였다.

- 초기 자문의견 수렴 시에는 에너지 관련 분야 전문가, 산림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법심의위원회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산림 분야 관계자 중심의 쏠림이 발생하고, 사업 담당자와 시공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결과적으로 실제 사업 추진 및 관리 절차에서 에너지 기술 관련 전문적인 고려가 미흡하여 시행착오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

5.2.4. 중점 이슈 점검

❍ **(중점 이슈①) 개별 마을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지체 원인**

- 본 사업은 사업 공모 선정 후 설계 단계와 실제 추진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데 이르렀다.
  * 계획 시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가스피케이션' 방식의 시설은 실제 설계 단계에서 마을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설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예비 설계 시 편성한 예산보다 예산이 훨씬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한편, 수혜 가구 또한 48가구에서 16가구로 대폭 감소하였다.
- 사업 추진 시 오차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에너지 관련 분야 전문가, 산림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나,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공법심의위원회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산림 분야 관계자, 사업 담당자와 시공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더욱이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 중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설비 조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예산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여 사업이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 **(중점 이슈②) 주민 및 사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와 사업 반영 여부**

- 사업 초기 주민에 대해 사업 결과 에너지 비용 감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청회와 같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였다.

  * 사업 초기 에너지 비용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출 수 있다는 정도의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부족했다.

- 산림 개발과 에너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부터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한 채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 설비 조성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였다.

  * 실제 사업 추진 및 관리 절차에서 에너지 기술 관련 전문적인 고려가 미흡하여 시행착오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

❍ **○○군 사례의 시사점과 향후 계획**

- 우리나라에서 산림 에너지 활용 정책은 펠릿을 활용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가스피케이션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 도입 및 설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기술개발 사업(2021~2024)에 ○○군이 참여 중이며, 시범사업 기간 모니터링 및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성과지표로서 참여 가구 수, 사업 시행 전·후 에너지 비용 효율, 목재 부산물 활용률 등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3 결론

1.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요약

❍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4대 전략 부문 178개 과제 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8개와 지방으로 이양된 5개, 사업 재편으로 평가할 수 없는 1개 과제를 제외한 164개 과제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집행, 사업 목표 달성과 일정 준수 수준 등에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 (지표별 점수) 과제별 정책 수행도의 평균 점수는 90.3점(최고 99.3, 최저 74.7),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은 평균 4.0등급(최고 5.0, 최저 1.7)으로 평가되었다.
- (정책 수행도) 정책 수행도 평균 점수는 90.3점으로, 전년도보다 0.3점 상승하였다.
  * 정책 수행도 평균(100점 만점): ('20) 90.3점 → ('21) 89.3 → ('22) 90.0 → ('23) 90.3
- (삶의 질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은 평균 4.0등급으로 전년에 비해 0.1등급 하락하였다.
  * 삶의 질 영향력 등급(5등급): ('20) 4.3등급 → ('21) 4.0 → ('22) 4.1 → ('23) 4.0

2. 삶의 질 4대 전략별 평가 종합 및 개선 방향

2.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 평가 종합

❍ 보건·복지 전략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이다. 사업 추진 결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내실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사업은 추진체계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개선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정책군은 ①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④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이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일정부분 향상되었다.

- 농어촌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의료기관 폐업과 의료진 이탈이 증가하면서 의료 접근성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직접적인 정책효과 검증이 어렵다.

❍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고·질병 농가 및 고령, 취약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영농·가사 활동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서비스 욕구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지역서비스공동체에서 직업 훈련 및 교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사회적 관계망 지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보육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어촌 지역 부모의 보육·육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였다.

❍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농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농어업인의 안전 보장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 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응급의료 접근성이 특히 낮은 산간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체감지표를 별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의 예산 지원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농어촌의 고령화·인구 감소 등 농어촌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할 때,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 부분적인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 기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

❍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이외에 시설이 국공립 수준에 적절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일부 사업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보육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세부적인 사업 설계,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정책에서 소외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농업인 집단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농어업인·농어촌 주민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2.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 평가 종합

❍ 교육·문화 전략의 목표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수, 농어촌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률, 농어촌공간 체육시설 지원 수, 생활문화센터조성 등 교육·문화 전략 대부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주요 정책군은 ①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이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지역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 통학버스 운영 확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중장년 유입 등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수혜자의 특성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농어촌 지역 성인의 문해능력 수준 향상, 고령사회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역할 및 소속감 확대에 기여하였다.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군에 포함된 사업은 일부 세대 즉 고령층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한계가 있다.

❍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농어촌의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실질적인 수혜층 확대와 문화·향유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활동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정도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 주민의 문화활동 횟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치유와 관계망을 확산하여 사회적 자본 축적까지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생활문화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아 농어촌만의 정확한 사업 결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 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 지역 교육,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등 농어촌 교육 제도의 실행 방식·추진체계의 근본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농어촌지역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이라는 사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을 농어촌 고령층 중심에서 확장하여 다양한 세대 및 유형의 농어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 여건 및 환경에 맞도록 계속해서 사업 방식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하고, 타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농어촌 지역 체육공간 조성사업이 지방이양되며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체육시설을 자율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처 차원에서는 조성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주민참여 및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의 보안이 필요하다.

-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다움을 향유하면서 여가를 증진하는 이른바 농어촌 주민 여가(문화·여행 등) 복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 평가 종합

❍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목표는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이다.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취약 지역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인프라 지원사업들이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 주요 정책군은 ①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이다.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과 해상교통 안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통여건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버스) 등의 사업이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어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보급 여건을 개선하였다.

❍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재해, 범죄 등 안전과 관련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었다.

-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업 취지와 맞는 실행 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촌 어메니티 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주민참여형 사업에서 주민참여 정도가 우수하였으며, 농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및 자율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추진체계가 개선되었다.

❑ 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사업의 효율성 개선과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농어촌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주행, 전기차 등의 새로운 기술적 변화 상황을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화지구인 농촌마을보호지구가 지정되고, 삶의 질 정주기반구축 세부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연계하여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처 간 시도들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협업, 민간·사회적경제 부문의 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등을 통해 정책의 실행 방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부분 과제들의 경우, 사업 추진을 통한 정책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농어촌 지역 환경·경관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도출한 성과를 충분히 드러내고, 주민 의견수렴과 확산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시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 평가 종합

❍ 경제활동·일자리 전략의 목표는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다. 수산업 창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주요 정책군은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이다.

❍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맞춤형 종합지원과 신규 경영체 수 및 매출액 증가 등의 기여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 생산-소비 연계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향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등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사업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었고, 농어촌 관광 경영체 증가와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코로나 엔데믹 이후 농촌관광 방문객 수가 일정 수준 회복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촌관광 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농어촌 지역에 청장년 인력 육성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농어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기회 마련과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등에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 농어촌 미래 혁신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농어업 혁신과 동시에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농어촌 여성, 다문화 여성, 외국인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 정책 개선 방향

❍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사업 효과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과정에서 수행하는 식생활 교육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거점단지 조성과 유통체계 개선, 관련 융복합산업 육성 사업은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후속사업이나 관련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 (농어촌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유입, 귀농·귀촌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간 혁신 주체 육성을 위한 사업내용과 실행방식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변화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부가가치 향상 및 재방문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요자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 농어촌 관광은 소비자의 다양한 여가·레저활동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험·유희형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농어촌 관광의 부가가치 향상 및 방문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마케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일부 세부 사업의 실행방식과 추진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창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농어촌 지역 청년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취업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창업의 지역확산 관점이 다소 미흡하여 지역 농업 및 주민 삶의 질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일부 세부 과제들은 지속·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정책목표(농촌정착 지원)와 정책수단(영농교육)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과정이 필요하다.

- 다문화 여성의 역량 강화 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농어촌 사회의 농어촌 필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농업교육 과정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부 록 1

2023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전체 과제 평가 결과 요약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보건 복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8.0	4.3	복지부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94.0	4.3	복지부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80.7	5.0	복지부
		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92.7	5.0	소방청
		1-1-2-3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분만취약지 해소)	85.3	4.7	복지부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88.0	4.3	복지부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85.3	3.3	농식품부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98.7	5.0	해수부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96.0	4.7	농식품부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83.3	4.0	해수부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 관리 지원	90.0	4.7	복지부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1-2-1-1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종료	종료	복지부 / 농식품부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90.0	4.7	농식품부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94.0	4.7	농식품부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8.0	4.3	복지부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아이돌봄센터)	96.0	5.0	농식품부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98.7	5.0	농식품부
		1-3-2-1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82.7	4.3	복지부
		1-3-2-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3.3	3.3	복지부
		1-3-2-3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92.0	4.7	농식품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4.7	5.0	농식품부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6.0	5.0	농식품부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90.0	5.0	해수부
		1-4-1-4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94.7	4.0	해수부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8.0	4.3	농식품부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96.0	3.7	해수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보건 복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4-2-3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89.3	3.3	농진청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96.0	4.3	농진청
		1-4-2-5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84.7	3.3	해수부
		1-4-2-6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91.3	4.3	해수부
		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81.3	1.7	해양경찰청
		1-4-2-8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안전망 구축	94.0	4.0	해양경찰청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89.3	3.0	해양경찰청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97.3	4.7	농식품부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4.7	4.7	농식품부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95.3	3.3	해수부
		1-4-3-4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88.7	4.7	농식품부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여성경영주 등록확대)	81.3	4.7	농식품부
		1-4-3-6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92.0	3.7	농진청
교육· 문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96.0	5.0	교육부
		2-1-1-2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83.3	4.0	교육부
		2-1-1-3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88.0	3.3	교육부
		2-1-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93.3	4.3	농식품부
		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89.3	5.0	농식품부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9.3	4.3	해수부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84.0	3.0	교육부
		2-1-2-1	미래형 학교환경구축(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종료	종료	교육부
		2-1-2-2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교실 구축 지원	종료	종료	교육부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95.3	5.0	교육부
		2-1-2-4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92.7	3.7	교육부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2.0	4.7	교육부
		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96.7	5.0	교육부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94.7	4.3	교육부
		2-1-2-8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종료	종료	교육부
		2-1-2-9	농촌유학 지원	86.0	3.7	농식품부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2-2-1-1	농어촌성인문해교육 활성화방안	95.3	5.0	교육부
		2-2-1-2	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88.0	2.7	농식품부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93.3	4.3	교육부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94.7	4.3	문체부
		2-2-2-3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확대	92.7	3.7	농식품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교육·문화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2-3-1-1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방이양	지방이양	문체부
		2-3-1-2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지방이양	지방이양	문체부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방이양	지방이양	문체부
		2-3-1-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92.7	3.3	문체부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94.7	4.3	문체부
		2-3-2-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85.3	3.0	문체부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77.3	3.0	문체부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86.7	4.0	문체부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87.3	3.7	문체부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84.0	3.3	문체부
		2-4-1-3	문화이모작 (문화공동체 촉진인력 양성)	종료	종료	문체부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82.0	2.3	문체부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4.0	4.0	농진청
		2-4-2-3	농촌축제 지원	90.7	4.3	농식품부
정주 생활 기반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4.7	4.7	농식품부
		3-1-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90.7	4.7	농식품부
		3-1-1-3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92.0	4.3	국토부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90.0	4.7	국토부
		3-1-1-5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	85.3	3.3	국토부
		3-1-1-6	내항여객선 승선관리 시스템 고도화	종료	종료	해수부
		3-1-1-7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87.3	5.0	해수부
		3-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이양	지방이양	행안부
		3-1-2-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88.7	3.3	국토부
		3-1-2-3	교통안전 활동	88.0	3.3	경찰청
		3-1-2-4	연안여객선 현대화	88.0	3.7	해수부
		3-1-2-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87.3	3.3	해수부
		3-1-2-6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94.0	3.7	해수부
		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96.0	3.7	해양경찰청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80.0	4.3	농식품부
		3-2-1-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95.3	4.7	농식품부
		3-2-1-3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86.7	4.7	농식품부
		3-2-1-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91.3	4.7	환경부
		3-2-1-5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90.0	4.3	국토부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96.7	5.0	국토부
		3-2-2-2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86.7	4.3	환경부
		3-2-2-3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88.0	4.0	산업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정주 생활 기반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3-2-2-4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4.7	4.7	산업부
		3-2-2-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96.7	5.0	해수부
		3-2-3-1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90.0	4.3	농식품부
	인구유입 촉진을 휘한 정주기반 마련	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92.7	4.7	농식품부
		3-3-1-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7.3	4.3	농식품부
		3-3-1-3	어촌뉴딜300	85.3	3.7	해수부
		3-3-1-4	정주환경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86.7	3.7	농진청
		3-3-2-1	수리시설 안전관리 ①	90.0	3.7	농식품부
		3-3-2-2	수리시설 안전관리 ②	90.7	3.7	농식품부
		3-3-2-3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94.7	4.3	농식품부
		3-3-2-4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	92.0	4.3	해수부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89.3	4.0	산림청
		3-3-2-6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89.3	4.0	산림청
		3-3-2-7	산림보호 지원	89.3	3.3	산림청
		3-3-2-8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89.3	4.3	경찰청
		3-3-3-1	청년 보금자리 조성	92.0	4.0	농식품부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 복지주택)	84.7	4.7	국토부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84.0	3.0	국토부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3.3	4.0	과기정통부
		3-3-4-2	스마트 타운 조성	88.7	4.3	행안부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85.3	3.3	환경부
		3-4-1-2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86.0	2.7	농식품부
		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① (해양폐기물 정화)	91.3	4.3	해수부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96.7	4.3	해수부
		3-4-1-5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90.0	3.7	해양경찰청
		3-4-1-6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해양자율제대 운영 확대)	90.0	4.0	해양경찰청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98.0	4.0	농식품부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	95.3	4.0	농식품부
		3-4-3-2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86.0	2.0	해수부
		3-4-3-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5.3	2.3	해수부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① (환경부)	89.3	3.7	환경부
		3-4-3-5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② (농식품부)	94.0	3.7	농식품부
		3-4-3-6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지방이양	지방이양	농식품부
		3-4-3-7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84.7	2.7	농식품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정주 생활 기반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92.0	3.7	해수부
		3-4-3-9	목재팰릿 사용 확대	92.7	3.7	산림청
		3-4-3-10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84.7	3.7	산림청
		3-4-3-11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94.0	3.3	해양경찰청
		3-4-4-1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88.7	5.0	농식품부
		3-4-4-2	경관보전 직불제	87.3	4.3	농식품부
		3-4-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6.7	4.3	해수부
		3-4-4-4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①	84.7	3.0	농식품부
		3-4-4-5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②	88.7	3.0	해수부
		3-4-4-6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86.7	2.7	농진청
경제 활동 일자리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6.7	5.0	농식품부
		4-1-1-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종료	종료	해수부
		4-1-1-3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80.0	3.0	산림청
		4-1-2-1	푸드플랜 내실화 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98.7	4.0	농식품부
		4-1-2-2	푸드플랜 내실화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96.0	4.7	농식품부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8.7	4.0	농진청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	74.7	2.7	해수부
		4-1-2-5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②	86.7	3.0	해수부
	농어촌 관광 활성화	4-2-1-1	농촌관광 활성화	87.3	4.7	농식품부
		4-2-1-2	어촌관광 활성화	91.3	4.7	해수부
		4-2-1-3	해양관광 활성화	84.0	3.7	해수부
		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93.3	3.3	농진청
		4-2-1-5	음식관광 활성화(음식관광 상품 개발 보급)	평가제외	평가제외	농식품부
		4-2-1-6	음식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89.3	4.7	농식품부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4-3-1-1	농업법인 취업 지원	종료	종료	농식품부
		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79.3	3.0	농식품부
		4-3-1-3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85.3	3.7	농식품부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96.7	4.3	농진청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8.0	5.0	농식품부
		4-3-1-6	청년 어업인 후계영어자금	90.7	3.7	해수부
		4-3-1-7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97.3	4.7	농식품부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97.3	4.7	농식품부
		4-3-2-2	귀어귀촌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육성)	91.3	4.7	해수부

(계속)

4대 전략	정책군	과제번호	세부과제	정책 수행도 점수	삶의 질 영향력 등급	담당부처
경제 활동 일자리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89.3	3.3	농식품부
		4-3-3-2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89.3	4.0	농진청
		4-3-3-3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91.3	3.7	해수부
		4-3-3-4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86.7	3.0	산림청
		4-3-3-5	농식품 벤처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	94.0	4.0	농식품부
		4-3-3-6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92.7	3.3	농식품부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99.3	4.7	해수부
		4-3-3-8	산림 휴양치유공간 조성	86.0	4.0	산림청
		4-3-3-9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96.0	4.7	산림청
		4-3-3-10	말산업육성지원	91.3	4.0	농식품부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97.3	5.0	여가부
		4-4-1-2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91.3	4.3	농식품부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8.0	5.0	농식품부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85.3	4.0	해수부
		4-4-2-3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	94.7	5.0	고용부

부 록 2

세부 과제별 점검·평가 결과

1.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1-1-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th><th>담당부처</th><th>보건복지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5">[사업명]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td></tr>
<tr><td colspan="5">[사업목적]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td></tr>
<tr><td colspan="5">[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교부하고 시·도 지자체와 민간(대한적십자사) 보조금을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지원</td></tr>
<tr><td colspan="5">[주요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의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 등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료원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
- 도·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행) 50% → (개선) 60% 적용 ('22~'24)
• 202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신축 지원예산은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70.0%) 증가</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 점수(점)</td><td>77.4</td><td>77.4</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6">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8.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본 사업을 통해 심뇌혈관센터 개소, 의료원 기숙사 준공 등 농어촌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기여함.
• 국정과제 및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에 맞추어 사업의 다각화 및 추진체계 재구조화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 의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사업

[사업목적] 농어촌 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 여건 개선

[사업구조] 지자체 자본 보조로 시·군·구 보건소의 신청에 따라 시도에서 집행하는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기술지원 추진

[주요사업내용]

- 기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신증축, 개보수)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이용률 제고
  - 시설개선 보건소 이용자 종합 만족도 : ('22) 87.8점 → ('23) 92.5점
  - 시설개선 보건기관 이용자 증가율 : ('22) 4.209% → ('23) 5.77%
- 태풍 및 호우 피해로 인한 지역보건의기관의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 예산 편성·지원
-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민관협업(현대오토에버)으로 네비게이션에 건강생활센터 공공데이터 연계 적용,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보개선 총 96건(산규추가 19건, 수정 77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종합 이용자 만족도(점)	88.1	92.5	105.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본 사업 예산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집행력과 책임성 강화를 기대함.
- 태풍,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긴급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농어촌 취약지역에서 나타나는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문제를 비롯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전략마련이 요구됨

과제명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사업목적] 도서, 산간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질 제고

[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취약지 소재 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해 지자체 보조를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각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지원

[주요사업내용]

- 113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에 운영비를 지원 및 간호인력 파견
- 응급원격협진·영상판독 서비스 지원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활성화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경북 의성군 영남제일병원, 전남 신안군 신안대우병원, 충북 보은군 보은한양병원, 전남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전남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등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 가천대길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원격협진 사업 참여 거점병원 관계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위탁수행기관) 담당자 등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응급의료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 충족률(%)	87.5	71.1	81.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4.7
		2-2. 사업 효과 (20)	12.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0.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취약지 응급실 운영비 지원과 함께 간호인력파견과 응급원격 협진 등의 지원을 통해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 대상의 적절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중요한 기여함.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교부금 지원과 같은 수동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1-1-2-2]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담당부처	소방청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 심장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 소생률 강화를 위해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강화

[사업구조] 소방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 수행

[주요사업내용]

- 119상황요원 구급 역량 강화
  - 전문자격자 비율 : ('19) 36.5% → ('23) 84.1%
- 구급차 공백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펌뷸런스 확대 운영
  - 농어촌 지역 4대 중증 응급환자 이송 건수 연평균 32% 증가
- 응급처치 및 구급장비 사용법 교육 내실화
- 펌뷸런스 자격자 확보를 위한 자격 기준 개선
  - 자격 기준 확대 및 행정규칙 개정 (소방청 예규 제76호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지역대 구급차 배치율(%)	100.0	10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2.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이동 중 응급처치와 관련한 구급 장비 설치, 의료진 상주 등의 추진 사항은 정책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19 구급대 신규 배치에 이어서 노후 구급차 교체 등의 사업으로 연속성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농어촌 응급의료개선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함.
- 성과지표가 구급차의 수요에 대한 계산식이 아닌 구매계획 대비 구매 수량으로 측정되고 있어 실제 본 사업의 정책 수요에 따른 정책 이행율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과제명	[1-1-2-3]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 (분만취약지 해소)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사업목적] 분만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및 의료이용이 취약한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교부하는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추진

[주요사업내용]

-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 2023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 포상 및 사례발굴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한 전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결과, 의료 및 분만취약지 분야의 우수기관을 선정·표창(2개, 12월 13일)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
- 분만취약지 지원 신규 3개소 확대
  - 사업수행 의료기관 : ('22) 51개소 → ('23) 54개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분만취약 가임인구율(%, 하향지표)	1.32	1.32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5.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분만 취약지 지원을 2개소 신규로 포함한 가운데 사업 예산 확대가 계획되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운영비 지원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적 만족도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명	[1-1-2-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사업목적]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소아청소년과)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 의료기관을 선정·지원 및 의료이용 지원하여 의료형평성 제고

[사업구조] 보건복지부가 교부하는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추진

[주요사업내용]

-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지침개정
  - 기존 시설·장비비 집행 완료 후 운영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갖추어져 진료가 가능한 경우 선지급 등 및 성과평가 항목 개선 등
- 현지 점검 및 방문을 통한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23.11.16, 진도전남병원
- 인구 2만 5천인 진도에 진도전남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소아청소년과 의료이용 취약인구비율 (%, 하향지표)	1.39	1.3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가 1.41이었으나 당해 연도는 1.39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이용 취약인구 비율을 감소시켜가도록 하는 목표 방향성이 긍정적임.
- 농어촌 소아청소년의 의료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절대적인 총량이 10개소에 불과해, 향후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명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목적] 의료보건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료보건서비스 제공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농작업 질환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병원 등을 지정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국비 100% 민간보조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작업 관련 질환 연구조사('23년 14건)를 통해 농작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해당 질환의 유병율 감소를 위한 농작업 질환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
- 농업인 안전보건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 노력
  - 이장 및 회장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농업인 건강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법 전파(22명)
- 여성농 정책·편이장비 사용법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영농여건개선교육과 연계하여 농작업 질환 예방 교육 실시(1,521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작업성 질병 조사연구 실적(건)	10	14	14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5.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연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사업 간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함.
-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2024년 폐지 예정인 사업의 추진이 재고되어야 함.

과제명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

[사업목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촌지역에 어업안전보건센터 의료진이 방문하여 고령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어업인의 건강관리 지원강화

[사업구조] 해수부가 각 지역 어촌계, 지자체 및 보건소, 수협 등 관계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주요사업내용]

- 어촌(낙도) 지역 등 의료지원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추진을 통해 수혜자 2,662명 달성
  - 전년(1,021명) 대비 160.7% 수혜 증가
- 어업작업 관련성 질환의 위험요인 규명(정밀건강검진 등), 고령어업인 대상 신체 증진 프로그램 추진, 맞춤형 예방 운동 실시 등
  - 신체활동 능력 상승효과 확인(보행속도 34.9%, 근력 33.7% 향상)
- 어업안전보건센터 검진 결과 분석 후 추가 검진이 필요한 어업인에 대해 결과에 따른 항목 적용하여 추가 검진 실시(23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자 수(명)	500	2,662	532.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열악한 교통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형식의 사업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사업 추진 절차 역시 명확함.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과 어작업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성과를 도출한 점 등 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가 우수함.
- 사업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 정량적 성과지표보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만족도나 목표 대비 수혜율 등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사업목적] 일반 여성 대비 질병 유병률 및 의료비용이 높은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통한 유병률 및 의료비용 부담 개선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와 자부담 9:1의 비율로 민간보조 실시

[주요사업내용]

-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서 농작업 관련 질환에 특화된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유병율 및 의료비용 감소
- 전년대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확대 시행
  - ('22) 11개 시·군 → ('23) 18개
- '23년 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23~'27) 총사업비 1,154억 원(국비 6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사업 시행 예정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홍보하기 위해 기고·언론보도·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수(명)	9,000	8,400	93.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시범사업 단계에서 사업 범위 내 검진수검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사업 전환 이후에는 검진수검자 비율로 수정하여 정책 수혜자 측면의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추진 일정상 실제 검진을 받는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검진 가능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므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번기를 피해 충분히 검진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검진 기관 선정 절차를 전년도에 추진하는 방안 등 검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사업

[사업목적] 여성어업인의 주요 직업성 질환 중 검진 시 예방 효과가 높은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여성어업인 삶의 질 제고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와 자부담 9:1의 비율로 민간보조 실시

[주요사업내용]

-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어업인에게 질환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병율 및 의료비용 부담 감소
-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수혜자 확대를 위해 수검 대상 연령을 확대 조정
  - 만50세~ 69세 → 만45세 이상
- 건강검진 신청 절차 간소화, 검진 병원 접근성 제고 필요의견 등에 따라 의견을 반영한 방안 마련
- 2년간의 시범사업('22~'23)을 통해 '24년도부터 전체 여성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
  - ('22~'23) 1,800명 → ('24) 15,706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건강검진 수혜율(%)	72.0	34.5	47.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2.0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3.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여성어업인의 경우 골다공증 등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위험 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여성어업인의 특수환 작업환경을 고려한 특수건강검진은 여성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정책이라 평가됨.
- 검진 수혜율을 향상하기 위해 검진 항목, 시기, 장소 등 여성어업인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전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명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상담, 치료·재활 서비스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전문인력 확충 지원

[사업구조] 지자체 보조로 시·군·구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대한 보조금 지원

[주요사업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 ('23) 263개소 확충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정신질환자 수 감소 추진
  - ('21) 26.4명 → ('23) 6월 기준, 24.0명으로 감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체계 정비 및 정신응급병상 확보를 통해 지자체 정신응급 대응 기능 확대 추진
  - 지자체별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국비 기준 약 33억 원) 활용하여 119병상 확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참여 시·도 수	17	17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자체 단위 정신응급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현재 모든 광역시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었고, 모든 시도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적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로의 대체가 필요함.

과제명	[1-2-1-2] 취약농가 인력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사업목적]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고령·취약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생활 유지 도모

[사업구조] 농식품부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를 파견하고, 이에 대해 70% 비율을 민간보조로 임금 지급

[주요사업내용]

- 사고·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 인상
  - 영농도우미 지원예산(단가) : ('22) 8,960백만 원(80천 원) → ('23) 9,114(84)
-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사업 점검 실시
  - 사업 추진 적정성 및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증빙서류 적합성과 지원내용 점검 등
-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종합만족도 조사
  - (체감만족도, 필요성, 처리 절차 등) 89.4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만족도(점)	91.3	89.4	97.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인력의 인건비를 상향하는 등 사업의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함.
-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도 농촌 주민 또는 농어업인 경우가 많아 공급자 대상 만족도 조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의 종료에 따른 노인 및 취약가구 지원 확충을 위해 타부처 사업과 연계·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5">[사업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td></tr>
<tr><td colspan="5">[사업목적] 농촌의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백을 농업활동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td></tr>
<tr><td colspan="5">[사업구조] 각 지자체를 통해 사회적 농업 사업자를 심사·선정하여 지자체보조 형태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td></tr>
<tr><td colspan="5">[주요사업내용]
• 14개 시·도의 사회적 농장 및 협력기관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귀촌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등 실시
•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지역에서 현장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는 거점농장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력모델 발굴·적용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확대를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23.9월)
• 농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지속 확대
- ('22) 사회적 농장 83개소, 지역서비스공동체 22개소 → ('23) 92, 30</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사회적농업 지원개소수(개소)</td><td>90</td><td>92</td><td>102.2</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4.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사업이 다년간 지속되며 거점농장 운영, 수요조사를 통한 농장 선정, 모니터링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삶의 질 계획 비전과 목표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음.
• 농업을 사회적 약자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경제적 목적에서 벗어나, 농업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적인 만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목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각 50% 비율로 보조

[주요사업내용]

- 공공보육이용률 확대*를 통한 농어촌 영유아 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증진
  - 연도별 공공보육 이용률 : ('22) 37.8% → ('23) 40.0%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대상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도 포함하여 신청 기회 확대
  - 농어촌에 주로 분포되어있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회 부여하여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
- 국공립 장기 임차 신청 어린이집 사전적격심사 기준 등 완화
  - 농어촌 지역의 원아 감소, 운영 악화 실태를 고려하여 사전적격심사 내 정원충족률 기준 완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개소)	30	62	207.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1.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함.
-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해당 정책의 유연성과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예산 수립 시 시설의 신설, 매입, 임차 계획 등 현장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정교한 예산과 목표치를 세우는 것이 필요함.

과제명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공동아이돌봄센터)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목적]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부담 경감 및 농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구조] 각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대해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농촌 지역 어린이집 폐원을 막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
  - 농촌 지역 소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폐원을 억제하여 농촌 지역 보육 여건 악화 방지에 기여
- 사업 개소 수를 확대하여 농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에 기여
  - 사업 개소 수 : ('22) 98개소 → ('23) 108개소
- 소규모 어린이집의 지원을 위해 3인 미만 운영 어린이집의 지원 규정 마련
  - 현원 기준이 3인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1년 한정하여 지방 보육 정책심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도록 규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개소 수(개소)	108	108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변화하는 농어촌 환경 조건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
- 실질적인 보육 수요 충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농어촌의 보육시설 수요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함.
- 지원기준 완화가 한시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과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농촌 특례 조치들이 농촌형 평가인증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농번기 아이돌봄방)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취합한 사업 신청 내역을 농식품부에서 심사·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소에 대하여 시설비,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어린 자녀를 가진 농업인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23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시행기관 돌봄방 참여 아동의 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돌봄방 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98.2%
- 돌봄방 운영 제도개선
  - 운영 인원 수 완화 : 10인 → 7인
  - 주말선택제 : 토·일 필수 운영 → 토·일 선택 운영
- 농번기 돌봄방 운영 개소 수의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농번기 돌봄방 운영 개소 수 : ('22) 71개소 → ('23) 76개소
-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의견 경청 간담회 개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번기 아이돌봄방 만족도(%)	95.0	96.2	103.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운영 인원 수 기준 완화, 주말 토·일 선택제 도입 등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도개선을 한 실적이 우수함.
- 농업인 특수한 보육 수요 대응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수혜자의 이용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 돌봄방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말 선택제 도입이 농번기 보육 부담 경감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토·일 모두 운영하는 돌봄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과제명	[1-3-2-1]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목적]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시설 접근성 제고

[사업구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시·군·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운영비 부담 완화로 서비스 지속 제공 유도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운영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통학 차량 서비스 지속 제공
- 농어촌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활성화
  - ('22) 36.6%(6,701대/18,292대) → ('23) 37.3%(6,200대/16,609대)
- 보호자 및 영유아의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통학 차량 운영으로 대중교통 및 보호자의 보육여건(자차 유무, 보호자 통학 가능 여부 등), 어린이집과의 물리적 통학 거리 등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전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및 이용 영유아 및 보호자의 편의성 제공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100.0	92.6	92.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5.3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기존보다 농어촌의 차량 운행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어 운영 효과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어촌 어린이집 수 감소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당 차량 운영 지원 금액 상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에 있어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3-2-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

[사업목적] 농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사업구조] 지자체별로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교사 수급 유도를 통한 농어촌 지역 보육의 질 제고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11만 원/월) 지원
  - '23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예산 현액 24,572백만원 100% 집행
  - '23년 농어촌 등 소재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평균 36,644명 수당지원
- 2023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항 안내 실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국비 지원 실적	100	1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1.3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한 국비 대 지방비 지원 비율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농촌 지역 보육시설 이용률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 등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1-3-2-3]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사업목적]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도서 및 놀잇감을 대여하고,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업구조] 이동식 어린이집 운영기관에 대해 각 지자체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보조금을 교부

[주요사업내용]

- 농촌에 특화된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보육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농촌 지역에 차량이 방문하여 놀잇감 대여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
- 기존 예산 구성을 인건비 60% 이내 제한기준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구성토록 하여 사업자의 재량 강화
- '23년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을 통해 여러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 단위 사업자를 우선 선정 및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원 수(개소)	12	12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2.1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도서 및 장난감 등의 단순 대여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보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한 것은 적절하나 유형별 모델을 정립하여 사각지대 및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과제명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비 지원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농촌·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실적) : ('21) 328천 세대 → ('22) 337 → ('23) 356
- 농업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지원 세대 확대하여 사업 예산 확보
  - 건강보험료 월평균 예산 : ('21) 167,526백만 원 → ('22) 185,310 → ('23) 232,138
- 2023년 보험료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체감만족도, 필요성, 처리 절차 등 종합만족도는 85.2점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업인 월평균 지원세대(천세대)	330	356	107.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외국인 대상 지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함.
- 현행 사업은 읍·면 거주 농업인에게만 지원하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 소득이 적은 농업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함.

과제명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농업인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비 지원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23년도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여 월 최대 지원금액 1,350원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월 최대 지원금액 인상 : ('22) 45,000원 → ('23) 46,350원
- 농업인 지원 자격요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등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수(천 명)	511	539	105.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대상 홍보 리플렛 발송, 문자메시지, 온라인 뉴스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며 적극적 행정을 실현함.
- 현행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농업인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음. 더 많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위한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어업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및 국민연금공단(연금)에 자금을 교부

[주요사업내용]

- 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최대 28% 지원
-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약 5,80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 물가 인상 및 어업인 평균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어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준소득액 : ('21~'22) 100만 원 → ('23) 103만 원
  - 연금보험료 : ('21~'22) 45,000원 → ('23) 46,350원
  -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 : ('21~'22) 6,844백만 원 → ('23) 6,963백만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백 명)	164	187	114.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9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따른 비용 보전,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노령연금 수급액이 증가하였음.
- 자격요건 미충족자 지원 제외,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이라는 개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요구됨.
- 외국인 어업근로자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신규어업인 등 유입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

과제명	[1-4-1-4]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

[사업목적]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한 안전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사업구조] 수협중앙회를 통한 법정 민간 대행사업으로, 국비를 통해 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주요사업내용]

- 재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882건/1,542백만 원)으로 어업인의 생활 안정 도모
-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위험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산재형)
  - 외국인 가입현황 : ('22) 347명 → ('23) 2,619명 / 2,272명↑
- 입원(휴업)급여금 및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입원 의료비) 보장 확대
  - 입원(휴업)기여금 : (기존) 1일당 2만 원 → (개선) 1일당 4,6 (상품유형별)
  -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입원 의료비) : 보상한도 (기존) 200만 원 → (개선) 5,000
- 어업인 고령화에 따라 가입연령을 확대하여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복지 향상
  - 가입연령 : (현행) 만 15 ~ 87세 → ('24년) 만 15 ~ 90세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업인안전보험 가입률(%)	58.3	67.1	115.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를 가입자 수에서 가입률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됨.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의 최종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가입률을 어느 정도로 높여야 하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가입자의 이탈 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사업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사회보장 지원

[사업구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 시행기관인 NH농협생명보험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을 체결하고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업 관련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지원

[주요사업내용]

- '23년 가입 인원이 953천 명에 달하고, 58천 명의 농업인에게 9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보험으로써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농촌 고령화 추세 등 고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 확대
  - (기존) 일반1형 87세, 일반2·3형 84세 → (개선) 일반1·2·3형 87세
- 법무부, 농협 등과 협의하여 농가 경영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보험 가입 선택지 확대
  - (기존) 비법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필요 → (개선) 산재보험 대신 '안전보험(산재형)'을 가입하더라도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 재해예방 교육 이수자 대상, 보험료를 할인하여 농업인의 부담 완화 및 농작업 재해 예방 강화
  - 할인율 : (농업인 안전보험) 5%, (농기계 종합보험) 3% 할인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65.2	66.4	101.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민영보험사의 보험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조를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농촌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한 가입 가능 연령 확대, 재해예방 교육 이수자 대상의 보험료 할인 등 기존 제도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짐.
-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사업목적]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한 연근해 어선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

[사업구조] 수협중앙회를 통한 법정 민간 대행사업으로, 국비를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주요사업내용]

-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어업인 부담금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입·출항 정보,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정보 등을 공유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가입 사업장(어선) 최소화
  - 어선원보험 가입 인원 : ('22) 54,649명 → ('23) 55,263명
- 보험 해지 환급률 확대
  - (기존) 각 70% → (개선) 어선 90%, 어선원 100%
- 어선 안전설비 구축 시 보험료 할인 확대
  - 어선 내 양망기 무선 긴급정지장치 설치 시 보험료 1% 할인
- 어선 선체 수리비 확장 특약 및 어선 충돌손해 배상책임 확장 특약 신설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선원보험 가입률(3톤 미만, %)	10.8	12.4	114.8
어선보험 가입률(10톤 미만, %)	33.5	37.0	110.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납부 방식 개선, 재해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 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실행방식과 체계를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고자 노력함.
- 현재 어선원보험 가입률 12.4%(3톤 미만), 어선보험 가입률 37.0%(10톤 미만) 등으로 각각 목표 대비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여, 정책보험으로써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함.
- 보조금 지급 적정성에 대해 정부에 의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명	[1-4-2-3]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사업목적]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사업구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재해 현황 조사, 예방, 재활 관리 등 관련 부문의 연구를 수행

[주요사업내용]

-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12,000가구) 및 농업인 건강 안전 DB 구축
  - 국가승인 통계 포털 및 농업인 안전365 등을 통한 대국민 통계 자료 제공
- 농작업 안전관리 지침 및 환경개선기술·안전 장비 개발
  - 한우 사육자 개인보호장비 세트·보관함 및 활용 가이드 개발
  - 소규모 시설하우스 수확 상자 운반 편이 장비 시작기 개발
  - 과수 농업인 요추 부담에 대한 정량적 생체 데이터 도출
- 농작업 안전 정보서비스 및 편이 안전 장비 성과확산 기반 구축
  - 국내 최초 농작업 안전 전시체험관 공간 구축 및 공간 조성을 위한 자료 제공
  - 농업인 안전365·중앙 DB센터 개편 및 대외 정보시스템 연계한 콘텐츠 제공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결과 활용 건수	5	16	32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농작업 재해의 위험성 및 예방 노력의 중요성을 농어촌 주민에게 전달하고, 실천적 예방대책 도출을 위한 기반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실행 노력이 강구되어 고령 농촌지역의 재해예방 서비스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
- 논문, 정책 제안, 영농활용 과제 등이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 적용성을 중심의 성과지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과제명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

[사업목적]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실천 제고

[사업구조] 각 마을의 사업 신청을 지자체에서 심사·선정하고,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 실시

[주요사업내용]

- 안전에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위험 요소 개선 지원, 농업인 안전 실천 교육·홍보 등을 통한 농작업 재해 발생 감소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 ('22) 57.8% → ('23) 60.9%
  - 농작업 위험성 감소율 : ('22) 71.6% → ('23) 75.3%
  - 농작업 사고 발생 감소 : ('22) 67.5% → ('23) 69.5%
- 지자체 안전재해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 보급 및 안전 조례 제정
-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운영 행정규칙 개정
- 부·청·농협 협력 사전예방-사후보험 연계 구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60.5	60.9	100.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작업 위험 요소 개선 지원, 농업인 안전 실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 개별 농업인이 아닌 자발적인 사업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과나 만족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작목별 안전사고 발생사례 등을 기초로 취약 농작업 위험 요소 개선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고, 관련 예방사업을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5]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

[사업목적]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사업구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계획 수립, 재해예방 홍보·교육·실태조사 실시

[주요사업내용]

- 어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매뉴얼, 응급처치키트 제작
  - 양식어업 3종(육상, 해상가두리, 해조류)에 대한 예방 매뉴얼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번역본(인도네시아어) 제작, 안전 재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키트 제작(700개)
- 어업작업용 스마트 안전모 개발 보급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특허(2건): 안전모와의 탈착이 가능한 헤드밴드식 충격 감지장치, 안전모용 착탈식 충격 감지 프레임, 디자인(1건): 안전모용 충격 감지구
- 어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 우리원 누리집 업로드(안전교육海)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업인안전재해 예방교육실적(건)	42	48	114.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업종별(육상, 해상가두리, 해조류) 안전재해 예방교육 매뉴얼과 외국인종사자를 위한 외국어 제작, 응급처치 키트 제작 등 현장수요에 따른 대응과 현장 만족도 역시 높은 성과를 이끌어냄.
- 향후 추진체계를 행정기관이나 수협 중심으로 변경하여 현장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6]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목적]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어선안전장비를 보급·지원하고,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통한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사업구조] 어선 안전 장비 보급에 대한 교부금(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및 안전조업 교육 실시에 대한 보조금(국비 100) 지급

[주요사업내용]

- 어선건조, 안전장비 개발·보급, 안전조업교육 내실화, 점검·단속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어선 숔주기 안전대책」마련
- 전복·화재 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 유발 어선사고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실습형·체험형 교육 확대
-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선원(외국인 포함)도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플랫폼 운영('23.1~)
- 안전조업교육 전문강사, 시설 인프라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교육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운영
-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5톤→10톤 미만)하여 검사 비용 절감 및 조업일수 확보하게 하는 등 어업인 편의 향상
-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복잡한 위치통지 횟수·방법을 개선하여 어업인들의 조업·휴식을 보장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연근해어선 안전점검 이행률(척)	3,000	3,213	107.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어선 건조, 안전 장비, 안전 조업 교육, 점검·단속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어선의 전주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등 정책적 노력과 성과가 나타남.
-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5인 이상 사업장)으로 10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 적용됨으로써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관리는 향후 강화되어야 함.

과제명	[1-4-2-7]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위험도 평가·예측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개발 사업

[사업목적] 연안안전 위험도 평가 표준화 체계 수립 및 통합시스템 개발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사업 기관을 선정·협약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이 연구 수행

[주요사업내용]

- 국민이 해양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의 안전도를 공개하여 사고 예방력 강화
  - 연안안전 위험도 예보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시범운영
- 연안안전사고 예방 관련 첨단 기술력 확보
  - 위험성 평가 체계,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등에 관련된 논문 5건, 특허등록 2건, TTA 인증 3건 달성
-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 성과 도출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1·2차 : 연안안전 위험도 평가기술 표준화 체계·통합시스템 개발
  - 3·4차 : 해경 및 국민 대상 연안안전 매뉴얼 개발 및 통합시스템 최종 시연
- 지능형 CCTV 설치구역 확대(계획 5개소 → 실적 6개소)
- 연안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SAR 시스템 정확도 고도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연안활동장소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달성도(건)	15	1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4.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1.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1.7

주요 평가 의견

-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연구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성과 발생까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안 안전 위험도 통합시스템이 선제적인 예방효과와 사고 시 구조 등 해경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사업 특성상 시스템 개발 이후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정량, 정성적 평가를 통해 연안 안전 위험성 평가, 예측, 실시간 대응 등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2-8]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안전망 구축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해양 인명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고도화

[사업목적] 해양경찰과 민간구조세력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수난구호 및 해양사고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선진 바다 안전망 구축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이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동 지원

[주요사업내용]

- 민간구조세력의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 등 적극 구조참여 민간에 대한 적정한 지원 보상 확대 추진
  - 동원수당 상향 : '22년 60,500원 → '23.2.23.부터 76,960원(27%↑)
- 민간해양구조대원 대상 다양하고 긴박한 구조상황에서 인명구조와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색구조·응급처치 등 전문교육 체계 마련
- 민간해양구조대원 구조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 단체보험 가입 지원과 활동지원 및 단체의식 제고를 위한 하계 활동복, 기동복 등 피복 지급
- 신규 민해대 조직편성 및 구조자원 영입으로 우수한 민간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민간구조경진대회 개최로 구조협력 인프라 구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전체 해양사고 대비 민간해양구조 비율(%)	12.5	15.8	126.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민간구조활동을 위한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강사를 채용,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실적이 확인됨.
-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부심 제고를 위한 민간 구조유공 포상 등 공익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지속가능한 활동에 기여함.
- 해경 등 공공의 활동으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가, 지역 간 갈등과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 바다 활동 기회 증가에 따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함.

과제명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소형어선 생계형 경미범죄 계도 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노출된 소형어선 대상, 해양사고 심각성의 적극 홍보, 치안 활동 강화에 따른 사전 예방 활동과 경미 범죄 심사제를 활용,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이 사업 주체로서 직접 계도 활동 실시

[주요사업내용]

- 어족자원 관리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협업으로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선사고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국민생명 직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상·하반기)
  - ('22)동기간 검거 대비 11건 증가 ('22) 954건 → ('23) 965건
- 각 경찰서에 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사안별 경감·훈방 조치
- 어선안전분야 등 해양수산부 등 해수산 관계기관간 선박·어선 등 해양 관련 제도·법령에 관한 개선 및 협력 체계 논의(6.23, 제주청)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경미범죄 심사제 이행건수(건)	160	248	155.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해경청 등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의 노력이 추진됨.
- 국민소통 간담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구성 개최하는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함.
- 어업인의 생계형 경미 사안에 대한 감경 처분 및 전과자 양산 방지로 인한 어업인 삶의 질 개선에 사업 효과가 있으나 행정 간소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지연금사업

[사업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사업구조] 농어촌공사를 농지연금운영자, 농지관리기금을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 농업인 가입자에게 농지를 담보로 한 연금 지급

[주요사업내용]

- 농지연금 도입 이후('11~), '23년 말까지 누적가입 건이 2만4천 건에 달하고 1조 3,534억 원(누적)의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가입 건당 월평균 103만 원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월 지급금 : ('21) 건당 95만 원 → ('22) 99 → ('23) 103
- 농지연금 가입 가입요건 완화 및 상품유형 추가로 가입대상 확대
  - '22년도 가입자 연령 인하(65세→60세)에 맞추어 공사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승계 연령도 하향(60세→55세) 조정
- 임대형 우대상품 출시
  - 담보농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담보농지를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도입
-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
  - (기존) 3년에 1회씩 중도상환 허용 → (개선) 언제든지 중도상환 가능
- 농지연금 채무상환 방법 확대
  - (기존) 약정종료 후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 실시 → (개선) 기존 + 담보농지 매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지연금 가입건 수(건)	24,075	24,590	102.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가입요건 완화,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 및 농지연금 채무상환 방법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농지연금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소득 현황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우수사례로 제시한 MOU 체결 계획안에 더해 실제 계약 체결과 관련한 증빙이 더해졌다면 더욱 명확한 제시가 되었을 것이라 판단함.

과제명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담당부처	농림수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재해보험 사업

[사업목적] 정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

[사업구조] 농작물, 가축 등 품목에 따라 피해 농가와 보험계약을 맺은 각 민간 보험 사업시행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료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요구에 따라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도입 필요성, 필요통계 보유 여부 등 보험상품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신규 품목 도입
  - '23년에는 귀리, 시설감자, 양상추를 신규품목으로 도입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통해 '24년 신규 도입 품목 3개(두릅, 블루베리, 수박) 선정('23.6)
- 농가가 선호하는 고(高)보장상품(보장수준 90%·85%형)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고보장 상품 미도입 품목에 새롭게 상품을 도입하여 농가 선택권 강화
- 밭작물 재배 초기에 발생하는 재해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식·재파종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식·재파종 특약 신설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50.0	52.1	104.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제도개선을 검토함.
- 신규품목 도입, 고보장 상품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실적 있음.
- 기후변화시대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서 작목의 확대와 고령농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사업목적]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에 기여

[사업구조] 사업 시행 주체인 수협중앙회에서 수립한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해수부가 검토·승인하고,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보조금 집행

[주요사업내용]

- 재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보험금 지급하여 어가 경영안정 도모
  - 238어가, 106억 원, 평균 지급액 4,417만 원
- 보험료율을 작년대비 0.1% 인하하고 고수온 관련 특약 보험료 할인제도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 저층수 이용시설 5%, 저밀도 사육 어가 5%
- 고손해율 양식장, 자연재해 발생 시기,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양식장 현장점검으로 재해 대비 강화
  - 종합수질측정기(10대), 항공드론(3대), 수중드론(7대), 수중카메라(3대)
- 양식시설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 확대 및 시설물에 한정하여 육상 종자 시설물 보장 상품 도입
- 고손해율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보험가입금액 90% 제한 기준 삭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비율(%)	33.1	39.8	120.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5.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재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보험금 지급으로 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가입률 감소 이후 30% 미만이던 양식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반등하여 감소 전 수준으로 회복함.
-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지만, 장기적인 보험 가입률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순차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1-4-3-4]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5">[사업명] 경영이양직불사업</td></tr>
<tr><td colspan="5">[사업목적]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td></tr>
<tr><td colspan="5">[사업구조] 농어촌공사가 연중 사업을 접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td></tr>
<tr><td colspan="5">[주요사업내용]
• '23년 고령 농업인 6,175명에 대해 16,566백만 원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에 기여
• 기존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지원대상, 단가 등을 확대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으로 개선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업인의 미래농업 준비 등 지원
• 사업 대상 농업인 요건 확대, 지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을 폭넓게 보장
- (가입연령) 65세~74세 → 65~79세 / (지급기한) 75세까지(2~10년간) → 84세까지(6~10년간) / (지급단가) 약 2배 수준 인상</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경영이양직불 수혜자 만족도(점)</td><td>88.4</td><td>88.3</td><td>99.9</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5.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6.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8.6</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높아 수혜자가 긍정적으로 체감할 만한 효과를 도출했다고 평가됨.
• 향후 신규사업으로 확대·개편되는 만큼 정책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도 요구됨.</td></tr>
</table>

과제명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여성경영주 등록확대)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공동경영주 제도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및 출산급여 지원대상 확대

[사업구조] (공동경영주 등록) 지자체를 통해 여성농업인 경영체 등록 현황을 파악 및 공유, (출산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출산급여 지급

[주요사업내용]

-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된 만큼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 적극 유도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여성 농어업인도 출산급여 수급(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19.7~)되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등록 필요
-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록율 제고
  - ('22) 32.4% → 36.8%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중 여성농업인 비율(%)	33.3	36.8	110.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1.3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여성농업인의 모성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권리 향상과 농촌 저출생 완화 등에 기여함.
- 보건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이 산전 검진 시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등록 비율을 성과지표 설정한 것은 적정하나 출산 급여 지원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검토가 보충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1-4-3-6]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통한 도농 복지 격차 해소 및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

[사업구조]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수요조사, 과제 공모, 진도관리 및 평가 후 아젠다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 평가 실시

[주요사업내용]

- 농업인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일하고 싶은 농업분야 직업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 일·생활 균형 교육프로그램 활용 워라밸런스 카드 개발
- 여성농업인 창업 및 성장 역량 측정 지표 개발 및 KOPIA 대상국 농촌여성 통계집 발간
- 농산업분야 일·생활 균형 정책 개발 및 확대,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 기반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추진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및 컨텐츠 개발 등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기술 개발(건)	2	7	35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책 대상에 다양한 연령 및 상황의 여성을 포괄함.
- 컨텐츠 개발의 구체적 실적이 도출되었고, 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좀 더 도전적인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th><th>담당부처</th><th>교육부</th></tr>
<tr><td rowspan="5">과제 개요</td><td colspan="5">[사업명]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사업</td></tr>
<tr><td colspan="5">[사업목적]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 및 등·하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 보장</td></tr>
<tr><td colspan="5">[사업구조] 시도교육청이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교육지원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버스 관리 운영계획 수립. 각 학교는 통학버스 운영 및 관리</td></tr>
<tr><td colspan="5">[주요사업내용]
• 2023년 농어촌학교 희망 포럼을 통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 마련 및 농어촌지역 통학 여건 개선 논의
• 농어촌 학교 중 통학버스 운영 학교 및 이용 학생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시·도교육청 소관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내 교육기관 근무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 청취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 및 등·하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통학버스 차량 수를 확대하고 노후 버스 교체 추진</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농어촌 초중고통학버스 제공 비율(%)</td><td>56</td><td>56</td><td>100.0</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5.9</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와 농어촌학교 희망 포럼 등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 차량이 부족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간 통학 수단 공유 등 지역 내 거버넌스를 통해 통학 차량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2-1-1-2]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목적] 농·어촌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및 학교 적응력 제고

[사업구조] 교육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시도교육청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지정 후 각 학교는 다문화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주요사업내용]

- 이주배경 학생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수립·발표
- 다문화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내 관련 조항 신설
  - 다문화학생 정의(내국인+외국인), 국가·지자체의 시책마련 의무, 실태조사 근거 및 한국어 학급 등 특별학급 설치·지원 근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 등
- 다문화교육 담당자 워크숍(7.17.), 다문화 교육정책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9.18.) 등을 통해 다문화교육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 한국어학급 운영 수(수)	70	72	110.0
농어촌 지역 대학생 멘토링 비율(%)	27	32	118.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2.0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7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최근 농어촌에 중도입국 다문화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대상자 및 성과지표 설정,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음.
- 다문화학생 및 관련 조사를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개선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2-1-1-3]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 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사업목적] 실제 농어촌 거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거주기간, 대상 지역 설정 등 농어촌 특별전형 내실화

[사업구조] 4년제 및 전문대학은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농어촌 특별전형 및 지역인재 전형과 관련한 지원 자격 및 운영방식을 포함

[주요사업내용]

-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및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등 「고등교육법」('21.9.24.) 및 동법 시행령('22.2.28.) 개정(추진 완료 과제)
-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최소 선발 비율을 규정한 「지방대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21 추진 완료 과제)
- 교육발전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 규모 확대('23.12., 교육발전 특구 추진계획)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7.6	8.8	112.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음.
- 농촌지역 거주 조건을 6년으로 확대한 부분과 의약학 분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규정은 의미가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선발 의무화나 비율 확대는 한계가 있음.

과제명	[2-1-1-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사업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구조] 한국장학재단이 국비 출연금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

[주요사업내용]

- 23년 학자금 융자 15,219명, 400억 원 시행
  - 전년 대비 인원 16.1%, 금액 22.4% 증가
- 농촌 학자금 융자 수혜 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
- 농어업 종사자의 교육비 경감 및 우수한 미래 농어업 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거주요건 완화
  - 농어업 종사 시 농어촌 거주 불필요
- 농촌학자금융자 채무자 상환유예 중복신청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농어촌 가계 상환 부담 경감
  - 상환유예 중복 신청 대상을 기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 코로나19 실직 및 폐업에서 출산까지 확대(자녀 1명당 3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혜자 만족도(점)	95	95.3	100.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출연금 및 융자상환액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관리되고 있음.
- 농어업 종사 시 농어촌 거주요건 완화, 상환유예 중복신청 허용 사유 확대 등 학자금 융자 지원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적절하게 수행함.
-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이나 타 국가장학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전문가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과제명	[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식품 우수 후계인력 육성 도모

[사업구조] 사업 시행 주체는 농어촌희망재단이며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원됨

[주요사업내용]

- 장학사업 운영위 심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23년 장학생 선발 시행계획 및 선발 안내 지침에 반영하여 농업인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진로계획서 작성 서식 간소화, 계속자의 영농활동실적 완화(25시간→20) 및 온·오프라인 교육 중 자율 선택 가능
  -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시 매학기 제출서류를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개선, 다자녀 및 기초·차상위구간 장학금 확대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제도개선
  - 다자녀 및 기초·차상위구간 장학금 지원 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지원계획대비 지원실적(백 명)	55	40	72.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2.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영농후계 대학 장학생 진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사업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짐.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사례가 제시됨.
- 다양한 장학사업 대상별 사업 추진 계획, 실적, 효과 평가 및 개선 노력이 구별되어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 개선이 필요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6">[사업명] 수산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사업</td></tr>
<tr><td colspan="6">[사업목적] 수산계 고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우수 해양·수산 후계 인력 육성 도모</td></tr>
<tr><td colspan="6">[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농어촌희망재단이 선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td></tr>
<tr><td colspan="6">[주요사업내용]
• 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지역 고령화, 어가인구 감소 대비 수산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할 전문적인 후계 청년 인력양성을 통한 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수산계고교생 114명, 수산계대학생 28명 총 142명 장학금 지급
• 후계어업인을 포함하여 수산 어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젊은 층 인력확보를 위해 어업 취·창업장학금을 확대 추진</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 colspan="2">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장학금 수혜자(명)</td><td colspan="2">142</td><td>142</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5.3</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7.3</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9.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최근 어촌 지역의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청년(특히, 고교 재학생 및 미래 수산계 종사자) 어업인을 육성하며 귀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비전과 부합함.
• 정책 효과를 장-단기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추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 장학금을 수혜를 받은 재학생이 농수산업 후계인력으로 양성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학교 시설 안전 강화

[사업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시설의 정밀 안전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 사전 발견·제거

[사업구조]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예산 교부

[주요사업내용]

- 학생 및 교직원의 생활 안전망 강화
  - 노후시설의 정기적인 정밀 안전 점검 및 진단 실시로 보수·보강, 개축 등 중·장기 시설사업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재해 현장 안전 점검 및 재해복구비 지원 제도 개선
  - '23.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복구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 지원 절차·기준을 개선하여 피해 학교 지원(총 33개교, 146억 원)
- 반복적인 학교 주변 자연·인공 비탈면 붕괴 사전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평가 추진 등을 통한 예방중심적 사업으로 확대
  - 학교 주변 비탈면 조사 → 전문가평가 → 위험도에 따른 보수·보강 예산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정밀점검 건물 수	1,419	1,921	135.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5.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3.9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만족도 조사와 학교 안전 강화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음.
- 학교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농어촌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사업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과제명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사업목적] 도시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사업구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며, 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등 지원 사업 수행

[주요사업내용]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 및 질 제고
  - 2023년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23개 교육지원청 참여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 105억 원 지원 추진
  - 전년 대비 95억 증액
- 2023년 농어촌 참 좋은학교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대상 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점)	4.2	4.2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및 질 제고 등 농어촌 교육 서비스 강화의 사업 효과를 충분히 도출하고 있음.
-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별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우수 학교의 사례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중심으로 제시되어, 사업 추진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우수사례가 좀 더 제시되었으면 함.

과제명	[2-1-2-4]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미래교육지구

[사업목적] 미래교육지구를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모델 개발

[사업구조] 부처 지원금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매칭 투자하여 선정된 지구 지원

[주요사업내용]

-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특화 프로그램 추진
  - 미래교육지구를 지역협력 플랫폼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연계 추진
-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과 교육부 간의 정례회 및 권역별 협의회 개최
  - 미래교육지구 위탁기관(공주대 지방교육정책개발원),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33개 미래교육지구
- 미래교육지구 지정 규모 확대 ('21) 22개 지구→('22) 33개 지구 및 지원예산 확보 ('21) 24억 → ('22) 33억 → ('23) 35억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역수(개)	33	33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2.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이 아닌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과 학교 간 연계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대표적인 연계사업이라 평가함.
- 농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있어 새로운 혁신 교육 모델 개발 및 청년 및 중년 세대의 농촌 유입에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과제명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사업

[사업목적]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실현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시·도 교육청을 거쳐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교부금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학교급별 특성, 사회변화, 학생관심도를 반영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지원
-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발표('23.1.9.)
  - (미래교육 신수요)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
  - (소규모·수준별 강좌) 학생 맞춤형 교육,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강좌 개설 지원 및 수준별 고품질 강좌 확대
  - (농어촌 특화 지원)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모듈·패키지형 프로그램 구성 및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강사 공급 문제 해결
-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방과후 질 제고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모델을 발굴·확산
- 늘봄학교 성과보고회 등 교육 기부-늘봄학교 박람회 개최 (11.30.~12.3.)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만족도(%)	85.2	86.3	101.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4.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소규모 학교의 교육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미래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임.
- 장기적인 효과를 추정할 학생들의 능력증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은 아닐지라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과제명	[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목적] 온라인 진로 특강, 진로 상담, 진로 멘토링 등을 통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소재 학생 대상 진로 탐색 기회 제공 확대

[사업구조] 시·도교육청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으로 위탁 운영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도서 지역 등 진로 체험 소외지역 대상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운영을 통한 소외지역 소재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군 단위 이하 참여학교 909개로 전체 참여학교의 약 40% 차지
- 학교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주문형 수업 확대 노력
  - 수업 참가 교사 및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 수요에 따른 시도별 맞춤형 수업 제공 운영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개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군 단위 이하 지역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참여학교 수(건)	200	909	454.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6.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이 불편하여 진로 강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도서벽지에 소재한 소규모학교 지원 등, 학교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임.
- 전체 참여학교의 40% 가량이 군 단위 이하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평가함.
- 본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멘토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온라인), 진로 의식에 대한 고충을 상담해 주는 소통 창구가 마련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함.

과제명	[2-1-2-7]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교육 소외지역 교육 여건 개선사업

[사업목적]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개선 지원 및 학점제형 교육 여건 조성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 선정·관리. 시·도교육청은 각 세부 과제 수행

[주요사업내용]

- 지역 내 교육 협력 활성화를 통한 교육 소외지역 학교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보통교과 일반·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편성
  - 지역 공동교육 협력모델 개발, 대학 연계 프로그램 발굴, 농산어촌 학교 학점제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
- 학습 곤란 학생에 대한 학업 설계 지도 및 심리상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생 학업 동기 고취
- 도·농 지역 학교 간 매칭을 통한 공동교육 프로그램 및 과목 이수 지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교육 생태계 구축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사업 예산 총액 중 고교학점제 도약 지구 예산 비율 확대
  - ('22) 45.6% → ('23) 49.5%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교육 소외지역 교육 여건 개선사업 참여 교육청 수	10	1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도·농 학교 간 매칭을 통한 공동교육 프로그램 및 과목 이수 지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교육 생태계 구축 등 정책 효과를 제고함.
- 본 사업이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서 정책홍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음.

과제명	[2-1-2-9] 농촌유학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유학 지원사업

[사업목적]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사업구조]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 추천 공모로 사업대상자(농촌유학센터)를 선정,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촌 생활· 학교체험 지원을 통해 농촌 내 도시 학생 유입 증가,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농촌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지역 교육 서비스 제고에 기여
- 농촌유학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농촌유학 지속 성장 및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유학센터 평가지표 마련하여 진단평가 및 컨설팅 실시
- 원활한 학생 지도 및 센터 운영을 위해 농촌유학센터 내 상근종사자 최소 인원 기준 및 지원기준 금액 규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유학센터 지원 개소 수	25	2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6.1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농촌유학 진단과 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검증 및 정책 수혜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함.
- 성과지표로 구체적인 산식(예: 도시→농촌 학교 전입학생 수)을 설정하여 사업성과 지표로 관리한다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과제명	[2-2-1-1] 농어촌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목적]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주요사업내용]

- 문해교육 지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능력조사 실시(3년 주기)
  - '23년 제4차 조사 실시
-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문해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규 지원 실시
  - 17개 시·도 90개 기관
-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시범 사업 운영
  - 고연령 성인, 농산어촌 여건 맞춤, 학습자 특성 기반 다양한 시범 모델 운영 추진 (총 9개 지자체 광역 거점기관 14곳 선정·지원)
- 문해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야학, 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선정·지원
  - '23년 전국 176개 지자체 내 484개 문해교육 기관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문해교육 참여 학습자 수(명)	20,862	24,526	117.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실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함.
-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의 서비스 여건을 별도로 고려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한편, 농어촌 지자체 및 학습자에 대한 실적 집계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이 많고 사회시설이나 인프라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 맞는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뿐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2-2-1-2] 농어촌 노인문해 교육(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사업목적]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구조] 농식품부에 지침에 따라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수행하는데 국고 지원

[주요사업내용]

- 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주민 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
- 현재 지원대상 지역은 "면단위 이내 주민공동체"로 한정되어 있어, 읍 지역 주민공동체 중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
  -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또는 면 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생활권인 읍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혼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동체 운영 및 평가 연계성이 낮은 '수요조사·분석'에 대한 선정기준 조정, 공동체 자체 사업운영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수행 확대 도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공동체 지원 개소 수	135	137	101.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노령화 정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마을 단위의 활성화 사업이나 목표가 다를 수 있어서 마을 단위의 활성화 조직 지원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로 공동체 지원 개소 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다소 평이한 지표로 판단되며,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과제명	[2-2-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담당부처	교육부

과제 개요

[사업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사업목적]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사업구조] 교육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지자체를 선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과관리 및 자료개발 수행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규모를 지속 확대
  - ('21) 309개 운영 → ('22) 430개 운영 → ('23) 519개 운영
-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 예산 확대
-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의 인구감소 위기, 지방 소멸 대응 등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자 토론, 의견수렴 실시
-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사업 물량 할당 및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프로그램 이수율(%)	90.0	90.5	100.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모를 지속 확대함.
- 평생학습도시 신규 및 재지정 평가 등에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기반 확충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과지표로서 읍·면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 고령사회 어르신의 문화 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적 역할 및 소속감 확대

[사업구조] 문체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원협회가 사업 공모·심사하여 문화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어촌 프로그램 지원 현황: ('22년) 115개(58.1%)→ ('23년) 123개(75.5%)
- 문화 활동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집에서도 쉽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프로그램(총 5종/영상 15건)을 제작·배포
-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3년에는 사업 방식 및 성과평가 방식 개선
  - 사업 방식: ('22) 중앙 심사 → ('23) 광역지역별 심사
  - 성과평가 방식: ('22) 참여자 만족도 → ('23) 참여자 만족도 + 사전·사후평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89.6	89.7	100.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비대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 수혜자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운영방식과 평가방식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임.
- 단년도 일회성 지원방식에서 연속 지원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함.
-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기와 장소 등을 농어촌 지역 및 어르신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2-2-2-3]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사업목적] 농업·농촌 내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사업구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한 전문 강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강의 진행

[주요사업내용]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및 선정, 신규 강사 과정 80시간, 보수 교육과정 14시간 운영
  - 전문 강사 육성,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양질의 성평등 강의 운영·지원 (성평등 전문 강사 47명 선정: 신규 15명, 재위촉 32명)
- 교육성과 보고회 등 수강생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내 반영(교육 일정, 필기시험 일자, 세부 프로그램 등)
- 농업·농촌 교육기관 협의회 개최 및 교육기관에 성평등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토록 안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신규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인원(명)	15	1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여성농업인을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여성농업인 단체 및 농업농촌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과거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전문 강사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 및 모니터링이 실시되면서 교육프로그램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평등 교육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차별화 노력의 관점에서 사업내용 및 방식, 성과지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과제명	[2-3-1-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목적]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청년 문화 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구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양성기관(지역주관기관)을 선정, 양성기관별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 교육 및 통합과정을 운영

[주요사업내용]

- 지역 기반 전문가 및 기 수료생 등이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여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문화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 지역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인 활로 개척 및 경제 활성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증진
-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참여자 통합 성과공유회 개최,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상호교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 ('23) 양성기관(7곳) 및 컨소시엄(8곳) 등 15곳 기관·단체 참여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참여자 수(명)	330	370	112.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적절히 수행하여 정책 효과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함.
-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별도로 갖춰져야 함.

과제명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사업구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 교부, 가맹점 관리 등의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역 주관처 운영·감독을 담당

[주요사업내용]

- 고물가로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55만 명으로 지원 인원 확대
  - 수혜 인원 : ('22) 232만 명 → ('23) 255만 명(전년 대비 10%p↑)
- 매년 이용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받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재충전 실시
  - 자동재충전 인원 : ('22) 170만 명 → ('23) 196만 명
- 가맹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용자(농어촌, 장애인, 고령자 등)들을 위한 전화결제가맹점, 찾아가는(모셔오는) 문화서비스 추진
- 복지부 협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권리구제 서비스' 확대
  - ('22) 3회/84,330명 → ('23) 4회/103,641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만 명)	267	255	95.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 발굴을 위한 권리구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발급자 수가 증가함.
- 가맹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용자를 위한 전화 결제 가맹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추진함.
- 문화 취약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여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었는지 함께 점검하여, 양적인 범위를 넘어 질적 수준의 문화 격차 해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2-3-2-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및 정보·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

[사업구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기본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공모로 선정된 110개 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주요사업내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실시
  - 운영 기관 사업비 매칭(10%) 및 참여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범위 확대로 찾아가는 도서관 수혜 대상 증대
- 지역에서 섭외하기 어려운 인지도 있는 그림책 작가를 본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어린이들이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 13,697책을 직접 제공하여 책을 직접 소유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서점을 활용하여 책을 구입함으로써 지역서점 살리기에 동참하는 효과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 운영기관 수(개)	110	11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5.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5.2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참여 어린이들의 만족도 및 재참여 의향이 높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실력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 사업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되려면 농어촌 수혜 비율을 설정하는 등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사업목적] ①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운영,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② 지역박물관과 초등학교 협업을 통해 상호 교육의 발전과 상생 도모,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사업구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박물관 및 지역 선정, 전시 버스 운영, 지역 박물관 및 초등학교 연계 체험활동 등을 직접 수행

[주요사업내용]

- 지역별 어린이 대상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문화향유 음영 해소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전시 버스 개편
  - 5개 지역 박물관, 9개 지역 초등학교 방문(총 60회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참여 지역 거점기관의 박물관 특성을 감안한 교육 교구재 협의 개발 및 활용
  - 교육 참여 어린이, 교사(어린이 인솔자) 대상 만족도 평가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98.5%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교육참여 인원 수(명)	1,520	1,341	88.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4.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3.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7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지역박물관과 초등학교 협업을 통해 상호 교육의 발전과 상생 도모,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
- 본 사업은 지역 거점기관의 박물관 특성에 따라 교육 교구재 협의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함.
- 국립박물관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오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문화가 있는 날 참여문화시설 및 생활문화활동 지원

[사업목적]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시설 가격 무료·할인 제공 및 다양한 기획프로그램(공연·체험 등)을 통해 지역민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사업구조] 연간 수립한 기본계획 및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

[주요사업내용]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문화시설 지원: 272개소 2,850백만 원
  - 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원 등 전국 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대국민 특별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 생활 속 문화 활동 지원: 99개소 1,500백만 원
  - 지역에서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기관·시설·단체 연계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 및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운영(10월/ 서울 광화문광장)
- 기획프로그램 이용자 및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참여자 FGI 실시, 종합 성과평가에 반영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문화가 있는 날 참여프로그램 개수	24,500	22,364	91.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기획프로그램 외 문화시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문화혜택 제공에 노력하였음.
-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이 부족한 문화 취약지역을 위한 문화 소비 방식 또는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생활문화 주체 간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통한 생활권 단위에서의 자생적, 지속적 생활문화 활동 여건 조성

[사업구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원이 사업수행단체를 공모·선정하고, 전문가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관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추진

[주요사업내용]

-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확산에 따른 지역 주민 생활문화 참여자 수 증대 (31개 단체, 참여 인원 26,516명/ '23.10 기준)
- 소액 다건형 생활문화공동체 지원방식을 개선, 생활문화 주체 간 프로그램 연계 지원으로 지역 내 생활문화 참여 확대 계기 마련
-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전반의 개선 위해 사업운영자 및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문화교류대회 개최(9월/진주)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만족도(점)	85.6	88.5	103.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주민이 마을과 관련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취지와 부합하며, 전담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방식과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있음.
- 사업 시행주체인 지역문화진흥원이 사업 관리 집행에 대한 성과 및 시행착오 등의 점검체계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함.

과제명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 종합계획으로 지역 생활문화 주체 간 역할 모색과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자생적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구축 및 확산

[사업구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원이 사업수행단체 선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전국 생활문화축제, 전국 생활문화교류대회 등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2023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연구를 통해 기초단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참여자 수 도출
  -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11개 지역, 3,056회 프로그램, 90,777명 참여, 참여자 만족도 90.8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24개소, 883회 프로그램, 38,422명 참여, 참여자 만족도 86.9점
- 지역 고유 여건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생활권 단위, 생활문화 활동 단체들이 연대·협력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생활문화의 발굴·확산 지원
  - 사업내용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협력단체 5개 이상 참여, 지자체 추천 등 명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생활문화활동 참여자 수(명)	34,000	90,777	267.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추진 과정과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에서 우수사례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사례별 시사점 도출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의 직접적인 문화 활동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방이양된 이후에 본 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함.

과제명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개요

[사업명]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목적] ① 지방문화원 소장 자료의 자원화 및 활용 모델 개발로 지방문화원 자료의 가치 제고 및 국민적 향유 기회 확대
② 향토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사업구조]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사업추진단(PMO) 및 지방문화원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역문화콘텐츠 홍보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의 인물, 설화, 자연환경, 경제활동 등 지역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기반 콘텐츠 제공
- 인구감소 위기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전문가와 지방문화원이 기획에 참여한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초등 3~4학년 대상 지역 교보재 3종 개발
-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DB화 및 지역N문화 포털을 통한 지역 향토자료 제공
  - 총 91,670건 구축(전체 약 48만 건 자료 중 19% 구축 완료)
  - 지역N문화 사이트 방문자 증가(전년 대비 방문자 수 33% 증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지역문화 콘텐츠 이용자수(회)	3,246,076	4,113,182	126.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4.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2.1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3

주요 평가 의견

- 지역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향상시키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독창적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농어촌 거주 청년 또는 농촌과 지방에 관심이 많은 도시 청년들의 일자리와 연계된 콘텐츠 발굴 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과제명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①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②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목적] ①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
②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 진로 체험교육 콘텐츠 지원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 소득향상

[사업구조] 농촌진흥청은 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워크숍, 교육 등을 진행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선정·관리,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으로 특화된 농촌체험·관광 소득화 기반조성
  - 마을당 평균 농경문화자원 활용 상품개발: ('22)4.8건 → ('23)5.8 (120.8%)
-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의 학교 확산을 위한 농진청-교육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도 단위(도원-도 교육청) 기관 간 협업 및 정책 연계 활성화 지원
  - '23 하반기 늘봄학교 공모지침에 농촌교육농장 명시 → 참여 확대 기반 마련
- 청-전북도원-전북교육청 협력을 통한 농촌체험분야 직무연수과정 개발
-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 제안('23.8) → '24년 확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자원개발 건수(건)	5.5	5.8	105.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농촌진흥정,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마을 간 협력 및 분업체계를 갖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과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파급효과 창출이 필요함.

과제명	[2-4-2-3] 농촌축제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축제 지원

[사업목적]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 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구조] 지자체 추천 및 공모로 선정된 소규모 마을·권역 단위 축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축제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주민 참여를 통해 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 유대 형성, 전통 보존 및 마을 내 갈등 해결, 주민의 역량 강화, 세대 간 화합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
- 소멸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100人 이하 소규모 마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금액을 낮추고 지원 대상을 확대
- '23년도 농촌축제 성과보고회 실시(농촌마을대표 150명 참여)
  - 농촌축제 공연 및 현장을 담은 동영상 상영(전체 마을 중 희망지)
  - 농촌축제 우수사례 발표(우수축제 16개 마을 중 희망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축제 지원 개소 수(개)	64	64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0.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촌축제 지원 사업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정책 효과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개별 사업별 축제 조직위나 실행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가 아닌 축제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기관을 설정하여 이를 통한 컨설팅 등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의의와 가치가 높은 만큼 소규모 농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적인 지원 사업이 계획·추진될 필요가 있음.

3.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6">[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사업지원</td></tr>
<tr><td colspan="6">[사업목적]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체감복지 향상</td></tr>
<tr><td colspan="6">[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행처별 운수사업체, 마을자치회 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td></tr>
<tr><td colspan="6">[주요사업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 농촌형교통모델 이용자 수(만 명): ('22) 654 → ('23) 660
• 농촌형 교통모델 예산 증액을 통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
- 농촌형교통모델 예산: ('22) 20,928 백만 원 → ('23) 21,655 (3.5% 증액)
• 홍보영상물 제작 및 KTX 영상광고를 통해 농촌형 교통모델 인지도 제고</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 수(만 명)</td><td>590</td><td>660</td><td>111.9</td></tr>
<tr><td rowspan="7">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7.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4.6</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7</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식품부, 시·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거치는 등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기시간(운행 빈도), 집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 시간, 버스 혹은 택시 탑승 시간 등이 고려될 수 있는바, 향후 이들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td></tr>
</table>

과제명	[3-1-1-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형교통모델사업지원

[사업목적] 사업 운영주체 및 운행방식 다변화, 신규 노선 및 모델 발굴 등 수요응답형 중심의 농촌형 교통모델 구축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행처별 운수사업체, 마을자치회 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주요사업내용]
- '3-1-1-1'과 동일 내용으로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 수(만 명)	590	660	111.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0.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함.
- 계획수립 주체를 마을 단위(면 또는 행정리)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3-1-1-3]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공공형 택시 운영사업

[사업목적] 전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

[사업구조] 국토부의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도는 관할시를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

[주요사업내용]

-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수혜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 ('20) 60개 시 → ('21) 61 → ('22) 61 → ('23) 62
- '23년 공공형 택시 운영사업 시행 지자체에서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실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공공형 택시 도입 지자체 수(개)	61	62	101.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1.9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공공형 택시 운영사업 시행 지자체에서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함.
-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농촌형교통모델과 함께 사업혁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과제명	[3-1-1-4]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공공형 버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공공형 버스 운영사업

[사업목적]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 횟수 및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방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버스 교통수단 등 도입 지원

[사업구조] 국토부의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도는 관할 시를 대상으로 공공형 버스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

[주요사업내용]

- 기존 농어촌버스의 넓은 배차 간격으로 주요 생활거점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던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개선
  - 공공형 버스 지원 대상 지역 확대('19: 52개 → '24: 67)
-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시 제출하도록 명시
- 분기별 지자체 점검을 통해 사업 개선 수요를 조사하여 정책개선에 반영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공공형 버스 도입지자체 수(개)	59	67	113.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예산의 무분별한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반기별 점검 등 이루어짐.
-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를 보았을 때, 다소 보수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된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공공형 버스 이용자 수 등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1-1-5]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

[사업목적] 버스 외에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철도역에 도입하여 철도 연계교통 강화

[사업구조] 비예산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사업 해당 지역에서 철도 연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사업내용]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철도 이용 편의 향상
- 13개 철도역 확대('21~'25): 현재 52개 역에서 서비스 제공 중
- 철도예매 앱(코레알톡)에서 버스노선, 탑승 장소, 실시간 위치 등 환승 정보 제공(총 27개 역, '21 ~ '23)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철도역 연계 공공형 택시 확대 지역 수(개)	2	2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미흡함.
- 사업 추진과정의 혁신 등과 관련하여 도출된 우수사례가 제시되지 않음.

과제명	[3-1-1-7]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② 내항여객선운임보조

[사업목적] ①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증회 운항, 도서 출발 등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섬-육지 접근성 향상 등 정주 여건 개선
② 섬 주민의 대중교통인 여객선 운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편의 증진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구조] (준공영제 확대 지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항로 선정 및 항로 고시·운영 후 운항결손금 정산 및 지급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 연안 여객선사가 섬 주민 할인금액을 지자체에 교부 신청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심사 후 선사에 보조금 지급

[주요사업내용]

(준공영제 확대지원)
- 반기 정산 도입 정산 방법을 변경, 민간선사에 운항결손액 신속 지원을 통해 항로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 (기존) 연말 1회 지급 → (개선) 상·하반기 2회 지급
- '24년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11개 항로 → 12개 항로)를 통해 항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
- 섬 주민 지원 차량의 생산지, 연료 및 크기 제한 완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여 도서 정주 여건 개선
  - 기존 국산차, 2,500cc 미만 및 5톤 미만, 15인 이하는 승합자동차만 지원 가능하였으나, 해당 지원조건을 전부 완화
-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바다로」 확대 운영 시행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지원항로 수(개)	11	12	109.1
보조금 집행률(%)	100	99.7	99.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0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연안여객선 공급 측면에서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운임을 보조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정책의 수혜자인 도서 지역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3-1-2-2]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사업

[사업목적]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보행자 및 운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고령자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예방

[사업구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연금을 통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용품 보급

[주요사업내용]

- 지속적인 농어촌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교통 안전용품 배포를 통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 ('21) 1,295명 → ('22) 1,258 → ('23) 1,126
- 지역 경찰청,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 통한 농민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및 마을 안전방송 송출
- 고령 보행자 및 농촌지역 어린이(학교, 유치원 등)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조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고령자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9.0	9.6	94.1
고령자인구 10만명당 군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3.08	3.28	93.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5.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 맞춤형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등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마을 방송 시행, 농기계 반사지 보급 등 농촌을 고려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과제명	[3-1-2-3] 교통안전 활동	담당부처	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목적] 농어촌(군)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노인 보행자 사고 위험을 감소하고자 함

[사업구조] 비예산 사업으로, 경찰청 주도로 지자체별 지역 경찰청·경찰서와 협의하여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점검실시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 내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 노인보호구역의의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3. 7월)
  - '22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 개소는 3,192개소였으나, '23년에는 3,679개소로 확대되어 487개소(15.2%) 증가
- 정기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및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노인 인구 1만 명 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0.60	0.58	103.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노인 교통안전 관련 지표에 따라 해마다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충실히 설정하고,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적극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신청으로 지자체의 조사 및 경찰청 협의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취약 요소 분석 및 적절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문가 검토과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1-2-4] 연안여객선 현대화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①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②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목적] ①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 시 비용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현대화 펀드와 선박대체 시 민간금융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율을 줄이고, 국민신뢰 회복
② 해운법령상 선령이 도래하거나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을 대체 건조하여 이용객 및 선박의 안전 확보

[사업구조]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펀드운용사와 해수부에서 현대화펀드 및 이차보전 대상 선사를 공모·선정하고 펀드는 건조비 30%~60%에서 무이자 지원, 이차보전은 건조비 대출액의 이차를 지원
(국고여객선 건조) 해수부에서 대체선박의 수요를 조사하여 지방청에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청에서는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취항

[주요사업내용]

(연안 선박 현대화 지원)
- 연안 선박 현대화를 통해 연안해운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강화
  - 노후 국고 여객선 섬사랑5호(완도~덕우도, 선령 20년)를 신조 선박으로 대체 완료(6월)
- 금융부담 완화로 신형선박 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건조비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차보전)을 통하여 연안 선박 12척 신규 건조 지원

(국고여객선 건조)
- 섬사랑5호(완도-덕우항로) 대체 건조 완료, 섬사랑6호(목포~도초도, 선령 20년), 웨스트프론티어호(보령~외연도, 선령 22년) 대체 건조를 착수하여 국고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 도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여객선 대체실적(척)	3	3	100.0
국고 여객선 건조 공정률(%)	40	4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8.1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펀드의 조성과 운영, 이차보전, 국고 여객선 건조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연안여객 운송사업자를 수혜자로 하는 실행방식과 추진체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선박 대체에 따른 해당 섬 지역 주민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노후선 비율 감소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1-2-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사업목적]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 편의 증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사업구조] 해수부와 보조사업자인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사업계획 수립·점검하며, 보조금을 교부하여 민간선사 소유 여객선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비용 70% 지원

[주요사업내용]

- 육상교통 대비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연안여객선의 시설설치를 지원하여 전체 여객선 대비 설치율 향상
  - '23년 사업 종료 시까지 연안여객선에 교통약자 시설설치목표(75%) 초과 달성
  - 고령자가 많은 섬 주민들의 연안여객선 이용 편의 제고
- 코로나19, 유가 상승 등으로 민간선사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참여도 저조에 따라 설치기준 개선 및 보조율 상향(50%→70%) 조치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시설설치 실적(%)	75	92	122.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7.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고령자가 많은 섬 주민들의 연안여객선 이용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였음.
-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등이 미흡하고, 우수사례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함.

과제명	[3-1-2-6]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운영(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목적] 충돌경보, 해양안전정보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한 바다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까지 LTE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 구축으로 육·해상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구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민간보조 형태로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설치 비용의 50%를 지원

[주요사업내용]

- 바다내비 단말기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형단말기 개발 및 공표
  - 13.3인치 표시장치(기존 10인치), 어군탐지기 연동 단말기, 소형 송·수신기 등 수요 맞춤형 신형 단말기 개발 및 공표
- 5차 보급사업의 톤급 제한기준(2톤 이상) 폐지, 보조금 지원 단가 증액(154→250만원) 및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통합안내창구(ARS) 운영
-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해양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 해군함정('23년 3척 대상 시범사업 완료) 및 내항선 원격의료(전담의료인력 및 대상선박 확대, '24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바다 내비게이션 이용자 만족도(점)	85.0	93.6	110.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성과목표를 충실히 설정하고 있으며, 현장 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사업 추진의 결과로 해군함정 및 내항선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다양한 해양 안전, 복지서비스가 도출됨.
-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의 사항 내용에 대한 지표, 혹은 장비 보급사업의 결과 해상위험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 설문조사 방식의 내용 등을 지표화하여 사업의 성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광역선박교통관제(VTS)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항만 및 연안 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구조]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지방청은 VTS장비 구매와 설치, 유지보수 등 VTS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

[주요사업내용]

-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광역 관제 체계 구축으로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운항 과정에 대한 연속적 해상교통관리 체계 마련
  - (서해권 광역 VTS 운영) 서해안 주요 선박 통항로 안전관리 및 연속적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포·군산 광역 VTS 운영 ('23.9월)
  - (광역 VTS 구축) 제주('23), 동해·포항('25) 해역에 관제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에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제공
- 제주권 광역 VTS에 선박 탐지력이 우수하며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고성능 SSPA 레이더 신규 설치(6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VTS 고객 만족도(점)	89.8	90.0	100.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전국 VTS 정례(매월)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업, 어업인 교육 및 관제사 사례 중심 교육 강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운항자 교육 이행 제고를 통한 안전 의식을 고취함.
- 사업추진체계, 정책개선, 성과관리, 홍보 등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은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사업내용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발굴을 통해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과제명	[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목적]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구조] 농식품부와 시·도에서 배정한 물량에 따라 시·군·구별로 선정한 대상 주택 개량비에 대해 최대 2.5억원까지 농협 자금 저리 융자 대출 지원

[주요사업내용]

- 저리·장기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마련을 지원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1세대 평균 8,808만 원 융자 대출, 주택 취득세 280만 원까지 감면
-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빈집 개량시 2주택 허용, 청년층 금리우대 등 사업요건 완화하여 사업대상자 확대
  -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3억 원, 1.5% 고정금리), 청년(1.5% 고정금리), 농촌 빈집개량자(2주택 가능) 등 112동 추가 신청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불량주택 정비율(%)	60	47	78.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1.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청년, 농촌 빈집을 개량한 자 등 주택 개조 자금이 긴급한 대상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함.
-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해서 성과 달성이 저하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명	[3-2-1-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사업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사업 시행자인 다솜둥지복지재단은 봉사활동단체와 수혜가구를 선정하여 집고쳐주기 봉사활동 및 현장점검 등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화장실·욕실, 부엌, 경로당 등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경비(교통·식비) 등 지원
- 농촌 취약계층의 집수리 요구 항목과 농촌 주택 특성,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집수리 평균 지원 단가 상향
  - ('22) 500만 원 → ('23) 650만 원 (30% 인상)
-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공모전 등 오프라인 참여 행사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집 고쳐주기 가구 수(호)	506	575	113.6
수혜자 만족도(점)	80	80.8	101.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지원대상은 지자체를 통하여 모집하고, 사업 추진은 복지재단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어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유사 사업 간 연계, 예산의 활용, 사업 일정과 대상 관련 정보 플랫폼 사용 등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있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과제명	[3-2-1-3]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담당부처	환경부

과제 개요

[사업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70~80년대 집중보급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구조] 환경부에서 지자체 수요에 근거하여 사업 물량을 확정하면 지자체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경상 보조

[주요사업내용]

-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석면 비산을 차단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직접 수혜자)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민(간접 수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
- 주택 철거처리 지원비 상향(1동당 최대 176만 원 → 350)
  - 창고축사 철거처리: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지붕개량: 1동당 최대 314만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누계, %)	22.3	38.4	172.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지원 한도 확대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정됨.
- 가장 최근의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주택 또는 건축물 수량을 파악하여 매년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수행 및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과제명	[3-2-1-4]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주거급여 지원

[사업목적]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기존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주택개량 등 추진

[사업구조] 지자체와 LH에서 수행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 계약, 주택 상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주택계량에 필요한 비용 지원

[주요사업내용]

- 저소득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및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창출
-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반)지하 자가 가구는 침수피해 이력을 감안, 침수 방지시설 우선 설치
- 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23년 47%) 이하로 확대하고 23년 대비 예산 약 6.7% 추가 편성
  - ('23) 2,556,417 백만 원 → ('24) 2,726,586 백만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연간 주택개량 지원호수(만 호)	1.9	1.95	102.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매년 수선유지급여 연간 수선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선물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 목표가 해마다 상향됨.
-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농어촌지역에 얼마만큼 추진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워 향후 분리 제시가 필요함.

과제명	[3-2-1-5]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사업목적]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사업구조] 지자체에서 대상자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국토부는 예산 교부 및 세부 시행계획을 시달하여 지자체가 농어촌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조를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 거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 장애인의 주거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매년 호당 380만 원 지원)
  - '23년 예산으로 2,850백만 원 확보('22년 1,710백만 원, 1,140백만 원 증액)
  - 도시 지역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 개조 비용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매년 개정하여 지자체 시달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장애인주택 개조율(%)	100	104.4	104.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지원대상의 선정과 사업 시행 모두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수혜 가구의 만족도와 삶의 질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사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사업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구조] 사업지역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고 개소당 15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취약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마을 안길, 담장 정비 등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보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지원하여 농촌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확보
  -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누계) : ('22) 449개소 → ('23) 529 (80개소 신규 지원, 17.8%↑)
-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로 관련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 만족도 향상
  ('18) 83.7점 → ('20) 86 → ('21) 87 → ('22) 90 → ('23) 91
- '23년 추진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구 중 부진사업 지구(1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무자 의견수렴 실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효과(점)	80.0	84.5	105.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추진 절차와 일정, 홍보, 주민 설문조사 등 정책 환류 노력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으며, 차년도 사업계획도 확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시한 개선 성과지표에서 불량주택 비율 40%를 분모에 넣어 계산 시 불량주택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값이 좋게 나올 수 있어 과대 점수로 제시될 우려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3-2-2-2]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th><th>담당부처</th><th>환경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6">[사업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지원</td></tr>
<tr><td colspan="6">[사업목적] 농어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 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td></tr>
<tr><td colspan="6">[사업구조] 환경부에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개별 시군에서 마을하수도 미설치지역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td></tr>
<tr><td colspan="6">[주요사업내용]
•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정주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신규사업 편성 개수 조정, 계속사업비 연부액 증액 등 재정당국와 지속적 대책 협의로 예산 규모 확대('22년 대비 '24년 67% 증액)
- ('22) 3,242억 원 → ('23) 4,502 → ('24) 6,678</td></tr>
<tr><td colspan="3">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3">농어촌하수도 보급률(%)</td><td>75</td><td>75.1</td><td>100.1</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9.3</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6.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9.3</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0</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86.6</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대상 지역 선정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증 프로세스 및 정책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td></tr>
</table>

과제명	[3-2-2-3]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개요

[사업명] ①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②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목적] ①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② 도시가스 신규 보급 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사업구조]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도시가스사업자가 융자 신청, 산업부가 지원지역 선정 후 한국에너지공단, 시중은행에서 융자 및 대출 실행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산업부가 계획을 수립, 도시가스 사용자가 융자를 신청하고 지자체가 추천서를 발급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에서 융자 및 대출 실행

[주요사업내용]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 '23년 도시가스사 5,961억 원(정부 융자지원 232.1억 원)을 배관 투자를 통해 약 726km 배관을 건설하여 약 31만 가구(잠정)에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
  - 정부 융자지원을 통해 농어촌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지역 내 3.3만 가구에 도시가스 추가 공급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제주시 일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베관을 건설(13.8km)하여 신규 5,00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개시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 도시가스 신규 사용 236가구에 사용자시설 설치비용 10.9억 원을 융자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도시가스공급 가구 수(백 만호)	20.3	20.3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지역에서 에너지 서비스 전달방식이 개선되고, 민관 협력으로 우수사례가 도출되고 있음.
- 성과지표가 '전국 도시가스사별 당해 연도 가정용 도시가스 공급 가구 합계'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특성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과제명	[3-2-2-4]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개요

[사업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 단위 지원)

[사업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1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용자시설 등을 보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및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구조] 광역 시도에서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산업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스 공급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마을별 착공

[주요사업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용자시설 보급으로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
  - LPG 용기공급 대비 약 30% 공급가격 인하 및 안전성·편리성 향상
  - '23년 LPG 용기 전국 평균 판매금액 2,372.24(원/kg), 사업 시행 36개 마을 평균 공급단가 1,332.38(원/kg)
- 효율적인 에너지 불균형 해소 효과로 인해 지자체 호응이 높아 '23년도 사업 수요조사 당시 지원 경쟁률이 약 14:1에 해당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비전·목표를 공유하여 사업 대상 수요 확보를 통해 농어촌 낙후지역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에 기여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적(개소)	36	36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9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수요조사, 사업자선정, 시설개선 및 설치, 검수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추후 정책 효과의 검증과 사업의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등의 추진이 필요함.
-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지원 경쟁률이 14: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실적 목표를 현실에 맞도록 증대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2-2-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목적] 도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 필수 연료 품목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별로 운송 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민에 대한 운송 내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주요사업내용]

- 도서 지역 생활 연료 물가하락으로 거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공복지 증진
  -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시·도, 21개 시·군(181개소)에 거주하는 약 5만7천 명의 도서민 대상으로 지원사업 실시
- 도서 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연료 운반선 미건조 지자체 위주의 운송비 지속 지원
- 운송비 부담이 큰 거주 시설 유지보수용 생활 건축자재(시멘트, 모래)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확대를 추진('25년 10억 원 증)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해상운송비 지원만족도(점)	78	79.5	100.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주민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치 대비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8개 시·도 231개 시·군, 127개 섬 지역 7만 1천 명이 정책수혜를 받으면서 육지에 대비하여 약 20~30% 더 높은 섬 지역 연료비 절감에 기여함.
- 운송 필수품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명	[3-2-3-1]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 빈집 정비

[사업목적] 빈집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주도의 체계적인 빈집정비와 주민·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정비 참여를 유도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빈집정비를 위한 추진방향 설정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빈집정비 관련 제도 개선 및 빈집 정비(7,739동)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방치된 빈집으로 발생 되는 빈집 문제를 예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빈집정비 계획(6,148동) 대비 124% 달성(7,637동)
- 빈집정비 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를 도입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도시 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절차 및 빈집 등급 기준 일원화를 통해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마련
- 전국 빈집 현황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 빈집정비 실적(%)	100	124	124.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정책 성과 도출, 정책 환류 등 정책 수행도가 전반적으로 준수함.
-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등을 발굴·홍보하여 빈집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사업의 객관적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목적]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구조]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사업 지구를 공모·선정하고 국비 지원(70%)하여 지역별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촌중심지에 거점을 조성하고 배후마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 농촌형 생활 SOC 시설(누계): ('21) 683 → ('22) 797 → ('23) 930
  - 전년대비 136억 원 예산 증액: ('22) 399,554백만 원 → ('23) 413,118
  - 신규지구: ('23) 농촌중심지활성화 31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22지구(전년 대비 72개 지구 증가)
- 기조성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 실태조사('23.3~4) 및 이용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자체수익 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 및 사업 기능별 예시에 마을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명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중심거점-기초거점조성현황(누계)	900	930	103.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농식품부 자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사례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홍보·전파하고자 노력함.
- 향후 주민의 필수 서비스 개선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효과를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3-1-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업목적]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사업구조]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사업지역을 공모·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관련 세부 사업들을 시군에서 추진

[주요사업내용]

- 특화산업 고도화, 지역 선순환 경제 등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 현장 소통 및 다양한 회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행지구 대폭 확대(52.9%↑)
  - ('22) 78개소(누계) → ('23) 94개소(누계)
- 사업의 핵심 성과를 발굴하고, 조직·인적자원의 활용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23.9월~'24.3월)을 추진하고 정책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등 실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조성 현황(누계/개소)	100	1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 조직 및 인적 자원 육성에 초점을 두는 등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함.
- 사전에 정해진 추진체계 및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점검되고 있다고 판단됨.
- 종료가 예정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육성했던 액션그룹 등 지역 내 주체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할지 대안 모색이 필요함.

과제명	[3-3-1-3] 어촌뉴딜 300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촌뉴딜 300 사업

[사업목적] 낙후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구축 및 활력을 제고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사업대상지를 공모·선정하면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70%)받아 관련 사업을 시행

[주요사업내용]

- 낙후된 어촌의 방파제, 접안시설 등 필수기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준공 지역(88개소)에서 태풍 피해 저감 등 정주 여건 개선 성과 창출
-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제고
-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100개소)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 어항과 배후마을 단위로 추진된 어촌뉴딜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Post-어촌뉴딜(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4개소 지속 추진(~'23)
- 어촌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거점과 주변 지역의 유기적 연계 등 기능 배분 효율화를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23~'27)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촌 활력 지역 변화율(%)	41.5	41.7	100.5
이용자 주민만족도(점)	78.0	76.2	97.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성과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지표를 발굴하여 평가함으로써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높임.
- 일부 어촌을 선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3-1-4]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정주환경 및 농촌공간 연구, 데이터 기반 농촌공간관리체계 구축

[사업목적]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 데이터 구축,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기준 및 농촌재생 모델 개발

[사업구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R&D 사업으로 정주 환경 및 농촌 공간 연구 주관 과제에 국비 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촌협약 시·군 대상지 평가 및 자문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검토·자문 등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마련 TF 참여('23. 2월~, 6회)
  - 정책 및 제도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재생에너지지구 설정을 위한 공간데이터 분석 매뉴얼」기술보급서 발간
- 농식품부-농진청 공동 농촌다움포럼 개최: 4회
- 농촌 공간데이터 구축 및 DB 표준화: 사회 분야 15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정책자료 반영률(%)	70	7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6.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직접 정책에 반영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3-2-1] 수리시설 안전관리 ①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사업목적]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

[사업구조]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진단 및 기본조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농식품부가 선정한 사업 지구에 대해 사업 시행 및 준공

[주요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적기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제공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
  - ('22) 651,009 → ('23) 651,832 → ('24) 746,169백만 원
- 기추진 중인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 조속 추진뿐만 아니라, 저수지 범람 시 인근 주민 대상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T/F」 구성 운영 및 강화방안 마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리시설 개보수율(%)	72.4	72.4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수리시설 개보수율을 성과지표로 개선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성과목표를 상향한 점도 적극적이라고 평가함.
- 성과지표 산식이 '수원공 개소 수'로 설정되어있는데, 수원공은 종류에 따른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성과지표가 개선되어야 함.

과제명	[3-3-2-2] 수리시설 안전관리 ②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사업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표지판, 안내판, 난간, 펜스, 가드레일 등 안전대책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사전 예방 등 체계적 안전관리 실시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국고 보조금 및 시행계획을 승인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시행 주체로 하여 현황조사 결과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안전대책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내 안전사고 지속 감소 효과 창출
-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 및 방류에 대한 사전 대비 철저 추진
  - 수리시설 용·배수로 수초 및 퇴적물 제거를 우기 전 80% 집행
  - 저수지 붕괴 방지를 위한 저수지 간이 방류시설 설치(114개소)
  - 안전대책시설 설치: ('22) 안전시설 4,382개, 출입 통제시설 43,167m → ('23) 안전시설 8,118개, 출입 통제시설 194,464m
- 유지관리 업무에 지역민 8,753명 채용으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수리시설 감시원 7,401명, 자율관리구 운용 26명, 수초·퇴적물 제거 1,326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안전확보율(%)	60	63	105.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90.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농업인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함.
- 성과지표로 선정한 안전 확보율의 측정산식이 단순히 목표 예산 대비 확보 예산의 비중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적절치 않음. 안전사고 감소율 등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지표 발굴이 필요함.

과제명	[3-3-2-3]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배수개선사업

[사업목적]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구조]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지구로 선정하면,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세부 설계 및 사업을 시행

[주요사업내용]

- 배수 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로 안전 영농기반 조성
  - '23년에는 232지구 26천ha(3,703억 원)를 시행하여 37지구 4.2천ha에 대한 침수피해 해소
- 이상기후·영농여건 변화 등을 고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농업용댐편) 개정 추진
- 극한 강우 추세, 타 사례 등을 감안, 농업용 배수장 설계기준 강화
- 최근 기후변화 양상 및 금년도 홍수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재해 대비 배수 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2% 증가한 4,535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본조사 면적도 대폭 확대
  - 예산(억 원): ('23) 3,703 → ('24) 4,535
  - 기본조사 면적(ha): ('23) 5,639 → ('24) 8,694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침수피해 사전 방지율(%)	26.3	26.3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침수피해방지율)의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높고 검증이 용이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정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최근의 기후변화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3-3-2-4]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 보강)</th><th>담당부처</th><th>해양수산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5">[사업명] 국가어항 개발 사업</td></tr>
<tr><td colspan="5">[사업목적] 어선의 안전 정박, 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 시설 확충,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td></tr>
<tr><td colspan="5">[사업구조] 해수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추진</td></tr>
<tr><td colspan="5">[주요사업내용]
• 태풍 내습 시 각종 어선이 국가 어항으로 피항하여 어선 전복 등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
• ‘23년 어선 안전 수용률 산정 결과, 전국 수용 대상어선 6만5천여 척 중 5만6천여 척에 대한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함으로써 어선 피해 예방 기여
• 스마트어항 시범사업(3개 항)을 통한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수립
- 3차 년도(’21 ~ ‘23)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원거리 도서 지역 국가 어항의 유지관리체계 로드맵 수립
• 국가 어항 내 유휴부지의 어촌 관광구역 신규·추가 지정 및 관광·레저·수산 가공 용도 등 부지 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확대</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어선안전 수용율(%)</td><td>86.1</td><td>86.1</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8.7</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0</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8.0</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9.3</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92.0</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4.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구체적인 정량적 근거를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함.
• 국고 예산 100% 추진되는 국가어항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관리어항의 항내 정온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산불방지 대책

[사업목적] 과학적 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재난으로부터 산림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사업구조] 각 지자체가 연중 다양한 산불 방지 대책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

[주요사업내용]

-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점차 동시다발, 대형화
- '23.4.2 하루에 동시다발 산불 발생(34건, 역대 3번째), 100ha 이상 대형산불 동시 발생(5건, 역대 최초)하였으나 선제적 대응으로 전년 대비 산불 발생 건수 21%, 면적은 80% 감소
  - 대형산불 : ('18) 2건→('19) 3건→('20) 3건→('21) 2건→('22) 11건→('23) 8건
-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산불 지휘체계 개선 및 고성능 진화차 도입
- 인공지능으로 산불징후를 24시간 감시하는 ICT 산불감시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불감시체계 강화
- 임업인 단체, 산림조합, 봉사단체 등의 산불 예방 활동을 확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23,277개) 캠페인 전개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강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소각산불 발생률(%)	18.1	21.6	83.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4.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을 실시하는 등 우수사례가 충실히 도출됨.
- 본 사업은 기존의 산불 진화 중심의 산불 방지 대책에서 예방대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나, 사업의 성과지표는 소각산불 발생률로 예방정책의 목적과 다소 불일치하여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과제명	[3-3-2-6]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②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사업목적] 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를 통한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산사태 재난 사각지대 해소
②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통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및 대피체계 구축으로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사업구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및 관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산림청에서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교부하여 지자체별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선발·운영

[주요사업내용]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생활권 산사태 재난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재난 피해 최소화
  - '23년은 이례적인 역대급 장마,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산사태 건 당 피해면적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17% 감소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확대·운영하여 산사태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
  -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 자격조건(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24년 예산은 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2.1%)증가하였으며, '23~'27년 중기 심의 시 지자체 배치 인원 260명 증원(17억 원 증액)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기초조사 계획량 달성(개소)	18,000	18,0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9.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로 사용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는 사업 목표에 부합하며, 검증이 용이한 지표임.
- 재해에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중요 세부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4">[3-3-2-7] 산림보호 지원</th><th>담당부처</th><th>산림청</th></tr>
<tr><td rowspan="5">과제 개요</td><td colspan="6">[사업명] 산림보호지원단 사업</td></tr>
<tr><td colspan="6">[사업목적] 산림보호 분야의 예방 활동과 연계한 지역의 일자리 제공으로 농·산촌 고용 안전망 강화</td></tr>
<tr><td colspan="6">[사업구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고 예산 지원</td></tr>
<tr><td colspan="6">[주요사업내용]
•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 및 단속
• 농·어업인 대상 취업 취약계층 우선선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에 기여
- 취업 취약계층 선발 목표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 일자리 우선 제공
- 목표: 66.3%, 실적: 75.3%(참여 인원 73명, 취업 취약계층 55명)
• 주요 시기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보도자료 배포
- 시기별 집중단속: (봄)산나물 채취, (여름)계곡 취사행위, (가을)임산물 채취</td></tr>
<tr><td colspan="6"><table><tr><th colspan="2">성과지표</th><th>계획</th><th>달성</th><th>달성률(%)</th></tr><tr><td colspan="2">취업 취약계층 선발(%)</td><td>66.3</td><td>75.3</td><td>113.6</td></tr></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20.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4.7</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8.7</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89.4</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3</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6">• 취업 취약계층 선발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본 사업이 농산촌 고용 안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사용함.
•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산림보호에 맞출 것인지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td></tr>
</table>

과제명	[3-3-2-8]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담당부처	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시설 등을 확충하여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력·지역 안전 순찰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범죄 예방 활동 강화 도모

[사업구조] 비예산 사업으로, 각 경찰서와 유관 기관·지역 주민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별 환경개선 사업 진행 시, 각 사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의 진단·분석 결과 등 의견을 반영, 취약요소 보완
- 농산물 보관장소·경작지 등 취약장소 관련 주민 의견을 취합, 순찰 주기·순찰선 등 반영하여 정기적인 순찰 이행
- 수확기 전·후 시기별·특성별 절도 예방대책 추진,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 분위기 형성
  - 농·어촌 지역별 농산물 보관 창고 및 재배지역 등 범죄 우려 장소를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를 통해 선제적 치안 활동 활용
- 마을회관·경로당 등 방문,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범죄(보이스피싱·절도) 예방 교육·홍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지역 탄력순찰 이행률(%)	85.0	98.1	115.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9.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농어촌 맞춤형 순찰 및 방범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탄력순찰 이행률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농어촌 특성에 부합하는 범죄예방활동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3-3-1] 청년 보금자리 조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목적]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업 시행 시·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단지(보금자리)를 준공 후 임대 및 운영

[주요사업내용]

- 현재까지 총 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19년도 선정 4개소는 총 123세대(총인원 283명, 아동 94명) 입주 완료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
  - 신규 선정 지구 수: ('19) 4개소 → ('22) 1 → ('23) 4
- 입주민 중 아동·청소년 등 94명은 취학·미취학 자녀로서, 소멸 위기의 초등학교를 살리는 데 역할
- '19년에 시작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 분석
- 임대계획 수립 시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농업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준공 개소 수(누적)(개수)	4	4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하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함.
- 2021년도에 선정된 지구의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 사업의 개선사항 모니터링이나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책 환류와 개선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과제명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사업목적]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추진

[사업구조] 지자체·LH 등이 공모·사업승인을 신청하며 국토부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승인 후 지자체 및 LH에서 복지관 건설비 보조 등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고령자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에 복도·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 비상 안전 유도등 등을 설치
- 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식당, 운동시설, 문화강좌실, 옥상 텃밭 등을 설치 및 복지법인이 상주하며 복지서비스 상시 제공
-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개소당 건설비 50%→70% 상향 지원('24년부터 개소당 38.2억 원)
- 지자체 제안 이외에 입지, 교통 등 여건이 양호한 공공주택지구 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위해 LH 제안 사업대상지 3곳 선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대상지 선정 수(개소)	10	11	11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없으며, 사업 홍보를 위한 우수사례 도출이 미흡함.

과제명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과제 개요

[사업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목적]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건설사업비의 10% 이상 비용과 간선시설 설치비 및 각종 부담금은 지자체가 부담, 마을계획 수립 비용은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

[주요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주변 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저변 마련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78여 개 지구(약 8.4천 호) 추진 중
  - 마을정비형 관련 별도예산 책정 없이 국민임대 출·융자, 영구 임대출자 사업에서 집행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 준공 수(호)	1,000	1,00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지자체 및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춤.
- 시행된 지 약 10년이 되어가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만족도 조사 및 사후평가, 제도 개선방안 등의 연구가 필요함.

과제명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개요

[사업명] 스마트빌리지 사업

[사업목적] 농어촌 생활 전 분야에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사업구조] 과기정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립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하고 수행 결과를 평가

[주요사업내용]

- 지역 경로당에 비대면 화상 인프라를 구축하여 웃음 치료, 건강강좌 등 여가·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제공
  -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경남 거제), AI 휴먼 시니어 서비스 플랫폼 실증(경남 김해) 등
- 지능형 CCTV 기술로 한우의 발정 행동을 즉시 탐지하여 농장주에 자동 통보함으로써 적기에 인공수정 실시 지원
  - 인공지능 기반 비접촉 한우 발정 탐지 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경북 안동시)
- 지역 관광자원의 스마트화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관광 안내 플랫폼 구현(충남 부여군)
- '23년부터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 자율 편성 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행사업 만족도(점)	83.8	84.3	100.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2.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5단계의 추진 절차에 따라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여러 시행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행안부의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스마트타운 조성)과 관계가 밀접하여 연계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상 지역 선정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3-4-2] 스마트타운 조성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과제 개요

[사업명] 디지털타운 조성 지원

[사업목적] 인공지능, 첨단정보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추진

[사업구조] 행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로부터 공모받아 선정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주요사업내용]

- 디지털기술 활용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현황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
  - 전동휠체어, 농기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IoT 기반 GPS 위치정보 통합·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고령층 및 취약계층 건강복지 환경 향상
  - IoT 기반 건강정보 측정 장비, 작물 재배 시스템, 양방향 화상 시스템 구축하여 고령자 건강관리 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경로당 20개소)
  - AI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IoT 건강측정 장치 설치(경로당 20개소)
- 지역 내 귀농·귀촌 등 이주인구 대상 일자리 및 생활편의 제공
  - 지역 유입 청년 대상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제작 영상 활용 디지털홍보관을 통해 지역 홍보, 노인·청년 상생 창업 리빙랩 구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디지털타운 조성 건수(건)	9	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적절한 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내용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운 귀농·귀촌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함.

과제명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담당부처	환경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 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사업구조]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환경부에서 검토하여 국고를 편성하고 지자체별 사업 시행 후 사후 점검·지원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에 매립, 소각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악취, 환경오염 예방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확보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확충(준공)
- 사업 예산의 실 집행 부진으로 사업 예산 감액 기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 집행 부진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감액 기준 마련
  - 사업의 실 집행 부진으로 '22년 대비 '23년 예산은 감소(4,408백만 원 → 3,967)하였으나 사업 수는 증가(10개소 → 12)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생활폐기물 매립률(%)	18.8	17.2	109.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1.3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7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필수서비스 전달과 관련성이 높고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사업 예산을 확대하면 효과성 개선 가능성이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악취 발생, 환경오염 등이 예방되었으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정책 효과 측정이 미흡함.

과제명	[3-4-1-2]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사업

[사업목적]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실현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수행

[주요사업내용]

-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23년 9,937개 마을 참여 및 영농폐기물 15,908.77t 수거
  - 영농폐기물 수거·배출, 경관 작물 식재, 하천 정비 등 농촌 마을 경관개선을 통해 찾아오는 농촌 구현, 도·농 교류 활성화
- 전년 대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참여 마을을 확대하고 캠페인 활동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등에 캠페인 참여 및 관련 교육·홍보를 독려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참여 마을(개소)	9,500	9,937	104.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전년 대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참여 마을을 확대하고 캠페인 활동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등에 캠페인 참여 및 관련 교육·홍보를 독려함.
- 공익형 직불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마을 관리 직불제 등으로 연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과제명	[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① (해양폐기물 정화)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업목적]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 조성

[사업구조] 해수부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별 사업을 추진한 후 결과에 따른 정산

[주요사업내용]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4%를 차지하는 폐어구(부표 포함) 수거 및 어구 보증금 제 시범운영('23.7)을 통해 어업생산 환경개선
-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연 세미나 개최('23.3월)
- 어민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24년 1월) 예정인 어구 보증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
- 해양폐기물 정화 보조사업 추진방안 개선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23.11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매량(톤)	40,000	41,997	105.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예산의 증액, 본사업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언론보도 등 정책 환류 측면의 실적이 우수함.
-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유실·침적 어구 수거·처리

[사업목적] 연근해 주요 어장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여 산란·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유령어업을 예방해 어업생산력 향상과 어업인 소득 제고 기여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수거 처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시

[주요사업내용]

- 조업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유령어업으로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
- 폐어구 수거·처리 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수거 면적: ('22) 243,533ha → ('23) 267,374ha
-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확대를 위해 사업대상지 확대 추진
  - ('23) 15,479백만 원(54개소) → ('24~'25) 연간 15,495백만 원(57개소)
- 수요조사 방식에 의존한 기존방식 외 해구의 등급별·주기별 순환식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으로 '24년 사업 집행지침 개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유실침적어구 수거면적(천 ha)	232	267	115.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6.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추진 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지원조건 명시나 수혜자가 명확함.
-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거처리업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적절한 추진 절차를 갖춤.
- 성과지표는 적절히 설정되어있으나. 목표치를 실제 수거 실적을 고려하여 더욱 상향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1-5]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사업목적] 해양쓰레기 감축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등 오염물질 유입 예찰 및 긴급수거·지원으로 어업인 재산 및 생명 피해 사전 예방
  - 집중호우·태풍 등 초목류 등 해양 유입된 재해 쓰레기 긴급 수거 확대 등 민·관 합동 수중·연안 정화 활동 (총 271회, 667톤 수거)
  - 항공기, 함정 등 가용세력 활용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국내 유입 예찰 강화 및 유입 시 관계기관 신속 전파
- 「우생순 프로젝트」 확대 운영으로 어선 발생 플라스틱 폐 생수병 약 14만여 개 해양 불법 배출 예방효과 거양
  - 우생순 프로젝트 ('22년) 4개소 2.5톤 수거 → ('23년) 15개소 6.8톤 수거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국민 참여 해양쓰레기 예방 실천 성과(건)	560	819	146.2
유해성 생물 대응 성과(건)	3,324	5,003	150.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수중·연안 정화 활동으로 667톤의 재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괭생이모자반의 국내유입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도출함.
-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효과 검증은 다소 미흡함.

과제명	[3-4-1-6] 국민방제대(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확대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해양자율방제대 지원

[사업목적]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

[사업구조] 해양경찰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에서 해양자율방범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방제작업 참여 운영

[주요사업내용]

- 원거리·도서지역 등 방제취약지역의 자율적인 방제 능력 강화
  -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참여: ('21) 109명 → ('22) 214명 → ('23) 234명
- 안전 교육·훈련을 통한 방제작업 참여자의 보건·안전사고 예방
  - '23년 해양자율 방제 대원 교육·훈련 530회, 3,909명
- 해양자율 방제대 참여 인원 및 지역연합회 구성 운영 활성화
  - 해양자율방제대 구성 : ('22) 312개 3,464명 → ('23) 312개 3,471명
  -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 ('22) 5개소 198명 → ('23) 5개소 269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참여	3,666	4,849	132.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90.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우수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례의 구체성과 우수성이 인정됨.
- 방제작업, 교육·훈련의 참여 횟수 및 인원 등 정량적 근거가 풍부하게 제시됨.
- 어업인, 어촌주민의 의견 혹은 자율방제대를 위한 간담회 혹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사업 반영 노력은 다소 미흡함.

과제명	[3-4-2-1]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축산악취 개선사업

[사업목적]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사업구조] 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 사업 시행

[주요사업내용]

-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0개 시·군에 주민참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지역·농가별 악취 개선계획 수립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를 확대하고('23년 50개소)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고농도·고빈도 악취 발생 농가 12개소 집중관리
-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축산법 시행령 시행, '23.6)에 따른 농가 교육 및 점검, 「악취저감 시설 가동 고시」제정
-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생산제품 표시·광고·판매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
- 축산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저감 및 분뇨 활용방안을 포함한 시·군별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완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6,000	6,452	107.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가축분뇨 관련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 합리화 추진, 액비 이용처 확대, 가축분뇨의 관행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함.
-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 거버넌스, 사업 선택, 추진 등 다양성, 연계성이 필요함.

과제명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확산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사업목적]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인의 지역 단위 농업환경 보전 활동 참여 유도 및 관리 지원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지침을 수립하고 마을 주민이 사업 신청,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

[주요사업내용]

-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약사용 저감, 농업생태계 보호, 생활환경 개선, 환경 인식도 제고 등 농업환경 개선·보전에 기여
- 농업환경 보전 활동 수행에 따른 성과 지표설정(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 참여주민의 농업환경 인식도 제고) 및 분석 실시
  - 생물다양성 증진: '20년 선정마을 20개소의 논·밭 생태환경 조사 결과 활동 연차별 평균 관찰 종수 증가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활동 수행에 따라 마을별 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84.0tCO_2, 전체 감축량 5,460tCO_2로 분석
  - 참여주민의 인식도 제고: 사업 전·후 인식도는 19.7%(사업 전, 6개소) → 51.8(1년 후, 6개소) → 64.1(2년 후, 25개소) → 80.1(3년 후, 25개소) → 80.3(4년 후, 25개소)로 증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 마을 평균 참여면적(ha)	30	37	123.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참여자의 인식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여러 마을의 농업 환경보전 우수사례를 제시함.
- 향후 동 사업의 예산확보 및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기추진한 사업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명	[3-4-3-2]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친환경·첨단양식시설 지원

[사업목적] 양식어업인 또는 양식창업 희망자에게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기반 구축 지원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지정한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

[주요사업내용]

- 첨단·친환경 양식 기술 및 시설지원을 통해 양식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일자리 질 개선: 노동집약적인 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CT,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를 통해 어업인 업무환경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속
  - 시설개선: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경영비 절감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 청년 창업, 귀어인 등 양식업 진입희망자 대상 단계별 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진입장벽 완화
-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의 양식시설 보급 및 생산 증대를 위해 양식 어가(7개소)에 첨단·친환경 양식시설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만 톤)	222	230	103.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0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0

주요 평가 의견

- 해역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높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등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춤.
-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로 보기 어려움.

과제명	[3-4-3-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업목적] 훼손·방치되어 있는 과거 갯벌지역(폐염전·폐양식장 등)을 자연갯벌로 복원하여 해양생태계의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조]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대한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갯벌복원(2개소), 식생복원(1개소) 등 신규 갯벌복원사업 지속 확대로 갯벌생태계 기능회복 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신규사업 현황(개소/억 원): ('20) 1/49 → ('21) 3/111 → ('22) 6/128 → ('23) 3/252
- 갯벌복원사업 지침 개정('23.12)
  - 갯벌복원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의 타당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블루카본 국제인증을 위한 협력
  - 신규 블루카본(비식생 갯벌)의 IPCC 인증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국제협력 강화
- 숨쉬는 해안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시행
  - 굴패각 및 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강진) 제작 완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개수	10	12	12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3

주요 평가 의견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함.
- 다양한 복원모델과 생태관광, 어장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성공모델 통한 정책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①	담당부처	환경부

과제 개요

[사업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목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정화, 에너지화 등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 등 수질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

[사업구조] 환경부가 환경청을 경유하여 각 지자체와 농협 조합이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국고 보조금 지급

[주요사업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악취 저감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산 편성·집행지침 개정(1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표준사업비 단가 현실화 및 항목 세분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또는 기존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화 전환 시 우선 지원하도록 지원 우선순위 개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량(㎥/일)	18,644	25,863	138.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악취 저감으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하여,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도출된다고 판단됨.
-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3-4-3-5]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②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사업목적] 개별농가 분뇨처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퇴·액비, 바이오가스 등) 촉진 등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실현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하며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후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

[주요사업내용]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 설치 확대 지속 추진 중
- 적극적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에너지화 시설 및 정화처리시설 설치 등 퇴·액비 외 이용 확대
  - 에너지화(공동자원화) 확대: ('21) 6개소 → ('22) 8 → ('23) 10
  - 정화처리시설 확대(개소): ('21) 58 → ('22) 63 → ('23) 94
-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으로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토양개량제로 사용하기 위한 여건 조성(비료 공정 비료 종류 신설, 10.4 입법예고 완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규 설치(사업자 선정)	1	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4.1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축산환경에 대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특화, 정화, 에너지화 등 다목적 사업으로서 실행방식이 안정적으로 판단됨.
- 시설 설치를 통해 개별농가 분뇨처리 어려움을 줄여주고 자원화를 촉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보완이 필요함.

과제명	[3-4-3-7]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기반시설활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사업목적]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유휴부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 추진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업지구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주도하에 사업을 시행·관리

[주요사업내용]

-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농촌 분야 탄소중립 실현 및 발전 수익금 창출
  -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에 재투자하여 국가 재정 부담 경감 기여 및 농업인 영농편의 도모
  - 저수지, 담수호 등 유휴 수면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인허가·주민 동의 완료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한 지구를 발굴 및 선정하여 수상 태양광 발전소 발전 규모 확대
  - (당초) 재생에너지 17지구 19㎿ → (변경) 20지구 20㎿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 판매 수익금 (백만 원)	14,487	27,734	191.4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5.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2.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4.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의 갈등 주체 파악,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논의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갈등관리 협의체'를 운영함.
- 추진체계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건이나 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 해소 및 수요조사 과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사업목적] 친환경 어업을 선도, 에너지 절감 비용을 통한 어가 경영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및 보조금 교부, 각 지자체와 선정된 민간에서 사업 수행

[주요사업내용]

-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어업인 경영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 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을 173개 양식 어가에 보급하여 연간 9,457톤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 확대
  - 내수면 양식 어가의 사업 확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해수열 히트펌프 → 공기열·해수열 히트펌프로 지원 대상 확대(12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량(kW)	56,455	59,358	105.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5.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2.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 이외에 삶의 질 비전에 부합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잘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와 기대효과도 객관적이며 긍정적임.
-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현황 및 여건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정책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3-4-3-9] 목재펠릿 사용 확대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사업목적] ①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② 목재펠릿 수요기반 확충 및 안정을 통한 농·산촌 연료비 절감

[사업구조]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일정 비율로 하여 지자체별 예산 교부

[주요사업내용]
-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자 콜센터 및 A/S 전담반 운영
  - 목재펠릿 보일러 민원 해소를 위해 콜센터와 A/S 전담반을 운영하고, 폐업한 업체 제품, 보일러 관련 민원, 목재펠릿 판매처 등 농·산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국민 지원 편의 증대 및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 개정
- 난방용 목재펠릿 공급 안정화 대책 마련 T/F 운영
  - (1차) '23.3.22.(수), 15명 참석 / (2차) '23.12.19.(화), 15명 참석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목재펠릿 생산량(천 톤)	572	736	128.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됨.
-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함.
- 성과지표에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연료비 절감액이 담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대상도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3-10]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사업목적] 에너지취약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

[사업구조] 산림청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지원

[주요사업내용]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완료에 따라 일자리 및 수익 창출
- 완주군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 에너지 취약 지역인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지역단위 에너지자립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괴산군 에너지 공급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 완료 수	1	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0
		2-2. 사업 효과 (20)	12.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완주군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 실적이 있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성과지표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연료비 절감 정도가 담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3-11]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장비 확충

[사업목적]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대책 추진을 통해 해양 조업 질서 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로 우리 어민의 소득 증대

[사업구조] 해양경찰청 주도하에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사업내용]

-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우리 해역 內 외국 어선 출현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엄정 대응을 통해 조업 질서 개선
  - 꽃게 성어기 등 시기별 경비함정 증가배치를 통한 특별단속(5회), 유관 기관 합동 순찰(4회) 등
  - 무관용 엄중 대응으로 전년 대비 나포 실적 28% 증가(42척→54척)
-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여부, 어획량 준수 여부,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불법어구 사용 여부 등 철저히 단속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획량 증가에 기여
- 한·중 해양 치안 기관장 회의,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총 3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불법조업 자정 노력 촉구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외국 어선 조업 질서 위반율(%, 하향 지표)	9.5	7.7	118.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3.9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불법 외국어선의 조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단속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첨단화 및 예산 과소화에 따른 한계가 나타남.

과제명	[3-4-4-1]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담당부처	해양경찰청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목적]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구조화를 위해 유해시설(공장·축사 등)이 혼재되어있는 농촌 마을 내 난개발을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재생사업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신청한 각 시·군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

[주요사업내용]

- '22년 대비 '23년 예산 대폭 증액 및 사업지구 지원 확대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소 수(누적) : ('21) 4개소 → ('22) 38 → ('23) 69
  -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 ('21) 25억 → ('22) 320 → ('23) 735
-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 사항 발굴하여 지침 개정('23.12.)
  - 사업 유형 구분(유해시설 정비형, 기존 종합 정비형), 기본계획 협의·수립 기한 명시, 추진실적 점검 등 사업관리 기능 강화 등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립 신규지구(개소 수)	20	31	155.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 시행 주체가 지자체(시·군)이고 사업 추진 절차가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로 구성되어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새롭게 도입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 시행 이후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4-2] 경관보전직불제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사업

[사업목적]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 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구조]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시·군별 수요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선정 및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

[주요사업내용]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면적 21,545㏊의 68.7%인 14,796㏊ 사업면적 배정을 통해 마을경관보전 협약면적 14,532㏊ 대비 파종면적은 13,729㏊로 94.5% 달성
- 경관 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을 고려한 직불금의 지급을 통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 개최가 증가하면서 마을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 현황: 경관작물 관련 축제(234개 지구), 지역축제(242), 농촌관광(45), 체험 등 도농교류행사 연계(12), 기타(19)
- 지역적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위해 '24년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작물 확대 (귀리, 소래풀)
  - (당초) 경관작물 18종, 준경관작물 8종 등 → (변경) 경관작물 19종, 준경관작물 9종 등
- '24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면적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확대
  - (당초) 15천ha(경관 8, 준경관 4, 초지 3) → (변경) 24천ha(경관 15, 준경관 6, 초지 3)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	92.0	94.5	102.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87.2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의 성과지표가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우수사례 제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3-4-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사업목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수산물 생산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접경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율을 제고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시행지침 및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어업인·운영위원회가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관리협약을 체결 후 직불금 지급

[주요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의 소득 보전 효과 강화
  - 어가당 이전소득이 '22년 기준(평균 1,713만 원) 약 7%(1,833만 원) 증가 예상
- 직접지불금을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조건불리지역 마을 공공기금(직불금의 20%) 적립·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 자율 관리 지원, 해양환경 정화 활동 및 어촌사회 복리증진 등의 공익목적 활용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어촌·어업인에 대한 수산공익 직접지불제 보편적 지원강화를 위해「신설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도입 등 수산공익 직불제 확대 개편('23.4)
  -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개편 :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
-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개편과 신설직불제 도입에 따른 보편적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67.1% 예산 증액
  -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억 원): ('22) 558.6 → ('23) 933.2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직접지불금 수급어가 수(%)	82.5	38.7	46.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4.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1.3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7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어업소득은 하락하고 어업외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가당 이전소득이 7% 증가하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도출됨.
- 초고령화된 어업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스스로 직불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어업인의 여건을 고려한 집행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4-4]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①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목적]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 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사업구조] 시·군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농식품부에서 심의·지정 후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업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유산지역의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운영실태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 등 마련, 제시
- 세계 농업유산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통해 농업 유산의 가치 확산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세계중요농업유산 2개소(금산, 하동), 국가중요농업유산 3개소(구례, 장흥, 고성) 모니터링 시행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업 유산 방문객 수(백만 명)	17.9	19.3	107.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농업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 신규 신청물량 부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1년차 사업비가 불용되고, 계획 대비 미실시된 사업이 있음.

과제명	[3-4-4-5]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②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

[사업목적] 어촌의 유·무형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여 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조]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계획을 수립, 해수부의 승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어업 유산이 증가하고 있으며('23년 2개소),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성과 2개소
  -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제주 해녀 어업시스템
-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개정('23. 8.)
  -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 자원으로 어업유산의 범위를 넓힘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 시행 지침 개정('23. 11.)
  - 전문가 방문 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업유산 지역 관광객 방문(만 명)	116	123	106.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88.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정책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정책홍보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 현재의 지표인 어업유산 지정지역의 어업 관광지 방문객 수는 본 사업의 직접적 성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3-4-4-6]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목적] 농업·농촌 공익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증진

[사업구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과제로서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지원 활동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5조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의 기반으로서의 농촌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에 따른 경제적 가치 산정
  - 농촌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율 29.94%, 지불의사액 2,994원, 우리나라 인구를 반영한 경제적 가치 약 1,545억 7,458만 원
- 농업유산 및 전통수리시설 관련 제도 개선 정책자료 제출(2건)
  - 전통수리관개시설 보전을 위한 농업유산 후보 발굴 사례 활용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자원관리·활용 기술개발 및 현장 활용 건 수	2	3	15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세밀한 사업 추진 방식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효과 도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4.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1-1-1]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5">과제 개요</td><td colspan="5">[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td></tr>
<tr><td colspan="5">[사업목적] 농업·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체험관광을 융복합하여 농촌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td></tr>
<tr><td colspan="5">[사업구조] (민간보조) 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이 신청한 계획을 농식품부가 승인 후 사업 추진, (지자체 보조) 시·군이 수립한 발전계획을 시·도가 평가, 농식품부가 최종 선정하여 사업 추진</td></tr>
<tr><td colspan="5">[주요사업내용]
•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체험·관광을 추진하는 인증 경영체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 연도별 인증 사업자: ('19) 1,624개소 → ('21) 2,034 → ('23) 2,396
• 인증 경영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증대
- 매출액 : ('21) 3.3조 원 → ('22) 3.6
- 고용인원 : ('21) 15,685명 → ('22) 16,288
• 농촌융복합산업 인지도 및 소비자 요구, 서비스 만족도 등 관심 영역을 조사하여 홍보방식 및 판로개선에 반영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지도 : ('20) 26.3 → ('22) 36.3 → ('23) 38.7</td></tr>
<tr><td colspan="5"><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계획</th><th colspan="3">달성</th><th colspan="3">달성률(%)</th></tr>
<tr><td colspan="3">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개소)</td><td colspan="3">2,365</td><td colspan="3">2,396</td><td colspan="3">101.3</td></tr>
</table></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 colspan="2">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20.0</td></tr>
<tr><td colspan="2">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8.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 colspan="2">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 colspan="2">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20.0</td></tr>
<tr><td colspan="3">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10.0</td></tr>
<tr><td colspan="3">총점 (100)</td><td colspan="2">96.7</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3">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5.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운영 주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으며, 수행 주체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함.
• 인증 사업체 수 이외에 매출, 고용, 지역농산물 이용 등 더욱 다양한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td></tr>
</table>

과제명	[4-1-1-3] 산림분야 6차 산업 육성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산림소득분야 사업

[사업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

[사업구조] 산림청이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지자체별 사업 대상지를 공모·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보조

[주요사업내용]

- 지역특화 임산물을 활용한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산업 간 융·복합 및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개정(12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개소)	1	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6.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0.7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0.1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2024년 폐지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볼 때 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함.
- 폐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등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과제명	[4-1-2-1] 푸드플랜 내실화 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목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 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확산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 선정된 지자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지역 여건에 맞는 시민사회 푸드플랜 실천모델 발굴·지원으로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아동복지센터, 노인케어센터 등 먹거리 취약계층 2,599명 대상 로컬푸드 먹거리 나눔, 관련 분야 지역 일자리 창출 44건
-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평가 공정성 제고 및 지자체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가 회의,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평가 기준 개선
  - (당초) 13개 과제 17개 지표 → 5개 과제 14개 지표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먹거리위원회 활성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지원한 결과, 전국 139개 지자체로 확산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수: ('19) 49개소 → ('20) 91 → ('21) 111 → ('22) 139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수	100	104	104.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함.
- 현재 성과지표는 투입지표에 해당하며,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역 먹거리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1-2-2] 푸드플랜 내실화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는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시·도 또는 aT를 경유하여 시·군·구 또는 사업체에 교부금을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직매장 확대 및 경영 안정화 지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취약농가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전체 직매장(866개소) 매출액 9,772억 원(개소당 평균 11.3억 원)
- 순회 수집: 취약농가 순회 수집 지원으로 직매장 참여 확대(10개소)
  - 취약농가 수: ('22) 493명 → ('23) 734명(48.9%↑)
  - 수집 물량: ('22) 417,656㎏ → ('23) 1,015,318㎏(143%↑)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주체인 농협,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직매장 실태조사, GAP 농산물 취급 확대 등 운영 내실화 추진
  - 공공 및 민간(농협 등)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866개소) 실태조사 추진 및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GAP 인증 농산물 취급 확대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10,200	10,405	102.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지속적인 직매장 매출액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하 농가 수와 수집 물량이 증가함.
- 취약농가 순회 수집 지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센터와 식생활 교육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연계를 통한 로컬푸드 사회적 가치 확산의 시너지 제고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사업목적] 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
②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으로 농가 창업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구조] 농촌진흥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중심의 원스톱 가공기술 및 창업·보육 지원
  - 신규창업 경영체 수 증가 : ('22) 134개소 → ('23) 140 (4.5%↑)
  - 농업인 창업보육 및 코칭 : ('22) 8,513명 → ('23) 10,314 (21.2%↑)
  - 시제품 개발·상품화 지원 : ('22) 1,858건 → ('23) 2,035 (9.5%↑)
  - 가공기술 이전 : ('22) 248건 → ('23) 363 (46.4%↑)
  - 창업보육 경영체 평균 매출액 증대 : ('22) 84.2백만 원 → ('23) 99.2 (17.8%↑)
- 「창업 준비~자립경영」까지 원스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확대(누계) : ('22) 101개 시·군 → ('23) 103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시제품 개발(건)	45	318	706.7
매출액 증가율(%)	14.1	17.8	126.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8.6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시제품 개발, 매출액 증가 등 적절한 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시제품 개발과 매출액 향상으로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기조성된 농산물가공종합센터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사업내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목적]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주체로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운영

[사업구조] 지자체에서 수협 등을 통해 어업인, 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신청을 받아 해수부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연계한 전국 단위의 수산물 신유통망 구축을 통해 유통 선진화 도모
- 수산물 신유통망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보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 추진 중
-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건립 후 운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예정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공정율(%)	47.5	47.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4.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6.7
		2-2. 사업 효과 (20)	10.7
	3. 정책 환류 (10)		6.0
	총점 (100)		7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2.7

주요 평가 의견

- 지역 수산물을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처리·유통하고자, 거점센터를 건립·육성함으로써 생산자들의 마케팅 접근성을 개선함.
- 본 사업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와 운영·관리 계획 수립 등이 중요함.

과제명	[4-1-2-5]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②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직거래 활성화 추진

[사업목적]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직거래 등을 확대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사업구조] 해수부에서 보조사업자인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수산물 소비 활성화: 농·축산물 위주의 로컬푸드 개념을 광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로컬 직매장에 지역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생산자 판로 확보 지원
  - '23년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물 공급자 9개사, 로컬매장 9개사(20개 매장) 선정·지원
- 온라인 유통 활성화: 영세 업체(어업인)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거래 시장(전자상거래, 홈쇼핑) 진입을 위한 컨설팅 및 입점 지원을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어업인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관리·컨설팅(80개소), 홈쇼핑 입점 지원(18개 업체)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로컬직매장 입점 수(개소)	9	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농·축산물 중심의 로컬푸드 개념을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급함. 증가한 로컬매장의 매출과 온라인 판매 수익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과가 입증됨.
- 소비자들의 정보 습득 및 소비 경로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4-2-1-1] 농촌관광 활성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융복합활성화지원사업(농촌관광 활성화)

[사업목적]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 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사업구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승인·관리

[주요사업내용]

- 다양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농촌관광 경영체의 소득이 증대로 이어져 지역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촌관광 방문객수(만 명): ('21) 731 → ('22) 928 → ('23) 1,125
  - 농촌관광 매출액(억 원): ('21) 660 → ('22) 857 → ('23) 952
- 경영지원 확대: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 관광농원: 당초 1차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지원(농협 자체 규정)하던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 대상을 관광농원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종합자금(관광농원) 지원 대상자 요건 완화
  - 농어촌민박: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23.4월~12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	1,040	1,125	108.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7.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평가하나, 방문객 수 외에 체류 기간이나 소비지출액 등 추가 성과지표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농촌관광의 공급 주체,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춘 새로운 농촌관광 형태 등에 대한 발굴과 지원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4-2-1-2] 어촌관광 활성화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목적]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일자리 창출 및 어촌 활력 기반 구축

[사업구조] 민간과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해 해수부에서 승인하고 보조금을 배정하여 마을별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23년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객이 156만 명, 체험소득이 221억 원에 달하는 등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한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체험객(만 명) : ('21) 113 → ('22) 129 → ('23) 156
  - 체험소득(억 원) : ('21) 184 → ('22) 217 → ('23) 221
- 특화 육성: 어촌자원을 활용하는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어촌마을 육성으로 新관광모델 개발 및 소득 다각화 지원
  - 체험마을 특화조성 컨설팅(4개소, 마스터플랜 및 관광시설 조성 지원), 민간관광기업(11개사)과 체험마을(21개소)을 매칭한 민간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 연계상품 개발: 여행사 팸투어를 개최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역 관광 자원 연계 활성화, 여행상품 발굴·기획 및 대국민 인지도 확대
  - 팸투어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 유산 관광코스 발굴 및 상품 기획을 위한 도시-지방 연계 관광 유관기관 협업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객 수(만 명)	132	156	118.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1.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다양한 정책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漁케이션'은 트렌드를 반영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적용한 우수사례로 평가함.
- 현장점검이나 담당자 워크숍 등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환류 등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명	[4-2-1-3] 해양관광 활성화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컨텐츠 개발·발굴사업

[사업목적] 연안·어촌지역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축제·스포츠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연안·어촌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사업구조] 해수부가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선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배정

[주요사업내용]

- 연안·어촌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지역민 대상 레저체험기회 제공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지원
- 크루즈 관광객은 3년 3개월만의 입항 재개('23.3) 이후 연말까지 코로나19 직전인 수준인 27여만 명의 관광객이 크루즈선을 통해 한국을 방문
- 요트, 서핑 등 11개의 해양스포츠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지원하여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수욕장은 지역행사·축제 및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운영 노력으로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 활성화 도모
- 해양 치유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해양 치유센터 조성 중이며 금년 완도 센터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무료 시범운영 시행(9.21~11월 중) 후 국내 최초 정식 개관('23.11)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해양레저관광 수요 창출 노력도(%)	100	100	100.0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률(%)	60	71.5	119.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해수욕장 만족조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수해수욕장 선정, 알박기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해수욕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이 인정됨.
- 해양레저관광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실제 콘텐츠 상품 및 행사 참여 인원, 매출액 등의 성과지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사업목적] 취약한 농촌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농촌관광 수요 확대

[사업구조]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체가 되어 농식품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업무협의, 각 지자체 관광 담당자 및 현장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직접 수행

[주요사업내용]

- 농촌 마을 내 디자인 적용 사례 확산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현장 실증연구 대상마을 2개소(홍성 오누이 마을, 부안 청호수 마을) 대상으로 포용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시설 개선
- 주민참여를 통한 농촌관광으로 환경보전 및 상호존중 제고
- 농촌관광마을의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및 경영전략 현장 실증 추진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관광디자인 및 서비스제고 기술(건)	3	5	166.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3.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편의시설 개선, 숙박시설 개선, Barrier Free 디자인 적용, 환경친화적 공정관광 개발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참여가 확대되는 한편, 실제 농촌관광 방문자의 의견과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2-1-6] 음식관광 활성화 (찾아가는 양조장)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사업목적] ① 각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체험·관광이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② 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구조] 시군 지자체와 aT가 시행 주체가 되어 민간 양조장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지자체 경상보조를 활용하고, 그 외 홍보·컨설팅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활용

[주요사업내용]

- 찾아가는 양조장 포스터 및 여행 가이드북 제작·배포하여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 방문객/매출액: ('22) 45만 명/917억 원 → ('23) 666만 명/1,189억 원
- 통합예약 홈페이지 신설하여 참여 양조장 증가, 예약 및 체험 활성화
  - 참여 양조장 (개선 전) 25개소 → (개선 후) 41개소
  - (실적) 예약 2,785건, 체험 1,825건 진행
-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5개소) 및 지역 확대(인천 부평, 충남 천안 등)
  - 신청현황(누적) : ('22) 50개소 → ('23) 55 / 시·군 지역 : 41개 → 44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 선정(개수)	5	5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4.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참여 양조장 수 증가,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등 사업 효과의 정량적 수치가 본 사업 수행 타당성을 뒷받침함.
-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양조장 방문객 증가율, 직원 고용 등으로 발생한 일자리 창출 수 등을 보완된 성과지표로 고려할 수 있음.

<table>
<tr><th>과제명</th><th colspan="3">[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th><th>담당부처</th><th>농림축산식품부</th></tr>
<tr><td rowspan="6">과제 개요</td><td colspan="5">[사업명] 농업법인 취업 지원 사업</td></tr>
<tr><td colspan="5">[사업목적]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체의 경영 능력 향상 및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td></tr>
<tr><td colspan="5">[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민간 경상 보조를 바탕으로 해당 요건 충족 농업경영체에 인건비 지원</td></tr>
<tr><td colspan="5">[주요사업내용]
•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향상하고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보조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한 집행 관리 강화
- 보조사업자 현장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집행 관리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td></tr>
<tr><td colspan="2">성과지표</td><td>계획</td><td>달성</td><td>달성률(%)</td></tr>
<tr><td colspan="2">전문인력 지원(명)</td><td>40</td><td>40</td><td>100.0</td></tr>
<tr><td rowspan="8">평가점수</td><td colspan="3">구분</td><td colspan="2">점수</td></tr>
<tr><td rowspan="5">수행도</td><td rowspan="2">1. 계획·집행 (40)</td><td>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td><td colspan="2">17.3</td></tr>
<tr><td>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td><td colspan="2">16.0</td></tr>
<tr><td rowspan="2">2. 정책 성과 (50)</td><td>2-1. 사업 실적 (30)</td><td colspan="2">28.7</td></tr>
<tr><td>2-2. 사업 효과 (20)</td><td colspan="2">11.3</td></tr>
<tr><td colspan="2">3. 정책 환류 (10)</td><td colspan="2">6.0</td></tr>
<tr><td colspan="2">총점 (100)</td><td colspan="2">79.3</td></tr>
<tr><td>영향력</td><td colspan="2">삶의 질 영향력 수준 (5)</td><td colspan="2">3.0</td></tr>
<tr><td>주요 평가 의견</td><td colspan="5">• 농업법인 채용자별 상황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수 없는 지원체계를 갖춤.
• 사업의 규모가 매년 축소되어 2024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 혹은 중·고령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로 사업의 목적을 조정하여 사업을 재기획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td></tr>
</table>

과제명	[4-3-1-3]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

[사업목적]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온실) 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농 후 안정적 운영역량 제고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지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청년 농업인(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실시

[주요사업내용]

-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온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영농창업 후 실패를 최소화하고 운영역량을 제고
  -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실습 기회도 얻고 임대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가능
-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 요건 완화
  - 임대 기간 3년(갱신불가) →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차농에게는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임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개소)	17	17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3.3
	3. 정책 환류 (10)		7.3
	총점 (100)		85.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온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영농창업 후 실패를 최소화하고 운영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음.
- 실습 농장 임대로 청년들의 영농역량 변화 등을 창농 성공실적 등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반한 성과지표 개발도 필요해 보임.

과제명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 사업

[사업목적] ①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 유입 유도
②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유형별(신기술, ICT, 가공, 체험관광, 유통마케팅)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구조]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모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컨설팅 등 지원

[주요사업내용]
- 청년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초기 사업비 지원
  - 지원 개소 수: ('20) 40개 → ('21) 40 → ('22) 160 → ('23) 136(누적 376)
- 사업 효과: '23년 사업참여 경영체 평균 소득증가율 49.6%
  - 분야별 평균 소득증가율: 신기술 32.5%, ICT 58.4, 가공상품화 41.7, 치유 체험관광 35.0, 유통 마케팅 21.3
  - 주요 성과물: 신제품 개발 113건, 시제품 제작 143, 특허출원 등 24, ICT 도입 10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연차별 확대('24, 5,000명) 추진 중이며, 정착 초기(독립경영 3년 이하) 이후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희망자 증가 추세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사업참여 경영체 평균 소득증가율(%)	43.5	46.6	107.1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소득 증가 등 사업의 정량적 효과가 높게 나타남.
- 향후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적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패키지형 지원 사업으로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자금·농지 등을 종합 지원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 시·도에서 농업인 선발 및 지원

[주요사업내용]

- 영농 정착 지원사업 선발 규모 확대와 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농업·농촌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선발 규모 : ('22) 2천 명 → ('23) 4천 명
- 지원 확대: 영농정착지원금 및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개선으로 청년·후계농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도모
  - 영농정착지원금 : ('22) 월 최대 100만 원 → ('23) 110만 원
  -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22) 최대 3억 원, 2%, 5년 거치 10년 상환 → ('23) 최대 5억 원,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률(%)	92.2	92.2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청년농 선발, 청년농 육성 통합지원, 사후관리, 예산집행 등 사업 절차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같은 목적의 유사 사업인 정착지원금 사업 등과 유기적 연계도 향후 고려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3-1-6] 청년 어업인 후계영어자금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사업목적]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사업구조] 지자체의 수협중앙회가 농특회계 예산 활용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에 융자 지원

[주요사업내용]

- 후계 청년 어업인의 어업활동 유도를 통해 어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등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고 어업 활성화에 기여
- 어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수협·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 중장기 계획 및 체계적 선발 기준 수립
- 창업 등 초기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어업인 후계자 융자조건 및 한도 개선
  - 연이율 2.0 → 1.5%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 한도 최대 3억 → 최대 5억 원
- '제1차 후계 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3. 3)을 마련하여 청년 인력(4,100명, ~'27) 양성 추진
  - 향후 5년간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 어선원 600명 육성 목표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수산업경영인 이차보전 집행	10,609	10,60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0.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중앙회가 연계하여 대상자 선발, 사후관리, 예산집행 등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 단순 융자로 사업이 구성되어있다는 한계가 있어,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실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맞춤형 경영관리 및 사업 성장 컨설팅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활성화, 전문 경영체 육성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제명	[4-3-1-7]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사업구조] 시·도에서 시·군·구 지자체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예산안 마련

[주요사업내용]

- 농촌의 유휴시설의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 활력 증진 기여
- '23년 준공 기준 3개 지구에서 총 14명(지구당 약 5명)이 고용되어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추진체계 개정: 회계 이관(농특 → 균특)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계 변경
  - 대상자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전 대면 협의 및 승인 주체 변경(농식품부 → 시·도), 사업 추진 일정 등 변경
- 연부율 변경: 연례적 실집행 부진사업 탈출을 위한 연부율 조정
  - (현행) 1년차 40%, 2년차 60% → (개정) 1년차 20%, 2년차 80%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 일자리 창출 수	10	14	140.0
지역주민 만족도	80	85.3	106.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9.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변경,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주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후의 주민만족도 및 시설활용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기조성된 시설의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과제명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상담·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구조] (농정원) 농식품부가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공모·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제공, (지자체) 농식품부가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운영

[주요사업내용]

-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 지원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귀농·귀촌 인구: ('20) 494,569 → ('21) 515,434 → ('22) 438,012
- 농촌지역 시군의 참여 증가('22: 95개 → '23: 100)로 참가자의 선택지 다양화, 참가 832가구 중 140가구(16.8%, 185명, 57개 시·군) 전입(12월 기준)
  - ('22) 95개 시·군 / 119개 마을 / 882가구 / 1,140명 → ('23) 100 / 126 / 832 / 1,081
- 지역·품목 등 유사한 관심을 지닌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커뮤니티' 확대 추진
  - 모임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및 활동 계획·목표 수립 후 커뮤니티별 지역 현장 프로그램 진행 → 커뮤니티별 코디네이터, 지자체 담당자·전문가 매칭을 통해 활동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귀농·귀촌 체험 및 교육 후 정착률(%)	29.4	29.6	100.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우수사례를 충실하게 제시하였으며, 교육과 함께 살아보기 등 도시민과 농촌 간 교류 및 이해, 이주를 위한 준비 지원 등 준수하게 추진됨.
- 지자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완된 조치가 필요함.

과제명	[4-3-2-2] 귀어·귀촌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육성)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사업목적] 귀어·귀촌인에게 필요한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사업구조] 해수부의 기본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와 어촌어항 공단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어촌지역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706명→742) 선정·지원
- '23년 동·서·남해 지역별, 어선어업·양식업 등 업종별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형 교육(귀어 학교) 1개소(인천) 추가 지정하여 확대
- 귀어·귀촌 관련 전문가로 어촌 정착 상담사를 확대(76명→96)하여 운영하고, 정착 시 어려움을 겪는 귀어·귀촌인(희망자)을 연결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지원금 대상자(어업·양식업자→수산물 유통·가공업자 포함) 및 규모(월 100만 원→110) 확대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 유도
-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으로 귀어·귀촌인에 대한 지원 다양한 지원정책 방안 마련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자 수(명)	720	742	103.1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자 수(명)	225	227	100.9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6.0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젊은 신규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지표를 장단기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자 수와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자 수로 설정함.
- 사업 수혜자들의 일정 기간 이후 정착률을 모니터링하여, 사업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①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③ 축산분야 ICT시설 지원 ④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⑥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목적] 스마트팜 시설 원예 및 축산 보급을 통해 청년농 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구조]
① (시설보급) 농식품부-전담기관 연계하여 농업인 등에 시설보급 관련 컨설팅 지원, (온실 신축)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공모하고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
② (신재생에너지보급) 각 지자체가 위탁사업자를 통해 에너지효율화 지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지원) 사업추진단이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에 사업위탁 추진
③ 희망 농가에서 컨설팅 후 ICT 장비 도입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 및 지원
④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희망 지자체를 농식품부에서 선정하여 추진
⑤ 농식품부의 기본계획과 예산을 바탕으로 농정원과 보육센터에서 교육 운영 수행
⑥ 사업단을 설립하여 주관기관과 과제 협약 및 연구 수행

[주요사업내용]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집행률, 사업 포기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 전 전문기관(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지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추가
-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민원반발을 최소화하고자 신규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소규모단지를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 완화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예산 확대 편성하고,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 대상에 수열, 축분 고체연료 활용 냉난방시설 추가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현장 문제극복을 위한 솔루션과 스마트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지원으로 사업 확대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①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률(%)	7.0	7.0	100.0
② 연간 에너지 절감량(TOE)	3.4	3.4	100.0
③ 스마트축사 보급(호)	6,900	7,265	105.3
④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정률(%)	30	30	100.0
⑤ 청년 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만족도(점)	4.1	4.2	102.4
⑥ 연구개발과제 수	49	49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스마트팜 농가 실태조사, 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설문조사 등 수혜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 성과 검증을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세부사업 중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의 경우 주민 반발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3-3-2]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담당부처	농촌진흥청

과제 개요

[사업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목적] ① 4차 산업혁명 대응기술 융복합으로 새로운 기술보급체계 구축
②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용 의지 향상으로 확산 가속화

[사업구조] 농촌진흥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거쳐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 및 교육

[주요사업내용]

- 스마트농업 기술소개와 교육, 컨설팅을 목적으로 ICT 시설을 포함하는 하우스·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현장 전문가 양성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23년, 119개소)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소개, 체험형 교육 및 농업 데이터 활용 컨설팅 제공
  - '23 주요 실적: 교육 748회(11,180명), 컨설팅 883회, 기술 실증 177건, 만족도 91.5%
  - 스마트팜 기술수용: 농가 수(179명) 8.9%↑, 면적(56.1ha) 5.9%↑, 품목(17) 4.3%↑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향상률(%)	23.0	23.0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업으로 인하여 스마트농업의 확산이 수치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됨.
- 성과지표로 참여 농가의 생산량 증가 정도를 설정하였는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통해서 스마트팜 기술수용 또는 적용의 확대, 참여자의 만족도 등 직접적인 성과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과제명	[4-3-3-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목적] 어촌지역에 AI·IC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및 생산·가공·유통·인력양성 등의 연관산업 집적을 위한 배후단지 조성 지원

[사업구조] 해수부가 지자체에 시행지침 시달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주요사업내용]

- 첨단양식 기술 개발·실증 및 연관산업 집적화한 대규모 양식 단지 조성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추진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전환을 위하여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추진('23년 3개소 착공)
  - (전남 신안) '23.4.21, (경북 포항) '23.11.7, (강원 강릉·양양) '23.11.20 착공
- 전국 주요 거점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양식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해 최적 사육조건 도출 및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추진('23~'25, 부산, 170억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국내 양식 수산물생산량(만 톤)	222	230	103.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1.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7

주요 평가 의견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현장점검, 간담회,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담당자,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을 추진함.
- 스마트양식 단지 조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3-3-4]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사업목적] 산림생명 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계, 임업인(재배임가) 간 지역 협업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구조] 산림청이 계획을 총괄, 예산을 확보한 뒤 시·도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 선정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내용]

- 거점 조성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천연물질 개발로 국내 바이오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공급하여 식·약용 소재 개발 R&D와 연계하여 의약품, 화장품,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 산림 분야 그린바이오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이용실태 분석, 산업화 기반 구축,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 등 4대 추진전략 수립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산림생명자원 분양 건수(건)	78	78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0
		2-2. 사업 효과 (20)	14.0
	3. 정책 환류 (10)		6.7
	총점 (100)		86.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0

주요 평가 의견

- 지역 협업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촉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 순환 경제 구축 목표에 부합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산림생명 자원의 이용 활성화와 안정적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평가하므로, 단순히 분양 건수로 해당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지 성과지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과제명	[4-3-3-5]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자금·투자·판로 등 지원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의 안정적 창업·성장 도모

[사업구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일부 국고보조로 농식품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추진

[주요사업내용]

- '23년 최초 협약 인턴 47명, 농식품 창업기업 24개사가 협약하여 총 43명이 수료 후 창업 예정·완료하거나 취업 달성
  - 수료 인턴 중 창업 인원 3명, 취업 인원 3명, 창업 예정 4명, 취업 예정 33명
- (벤처창업 인턴제) 벤처창업 인턴제의 성과 제고 및 연계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
  - 지원 확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사업 지원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인턴 실습비 상향 및 후속 지원 확대
  - 취·창업 지원 참여기업에 인턴 선발권 부여하여 인턴 종료 후 취업 연계 및 창업 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 후속 지원 확대
-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농식품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해 육성 기간 제한 폐지하고 액셀러레이터 육성 확대(4社→8)
  -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80社 이상)하고, 멘토링, 교육, 모의IR, 밋업 등 액셀러레이터별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청년 창업 인턴 지원 수(명)	50	47	94.0
벤처·창업 기업 지원 수(개)	14	47	335.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7.3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인턴제 개편 및 엑셀러레이터 발굴의 성과지표로, 청년창업 인턴 지원 수(명), 벤처·창업 기업 지원 수(개)를 설정하였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농촌과의 연계성, 지역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보완된 관점이 필요함.

과제명	[4-3-3-6]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사업목적] 민·관 합작 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확대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사업구조] 농식품부 출자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관리 전문기관이 민간 매칭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주요사업내용]

-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민·관 공동 투자 시장을 확대,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육성하여 농식품 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농식품펀드 투자를 받은 경영체 중 167개 경영체에서 평균 매출액 35.7% 증가, 175개 업체에서 고용인원이 10.0% 증가
- 정부 예산 및 회수금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여,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자펀드 결성액(민간) : ('18~'22년 평균) 1,484(810)억 원 → ('23) 2,008(1,235)억 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식품펀드 누적 투자실적(억 원)	10,686	11,503	107.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6.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2.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3.3

주요 평가 의견

-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을 통한 모태펀드 투자는 적절한 시도임.
- 제시된 성과지표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중요한 지표이나, 투입지표라는 한계가 있음. 투자의 성과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과제명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사업목적] 수산 분야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지원 제공 및 수산 펀드 운영을 통해 투자생태계 구축

[사업구조] (창업투자지원) 지자체 연계하여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
(창업콘테스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민간 위탁을 통한 행사 주최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 사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수산모태펀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 수산 펀드 결성 및 투자

[주요사업내용]

- 전국 7개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부산·제주·강원·경북·전남·충남·전북)를 지정·운영하여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를 활성화
  - 수산식품 가공, 유통, 바이오, 기자재 등 해양수산 기업 397개 사를 지원하여, ① 창업·기업 교육, ② 마케팅, ③ 시제품 개발, ④ 판로개척 등 지원
  - 신규 일자리 1,626명, 신규 창업 35개, 매출액 증가율 12.4%, 신시장 확보 건수 309개, 여성 참여율 27.4% 달성
- (여성) 해양수산분야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방법개선 등을 통해 전체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 27.4% 달성
- (청년) 청년 기업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창업 상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체 수혜기업 중 75개사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창업기업 수(개소)	35	35	100.0
자조합 결성 수(건)	1	1	100.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9.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창업지원을 받은 지역 우수기업으로 지역의 고용 및 소득 증대 향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여성 및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짐.
- 전반적으로 수산 산업 창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기대되며, 성과목표의 상향 설정 가능성의 검토를 권함.

과제명	[4-3-3-8]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사업목적] 잘 가꿔진 숲을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구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의 조성 계획을 승인 후, 조성사업에 국고 지원

[주요사업내용]

- 지역균형 발전 및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산림복지 기회 제공을 위해 자연휴양림 등 인프라 조성 확대
  - 자연휴양림 5개소·숲속 야영장 6개소·산림욕장 3개소 신규 조성
- 국립 치유의 숲 2개소를 완료하여 전라·경상권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예방적 건강관리 및 유동 인구에 대한 치유 연계 활성화 유도
  - 국립 치유의 숲 누계 : ('22) 11개소 → ('23) 12 (화순 개장, 부산 완료)
- 저출산 고령화 대비한 국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에 산림치유 연계 확대
  - 중앙치매센터 협력('22.4월) → 난임 우울증 개선을 위한 협력('23.5월)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	48.7	49.2	101.0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7.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6.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8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산림욕장 등 사업 개소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산림복지소외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함.
- 전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뿐 아니라 주민 일자리 수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과제명	[4-3-3-9]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담당부처	산림청

과제 개요

[사업명]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사업목적]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구조] 산림청에서 위탁사업자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 지원

[주요사업내용]

-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할 공동체 중심의 산림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그루매니저'를 선발·육성
  - 그루매니저 운영 : ('22) 45명 → ('23) 45명
- 산림자원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단계부터 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의 육성사업을 기본 3년, 추가 2년 동안 지원
  - ('23) 1,636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231개의 그루경영체를 육성하고, 이 중 57개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설립을 완료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산림일자리 발전소 운영 지역(개소, 누적)	45	48	106.6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7
	3. 정책 환류 (10)		9.3
	총점 (100)		96.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7

주요 평가 의견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그루경영체 활동 및 판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다양한 사업들의 우수성이 높으며, 산림자문단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함.
- 2026년 일몰 예정 사업이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방안이 필요함.

과제명	[4-3-3-10] 말산업 육성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목적]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구조] 지자체와 한국마사회가 사업신청자와 농식품부 사이에서 사업 관리 역할을 수행

[주요사업내용]

-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승마체험 인구 확대에 따른 국민여가 선용에 기여
  - 정기승마(명) : ('20) 42,315 → ('21) 48,970 → ('22) 58,659 → ('23) 58,659p
  - 체험승마(명) : ('20) 454,915 → ('21) 476,154 → ('22) 490,492 → ('23) 490,492p
- 승용마 품평회 및 권역별 지역대회 확대 지원 및 현장 승마대회 우수 승용마 거래창구 마련으로 생산 농가 판로 확대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더욱 많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으로서의 지속적인 승마체험 환경조성 마련
  - 참여 학교 및 인원 : ('22) 20개교 1,005명 → ('23) 26개교 1,249명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정기 승마 인구수(명)	55,000	58,659	106.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9.3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91.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말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말 사육두수, 승마시설, 승마 인구 및 말산업 규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통계화 및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활용함.
- 수혜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과제명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과제 개요

[사업명]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업구조] 여가부와 고용부가 수립한 사업 지침과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새일센터 운영에 예산 지원하는 한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주요사업내용]

- 취업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159개소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16만 명('23.12월 기준)이 취업에 성공
  - 취·창업 인원 : ('23.12) 16만 명
  - 농어촌 취·창업 인원 : ('23년) 2,445명
- 여성창업 지원: 중기부·LH 등 부처·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형태로의 여성 진출 지원
- 농어촌 지역 직업교육훈련 지원: 농어촌형 새일센터(9개소)에서 '23년 직업교육훈련 총 22개 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농어업·6차 산업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어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건수	2,404	2,445	101.7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9.3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20.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7.3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로 제시된 농어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건수는 사업 목표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라 평가됨.
-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자의 근속 기간 및 소득 변화를 추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질적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함.

과제명	[4-4-1-2]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사업목적] 결혼이민여성에게 정착 단계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여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사업구조] 농식품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거쳐 지역농협이 지역 내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교육 사업 추진

[주요사업내용]

- 농촌 내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일손 부족을 해소
- 결혼이민여성 리더 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제작,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교육성과 공유 및 홍보
- 정착단계 및 영농지식에 따라 단계별 농업 교육과정 운영
  - (기초) 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문화이해 및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기초 농업교육 실시
  - (심화)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기초 영농지식이 있는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심화 농업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업교육 및 농촌 정착 과정 교육(명)	1,500	2,258	150.5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7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7.3
	3. 정책 환류 (10)		8.7
	총점 (100)		91.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3

주요 평가 의견

- 성과지표로 제시된 농업교육 및 농촌 정착 과정 교육 인원은 사업목적이 결혼이민여성에게 정착 단계별 영농교육을 제공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성과목표 달성률이 탁월한데 반해 정책 우수사례 도출 및 홍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과제명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과제 개요

[사업명]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목적] 농업 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사업구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최종 지급액 확정 통보 및 사업 점검

[주요사업내용]

- 국내 인력: 인력 중개 및 도시구직자 유입 촉진 등으로 공공부문 국내 인력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연인원, '22: 955천 명→ '23: 1,150)
  - 농촌인력 중개센터: 인력 필요 농가에 근로 인력을 중개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농촌형) 확대 운영('22: 154개소 → '23: 170)을 통한 인력 중개 확대
  -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및 구인-구직자 온라인 매칭 강화를 위해 도·농 인력 중개플랫폼 구축·운영('23.2월~)
- 해외 인력: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입국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22년: 2.2만 명→ '23: 4.1)
  -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 당 고용 허가 허용 인원 증가(기존: 4~25명 → 개선: 8~50, '23.9.11~)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농촌인력 중개센터 유상중개실적(천 명)	985	1,150	116.8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30.0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8.0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고령농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시행하는 등 유효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짐.
- 우수한 사업수행 체계로 인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단계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검증체계가 미흡함.
- 인력 충족률과 같이 사업이 인력난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제명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목적] 수산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를 연결하여 수산업·어촌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사업구조] 해양수산부가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후 수협은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요청

[주요사업내용]

- 수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어촌의 인력난 해소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 다양한 업체의 구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업 분야 인력을 유도하여 업체에서 구직자를 모집하는 데 기여
  - 지속적인 수산 분야 기피현상에도 불구하고 229건의 채용 성사 및 5,174건의 일자리 정보 제공
- 동·서·남해 등 해역별 주 종사 업종이 상이함에 따라 권역별 지역 센터를 둠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매칭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채용 성사 건수	275	229	83.3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18.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20.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4.7
			2-2. 사업 효과 (20)	14.7
	3. 정책 환류 (10)			8.0
	총점 (100)			85.4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4.0

주요 평가 의견

- 일자리 알선 대상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고용유지율을 파악하고 사업참여자 신규 발굴을 위해 SNS를 활용함.
- 수산업·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체감효과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혜자 대상의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과제명	[4-4-2-3]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과제 개요

[사업명]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목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인력 부족 완화 및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구조] 고용노동부가 도입 규모 결정, 선발계획 수립 후 외국인 취업 관리 제도 운영 및 귀국 지원 사업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대행 지원, 지방 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및 각종 신고처리와 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주요사업내용]

- 농어업 수요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농축산업: 전 규모에 걸쳐 2배 수준으로 고용 한도 상향
  - 어업: 척당 고용 한도 2배 수준 상향 및 외국인 승선 비율 상향
- 외국인 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종전의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 대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 등의 지역 시세, 숙소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지원

성과지표	계획	달성	달성률(%)
고용 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수(개)	3,000	3,005	100.2

평가점수

구분			점수
수행도	1. 계획·집행 (40)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20)	20.0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20)	18.0
	2. 정책 성과 (50)	2-1. 사업 실적 (30)	28.7
		2-2. 사업 효과 (20)	18.0
	3. 정책 환류 (10)		10.0
	총점 (100)		94.7
영향력	삶의 질 영향력 수준 (5)		5.0

주요 평가 의견

- 단순하게 인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권, 이탈 등 여러 문제들과 복합되어있는 점을 고려, 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 고용허가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개선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성과지표에 포함함으로써 보완할 여지가 있음.